

## II.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1. 농민운동
2. 노동운동
3. 여성운동
4. 청년운동
5. 학생운동

## II.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1. 농민운동

1930년대 이후 국내에서 전개된 농민운동은 크게 농민조합운동과 천도교의 조선농민사운동, 그리고 기독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농촌사업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운동은 운동의 지향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 운동방법도 역시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는 곧 1930년대 이후 농민운동은 다양한 운동노선과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경향을 보면 이 시기 농민운동은 농민조합운동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sup>1)</sup> 따라서 이 시기 농민운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도교의 조선농민사운동<sup>2)</sup>이나 기독교회의 농촌사업<sup>3)</sup>과 같은 개량적인 농민운동도 살

- 
- 1) 농민조합운동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지수길, 《일제하 농민조합운동연구》(역사비평사, 1993).  
 이준식, 《농촌사회 변동과 농민운동》(민영사, 1993).  
 조성운, 《일제하 영동지방 농민운동연구》(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8).  
 강정숙, 〈일제하 안동지방의 농민운동에 대한 연구〉(《한국 근대 농촌사회와 농민운동》, 열음사, 1988).  
 김점숙, 〈1920~1930년대 영동지역 사회운동〉(《역사와 현실》 9, 1993).
  - 2) 조선농민사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오익제, 〈한국농협운동의 선구-조선농민사와 농민공생조합운동-〉(《한국사상》 5, 1962).  
 조동걸, 《일제하 한국농민운동사》(한길사, 1979).  
 지수길, 〈조선농민사의 단체성격에 관한 연구〉(《역사학보》 106, 1985).  
 박지태, 〈조선농민사의 조직과 활동〉(《한국민족운동사연구》 19, 1998).
  - 3) 기독교회의 농촌사업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민경배, 〈한국기독교의 농촌사회운동〉(《동방학지》 38, 1983).  
 장규식, 〈1920~1930년대 YMCA 농촌사업의 전개와 그 성격〉(《한국기독교와 역사》 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한규무, 《일제하 한국기독교 농촌운동》(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민조합운동을 제외한 조선농민사운동과 기독교회의 농촌사업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민족주의계열’의 농민운동의 실체를 파악함으로써 개량적인 농민운동의 공과를 확인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회주의계열의 농민운동에 대한 평가를 더욱 뚜렷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본고에서는 1930년대 이후의 농민운동을 사회주의계열의 농민조합운동과 개량적인 농민운동으로서 종교계통(민족주의 우파)의 천도교의 조선농민사운동, 기독교회의 농촌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1930년대 조선사회의 사회경제적인 조건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조건이 농민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하에서 여러 형태로 전개되는 농민운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1930년대 중반 이후의 농민운동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서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시기 농민운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시기에는 농민운동을 비롯한 민족운동 혹은 사회운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일제는 1931년의 만주침략, 1937년의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전선을 확대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의 민족운동은 일제의 철저한 탄압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 1) 1930년대 초반 농촌사회의 변화

### (1) 식민지 지배정책과 농촌사회의 변동

1929년 세계적인 규모의 경제공황이 발생하자 제국주의 열강은 심각한 체제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식민지도 많지 않던 후발 제국주의 일본은 이러한 체제의 위기를 쉽게 타개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일본 제국주의는 공황의 피해를 식민지 조선에 전가하는 한편, 군국주의를 채택하여 한반도를 병참기지화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였다. 즉 ‘제2

의 内地' 혹은 '内地의 大陸分身'<sup>4)</sup>으로서의 조선에 1929년 부전강 발전소의 송전을 시초로 개시되었던 소위 '근대산업'은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일전쟁·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면서 군수품 보급기지로서 조선의 역할은 더욱 증대하였다. 그리하여 도로의 개수, 철도의 부설과 같은 교통로를 정비하였으며 연안항로 및 항만을 정비하였다. 특히 조선에 대한 일제의 이와 같은 정책의 변화는 단순히 조선을 '병참기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朝鮮半島 그 자체가 日滿支블력을 연결하는 紐帶인 것으로서 소위 '대륙루트' 그 자체라는 인식에 기반"<sup>5)</sup>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일제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지배정책이 변화하게 된 원인은 첫째, 일본 독점자본은 국내의 과잉자본의 투자지를 필요로 했는데 당시 조선에서는 어떠한 제약도 없이 저렴한 식민지 노동력을 무제한적으로 착취할 수 있었다. 둘째 조선에는 일본 공업의 군사적 재편성을 위한 공업원료와 군수원료 자원이 풍부하였다. 셋째 지리적으로 보아 대륙병참기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지므로 그에 따른 공업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넷째 조선에는 <중요산업통제법>이 적용되지 않아 경제통제에 대한 자본의 도피처로 조선이 인식되었다.<sup>6)</sup> 이러한 결과 일제는 조선에 대한 공업화정책을 추진하였고 그에 따라 1930년 흥남조선질소비료공장이 설립되었다. 이로 인하여 조선의 기존 산업구조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후 1933년부터는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변화를 보였다.<sup>7)</sup> 이와 같은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변화, 즉 광산의 개발, 발전소의 건설, 도로와 철도의 부설, 항만의 개수 등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한반도의 북부지방에 타 지방민의 유입을 조래하여 농촌사회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화'는 농촌과 농민의 철저한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이미 농촌으로부터 구축당한 농민층은 생존을 위하여 한반도의 북부지방과 북만주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4) 全國經濟調查機關聯合會 朝鮮支部 編,《朝鮮經濟年報》(昭和15年版, 改造社), 107쪽.

5) 위와 같음.

6) 小林英夫,〈1930年代 朝鮮'工業化'政策의 展開過程〉(《朝鮮史研究會論文集》3, 1967; 사계절편집부 편,《한국근대경제사연구》, 사계절, 1984에 수록).

7) 허수열,〈일제하 조선의 산업구조〉(《국사관논총》36, 1992), 278쪽.

한편 일제는 ① 조선 내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② 농가경제의 성장으로 반도 경제의 향상을 도모하고, ③ 아울러 제국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목적<sup>8)</sup>으로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산미증식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본 제국주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만성적인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제는 종래의 우량 품종의 보급, 자급 비료의 증시, 경종법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대규모의 관개개선 등 토지개량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일부 지주층을 이용하여 수리조합을 설치하여 쌀을 증산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 보고서는 “토지개량에 관한 주요 사업은 수리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미증식계획은 바로 수리조합의 확충계획이었다.”<sup>9)</sup>고 하였다. 예를 들면 1926년부터 1934년까지 설치된 수리조합은 192개였는데, 그 결과 자작농과 중소지주의 토지 상실과 함께 소작료의 고율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하였고 수리조합반대운동은 이런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sup>10)</sup>

## (2) 농촌사회 내부의 계급관계의 변화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의 결과 조선의 농촌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 중에서 농민들의 현실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라 하면 농민층의 경제생활이 매우 악화되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농민층이 일제와 지주를 상대로 투쟁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1930년대 농민운동은 이러한 농민들의 경제상태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미 대공황기에 조선의 농촌과 농민의 상태는 이전 시기에 비하여 극도

8) 朝鮮總督府 編, 《朝鮮産米増殖計劃要領》(1922), 5쪽.

9) 清水健二郎, 《朝鮮ノ農業ト水利組合ニオケル》(1938), 21쪽.

10) 西條晃, 〈1920年代朝鮮における水利組合反對運動〉(《朝鮮史研究會論文集》8, 1971).

박수현, 〈식민지시대 수리조합반대운동—1920~1934년을 중심으로—〉(《중앙사론》7, 1991).

서승갑, 〈일제하 수리조합 구역내 증수량의 분배와 농민운동—임익·익옥수리조합을 중심으로—〉(《사학연구》41, 한국사학회, 1990).

로 악화되어 있었다. 즉 1930년 현재 준공 상태에 있는 농가호수는 자작농 18%, 자작 겸 소작농 38%, 소작농 68%<sup>11)</sup>로서 당시 농민층은 이미 기아상태에 처해 있었다. 이를 다음의 <표 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조선농회 조사 농가 수지 상황(1932)

(단위 : 원)

종 별	농가총소득	가 계 비	부 족 액
자 작	679.819	701.689	21.870
자 소 작	392.987	473.077	80.090
소 작	297.999	327.607	29.608
평 균	456.935	500.790	43.855

\* 《동아일보》, 1932년 11월 27일 ; 김현숙, <일제하 민간협동조합운동에 관한 연구>(《일제하의 사회운동》, 문학과 지성사, 1987), 203쪽에서 재인용.

위의 <표 1>에서 보면 자작·자작겸 소작·소작을 불문하고 모든 농가는 적자를 내고 있다. 이는 모든 농민층이 확대재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몰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다음의 <표 2>에서 확인하듯이 농민층은 하강분해하고 있는 것이다.

<표 2> 농민층의 분해상황

연 도	지 주	자 작	자작겸소작	소 작
1926	3.8	19.1	32.5	43.3
1928	3.7	18.3	32.0	44.9
1930	3.6	17.6	31.0	46.5
1931	3.6	17.0	29.6	47.4
1932	3.6	16.3	25.3	52.8
1933	—	17.1	24.7	51.9
1934	—	17.0	24.0	51.9

\* 조선농회, 《조선농업발달사》, 발달편, 부록 제3표에서 작성.

11) 朝鮮總督府, 《朝鮮ノ小作慣行》(下) 續編, 120~121쪽.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당시의 한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일본인과 조선인의 비례로 보면 조선인은 매년 지주는 자작으로 화하고 자작은 자작겸 소작으로 화하고 자작겸 소작은 순소작으로 화하는 반면에 일본인은 매년 소작은 자작으로 화하고 자작은 지주로 화하여 매년 농가호수가 증가하는 까닭에 조선인의 생활상태는 나날이 퇴보하여 살 수 없어 男負女戴로 정든 고향을 등지고 북만주로 향하게 되었다(《동아일보》, 1928년 8월 1일).

또한 농산물 가격은 농업공황의 여파로 폭락하였다. 이를 다음의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 주요 농산물의 가격표

	1926년	1931년
맵쌀(1석)	31.59	14.74
콩(1석)	16.95	9.47
고치(10관)	84.23	18.37

\* 朝鮮農會, 《朝鮮農業發達史》發達編(1944), 부록.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민은 각종의 부업품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나 일제는 이미 공동판매, 미가조절 등의 독점가격정책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농민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농민층은 급격하게 빈농층 및 농업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농촌 사회의 경제적 모순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상과 같은 농민층의 분해현상은 전래의 농촌 사회에서의 관습이 붕괴되는 계기가 된다. 즉 전래의 농촌 사회는 지주와 씨족 집단을 비롯한 공동체적인 조직이 지배적이었음에 비하여 이제는 일제와 친일화한 지주층에 대한 농민층의 대결구도가 한층 명확해진 것이다.

### (3) 소작쟁의의 격증

1930년대 초반 조선의 농촌 사회는 지주소작관계를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

하였다. 그리하여 농민층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하였고 이에 따라 농민층의 일제와 지주에 대한 투쟁의식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결과 농민층의 소작쟁의는 급증하였다. 이 시기 소작쟁의의 연도별 증감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소작쟁의의 연도별 증감 현황 (1921~1939년)

연 도	발 생 건 수	동원인원수	사건당인원수
1921	27	2,967	110
1922	24	3,539	148
1923	176	9,060	52
1924	164	6,929	42
1925	11	2,646	241
1926	17	2,118	125
1927	22	3,285	149
1928	30	3,572	119
1929	36	2,620	73
1930	92	10,037	108
1931	57	5,486	96
1932	51	2,910	57
1933	66	2,492	38
1934	106	4,113	39
1935	71	2,795	39
1936	56	3,462	62
1937	24	2,234	93
1938	30	1,338	45
1939	24	969	40
합 계	1,085	72,572	

\* 조선총독부 경무국편, 《최근 조선의 치안상황》 1938년판, 97~99쪽 ; <1940년도 조선내 노동쟁의 및 소작쟁의에 관한 조사> (《사상회보》 22, 1940), 14~15쪽 ; 지수걸, 《일제하 농민조합운동연구》(역사비평사, 1993), 44쪽에서 재인용.

이를 다시 원인별로 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소작쟁의의 원인별 비교표

(1920~1933년)

연도 \ 원인	소작권의 취소 및 이동	소작료 증액반대	기 타	계
1920	1	6	8	15
1921	4	9	14	27
1922	8	5	11	24
1923	117	30	29	176
1924	126	22	16	164
1925	1	5	5	11
1926	4	4	9	17
1927	11	1	10	22
1928	21	3	6	30
1929	15	7	14	36
1930	29	42	22	93
1931	17	27	13	57
1932	26	8	17	51
1933	36	18	12	66
계	416	187	186	789

\* 朝鮮總督府警務局, 《朝鮮の治安狀況》(1933년판), 108쪽; 並木眞人 외 엮음,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거름, 1984)에 수록.

위의 〈표 4〉와 〈표 5〉를 통해 볼 때 1930년을 고비로 소작쟁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원인은 주로 소작권의 이동과 소작료의 인상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농민층의 요구는 그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농민층의 투쟁은 자연발생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그리하여 일제의 분석에서도 쟁의의 수단이 종래(1920년대 중반 경까지)에는 대개 온건했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 경부터는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과 함께 사회주의자들이 각지에서 농민단체를 설치하여 이를 좌익적으로 지도·조종하고 쟁의에 관여하여 계급의식을 선동하므로 쟁의도 점차 첨예화하기”<sup>12)</sup>

12) 朝鮮總督府 警務局, 《朝鮮の治安狀況》(1933), 105쪽(並木眞人 외 엮음,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에 소수).

에 이르렀다. 이는 사회주의가 농민운동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사회주의가 농민운동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1923~1924년 경부터라 할 수 있다. 3·1운동 이후 조직되기 시작한 청년단체는 1920년 251개, 1921년 446개, 1922년 488개로 급증하였고, 이들 단체는 실력양성론을 기반으로 하였다. 그러나 1923년 무렵에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1924년 무렵에는 사회주의가 조직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1923년에는 청년단체의 수가 549개, 1924년에는 702개로 급증하였다.<sup>13)</sup> 예를 들어 단천의 하자회, 영흥의 삭풍회, 정평의 제로회, 흥원의 이럿타회, 양양의 양양신청년동맹, 고성 of 변성청년회 등 각지에서 지역사회의 운동을 주도하던 청년단체들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1923~1924년 경에 청년단체의 수가 급증한 것은 조선청년총동맹의 조직과 관련이 깊다. 서울청년회와 신흥청년동맹 등 청년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던 조직들이 지방에 자신의 세력을 부식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청년단체가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지방에 조직된 청년단체들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결국 지방이 농촌 사회인 까닭에 이들은 농촌 청년대중을 상대로 활동을 전개하였으므로 농촌 사회와 농민운동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농촌 사회와 농민운동에 대하여 지방의 청년단체들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농민운동에도 사회주의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sup>14)</sup>

## 2) 농민조합운동과 개량적 농민운동의 전개

### (1) 농민조합운동

일제하 농민운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는 1920년대 초반이었다.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가 조직되고 1924년에는 조선노동총동맹이 조직되었다. 1925년에

13) 朝鮮總督府 警務局, 〈各種 結社果年 盛衰表〉(《朝鮮の治安狀況》, 1930), 202쪽.

14) 예를 들어 양양지역의 경우에는 1924년 조직된 양양신청년동맹의 지도자인 오일영·김대봉·최용대의 활동과 농민운동의 활동이 매우 관련이 깊게 나타난다. 이는 양양지역뿐만 아니라 농민조합이 조직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조성운, 〈일제하 양양지역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8, 1998) 참조.

는 화요회계열을 중심으로 조선공산당이 조직되었고, 1927년에는 조선노동총동맹이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으로 분립되어 노동운동의 전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소한 1922년 조선노동공제회가 <소작인이여 단결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할 때까지 노동문제와 농민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였다. 즉 1920년대 중반까지 무산자와 농민층에 대한 엄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아 ‘무산’이라는 개념은 농민에게도 무비판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위에서 본 <소작인이여 단결하라>라는 성명을 조선노동공제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한편 1920년대 초반에는 전국 각지에서 소작인조합·소작인상조회 등 소작인단체가 등장하였고 1926년 무안농민연합회가 무안농민조합으로 변경하면서 농민조합이 탄생하였다. 이후 농민조합은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농민층의 일상이익을 옹호, 획득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성과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930년대 초반에 합법적인 농민조합이 이른바 혁명적 농민조합으로 전화되고 있는 것이다.

1930년대 농민조합운동<sup>15)</sup>이 전개되었던 지역은 80개의 군·도 지역으로 추정된다.<sup>16)</sup> 이는 전국 220개의 군·도 중 약 36%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지역적으로는 주로 함경도·강원도·경상도 등 주로 한반도의 동쪽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평안도·황해도·경기도 등의 서쪽지방에서는 그 활동이 미미했다. 이러한 지역적인 분포는 사회주의의 전파경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반도의 동쪽지방은 일본의 오사카(大阪)로부터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까지 이르는 국제항로가 개설되어 사회주의가 쉽게 전파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일제의 병참기지화정책이 추진되면서 노동자층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형성된 지역이기도 하였다. 또한 함경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

15) 농민조합은 1926년 무안농민연합회가 무안농민조합으로 개편된 이후 전국 각지에서 조직되었다. 그리고 1920년대 말 무렵부터 이른바 ‘혁명적’으로 전화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 시기 이후의 농민조합운동을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이라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혁명적’으로 전화한 이후에도 농민조합의 활동이 이전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혁명적’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고 ‘농민조합운동’이라 칭하도록 한다.

16) 지수길, 앞의 책(1993), 167쪽.

하는 지역이었으므로 사회주의가 비교적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이리하여 한반도의 동쪽지방을 중심으로 농민조합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다. 특히 1928년 코민테른의 <12월테제>는 농민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즉 <12월테제> 이후 기존의 운동조직을 계급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시기는 대략 1930년 말이었다. 이 시기는 청년동맹과 신간회 등 합법적인 단체들을 해소하고 반합법적이고 계급적인 대중조직을 건설하려는 운동노선이 관철되어 각 지역에서 농민조합과 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 따라서 각 지역 단위로 조직되어 있던 계급·계층조직은 농민조합의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어 농민조합은 명실공히 지역 단위의 운동 지도부가 되었다.<sup>17)</sup>

한편 1930년대 초반에는 합법적 농조가 혁명적으로 전화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농조가 신설되는 지역도 있었다. 합법농조→혁명적 농조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농조로는 양양농민조합이 있다. 양양농민조합이 혁명적으로 전환된 시기는 1931년 3월의 제5회 정기대회라 생각된다. 이 대회에서 채택된 슬로건이 혁명적 농민조합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sup>18)</sup> 또한 이 시기 양양농민조합의 造山支部 제4년 제1회 대회에서 행한 최용복과 최연집의 연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sup>19)</sup>

- ① 우리들은 일체의 계급적 노력을 총집중시켜 계급운동을 확대,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규율적인 전술하에서 실천적 운동을 개시하여 투쟁적으로 조직하

17) 지수길, 위의 책 참조.  
이준식, 앞의 책(1993).

18) 제5회 정기대회에서 채택된 구호는 다음과 같다(高等法院檢事局 思想部, <襄陽農民組合事件判決文>, 《思想月報》4-6).

1. 일체의 채무계약의 무효를 주장한다.

1. 잡세를 철폐하라.

1. 토지는 농민(에게)

1. 노동자의 단결을 강고히 하자.

1.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철쇄이며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사회이다.

1. 현계급(단계)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전취과정에 있다.

1. 만국의 무산자여 단결하라.

19) 高等法院檢事局 思想部, <襄陽農民組合事件判決文> (《思想月報》4-6).

고, 산업별 조합을 조직하여 농촌 청소년은 농민조합의 청소년부로, 노동 청소년은 노동청소년부로 전파시켜 노동청소년의 독자적인 의식과 ××적(혁명의 의미) 계급투쟁을 지도, 전개시켜 관념적 운동을 배제 ….

- ② 현하 조선의 노동조합은 천도교도로 조직된 조선농민사와 같은 개량주의 즉 당면 이익인 소작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무산계급의 확대, 강화와 계급적 농민운동은 ××(혁명)적 진출에 ××하므로 우리들은 그들의 ××(정체)를 무산계급, 농민 대중에게 폭로하고 우리들에게는 농민계급·빈민·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노총·농촌(농민)동맹이 있으므로 그들 반동단체의 박멸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 제안하고 전 조선농민조합에 경고문을 발송하고 전국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농민조합 본부에 건의할 것.

이외에도 대부분의 합법적 농민조합이 혁명적으로 전환하였거나 수진농민조합<sup>20)</sup>과 같이 그 과정에서 일제에 검거되었다. 일제의 분석에 따르면 농민조합이 혁명적으로 전환되는 것은 대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의 관련자, 사회운동의 방향전환에 영향을 받은 지방의 토박이 공산주의자, 기존의 합법적 농민조합운동의 주체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한다.<sup>21)</sup> 그러나 일제의 이와 같은 유형구분은 유효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 농민조합의 활동을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 판단할 만큼 그 활동이 단순한 것이 아니었으며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조선공산당의 재건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sup>22)</sup>

이와 같이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민조합은 혁명적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 시기 농민조합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빈농우위의 원칙’, ‘투쟁을 통한 조직관’, ‘계급·계층별 부서의 설치’라 할 수 있다. ‘빈농우위의 원칙’이란 “종래 농민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지주나 부농층을 대신하여 빈농층이나 노동자계급이 농민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나아가 이들 새로운 지도층이 빈농적 이해관계(궁극적으로는 토지혁명)를 중심으로 농민대중

20) 수진농민조합에 대해서는 조성운, <日帝下 水原地域の 農民組合運動>(《東國 歷史教育》5, 1995) 참조.

21) 朝鮮總督府 警務局 編,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1933년판), 47~48쪽.

22) 조성운, 앞의 책(1998), 183쪽.

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농민들을 조직하고 투쟁한다는 원칙”<sup>23)</sup>이다. 일제시기 명천농민조합에서 발표한 한 문건에 따르면 부농층에서는 지도자를 선출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sup>24)</sup> 이러한 ‘빈농우위의 원칙’은 대부분의 농조가 이를 강령 또는 투쟁방침 등에 명시하였다. 즉 단천농조는 단천농민동맹을 혁명적으로 전환하면서 “순무산농민 혹은 최하층 빈농을 조직의 본위”<sup>25)</sup>로 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삼척지역의 핵심적인 활동가인 심부윤이 작성한 〈운동계획서〉에서도 “우선 빈농층의 참된 투쟁분자만을 선출하여 계급적으로 교양시켜서 농민조합의 좌익 프락션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sup>26)</sup>고 하였다. 또한 전남운동협의회 역시 “농민운동을 노동운동의 지도하에 두고 완전한 블록을 결성하도록 할 것. 농민운동은 빈농·소농·중농의 성질에 의해 각기 지도방침을 달리하되 농민운동의 중심은 빈농으로 할 것”<sup>27)</sup>을 결정하였다. 울진농민조합의 〈창립선언문〉에서도 “울진에 산재한 빈농민 제군”, 혹은 “혁명적 빈농민 제군”이라 하였다.<sup>28)</sup> 김해농민조합은 청년부를 “빈농을 망라한 조직”<sup>29)</sup>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빈농우위의 원칙’은 각 단위 농조에서 대부분 채택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sup>30)</sup>

그러나 농조운동의 전개 과정에 이 원칙이 명확히 지켜졌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영동지방의 농민운동을 분석한 한 연구<sup>31)</sup>에서는 농민조합운동의 지도층의 성격분석을 통하여 농조운동의 주체들이 ‘빈농우위의 원칙’을 선언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2)</sup> 이

23) 이준식, 〈세계대공황기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의 계급·계층적 성격〉(《역사와 현실》 11), 155쪽.

24) 농조[명천]좌익출판부, 〈농민조합 재건운동과 농민문제〉(신주백 편저,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론연구》 I, 새길, 1989), 266쪽.

25) 咸興地方法院, 〈端川農民組合協議會事件〉(《思想月報》 3-8), 21~22쪽.

26) 沈富潤, 〈運動計劃書〉(三陟警察署, 《重要犯罪報告》, 江保司 제357호).

27) 《조선일보》, 1931년 3월 20일.

28) 〈蔚珍農民組合創立宣言文〉(蔚珍警察署, 《重要犯罪報告》, 江保司 제393호).

29) 《조선일보》, 1931년 3월 20일.

30) 이준식, 앞의 글.

지수걸, 앞의 책.

31) 조성운, 앞의 글 참조.

32) 조성운, 위의 글, 170~177쪽.

에 따르면 운동의 지도층은 대부분 부농 혹은 지주출신이었다는 것이다. 이를 <표 6>에서 알 수 있다.

<표 6> 영동지방 농민조합의 지도층 일람표

통천	오계윤(고저사립통명학교 졸업), 박재순(중등학교1년 중퇴, 휘문고보 3년 중퇴)
고성	황창갑(함흥고보 졸업)
강릉	강익선(강릉농업학교, 수원농림학교), 강덕선(강릉농업학교 중퇴), 권인갑(화북대학 중퇴), 조규필, 최선규
삼척	정건화(배재고보 중퇴), 심부윤(부산상업학교 중퇴, 평양숭신학교 중퇴), 김덕환(서당, 보통학교), 황운대(서당, 제동학교)
양양	김병환, 오용영, 최우집, 김동기, 강환식(강릉농업학교, 중등학교), 추교철
울진	이우정(중앙고보 중퇴), 윤두현(서당), 주진황(소학교), 주맹석(제동학교), 전영경(서당), 남활성(서당, 제동학교), 진기열(이리농업학교 중퇴), 최재소(서당, 보통학교), 최학소(중등고보 중퇴), 남활기(서당), 황택용

\* 조성운, 《일제하 영동지방 농민운동연구》(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8), 170쪽.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농조운동의 지도층이 아닌 일반구성원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운동에 참여했는가 하는 점이다. 운동의 지도층이 사회주의라는 사상을 토대로 운동을 전개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구성원들도 사회주의라는 사상을 토대로 운동을 전개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운동의 지도층과 일반 구성원 사이에는 사상적인 간극이 존재했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울진지역에서는 농민조합운동이 일제에 검거된 이후 1941년 暢幽契가 조직되어 지역사회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창유계에 참여했던 주진옥·임시현·남경량·남원수·최학소·전원강·남석순 등은 울진농민조합사건에 관련되어 일제에 검거되었던 인물들이었다. 이들 중 최학소는 사회주의자로 보이며 울진농조의 지도부에 있었던 인물이었고, 나머지 인물들은 일반 구성원이었다. 그런데 창유계<sup>33)</sup>는 남원수를 중경임시정부에 파견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중경임정과 조직적인 관계를

33) 창유계사건에 대해서는 朱禮得, 《抗日鬪爭虐殺事件真相》(手稿本), 참조.

맺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창유계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의 단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이 시기에 전개된 농민조합운동의 지도층과 일반 구성원 사이에는 사상적인 간극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산경찰서 습격사건<sup>34)</sup>의 주동자 중의 한 사람인 金外得의 증언도 참고가 된다. 김외득은 자신의 “양산경찰서의 습격은 (양산농민조합)소년부의 金章浩와 나, 둘이서 주동하였습니다. … 다만 장호는 金龍浩의 동생이므로 지시를 받았을지도 모르나 나는 없습니다”<sup>35)</sup>고 하였다. 사회주의자였던 김장호의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용호와 함께 양산경찰서를 습격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지도부와 일반 구성원 사이에 사상적인 간극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1930년대 농민조합의 활동을 보도록 하자. 이 시기 농민조합의 활동은 ① 합법농조의 혁명적 농조로의 전환을 위한 투쟁시기(1930~1931), ② 혁명적 농조의 재건설기(1932~1937), ③ 인민전선전술의 수용 이후의 농민운동기(1937~)로 구분할 수 있다.<sup>36)</sup> ①의 시기에는 우선 합법적 농조의 혁명적 전환이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토지혁명이나 노농소비에트의 건설 등 혁명적인 구호가 표방되었다. 그리고 경제투쟁 역시 단순히 일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를 정치투쟁과 목적의식적으로 결합시키려는 노력도 있었다. 더욱이 투쟁의 방법에서도 비합법투쟁을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조선농민사나 전 조선농민사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을 강조하였다. ②의 시기에서는 ①의 시기에서 나타난 조직상의 문제점, 즉 운동의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아래에서 위로의 조직방침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야학·독서회 등을 조직하여 활동하였으며, 더 나아가 일제의 농촌진흥회나 관변청년단체에 혁명적 반대파를 조직하여 침투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삼척지역에서는 농촌진흥회·소비조합·명덕청년회 등의 관변단체에 프락션을 구축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양산농조가 수행한 양산경찰서

34) 양산농민조합사건에 대해서는 조성운, 〈日帝下 慶南 梁山地域의 革命的 農民組合運動〉(《芝邨金甲周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 1994) 참조.

35) 〈金外得과의 면담〉, 1991년 8월 19일, 자택.

36) 지수길, 앞의 책, 398~401쪽.



습격사건, 삼척농조가 수행한 근덕면사무소 습격사건 등과 같이 대중폭동을 통한 농민대중의 조직화사업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삼척지역에서는 운동자금의 확보를 위한 금광습격사건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농민조합은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전래의 공동체적인 지배질서를 운동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양양의 조산리, 삼척의 쇠운리, 울진의 정림리 등은 각기 강릉 최씨, 연일 정씨, 의령 남씨의 집성촌이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의 운동의 중심인물은 지주 혹은 종손들로서 자신들의 출신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다. 한편 이러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각 지역에서는 농민출신의 토박이 활동가들이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지역 사회에서 농민층이 운동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이 지역 사회의 중심적인 인물로 성장하기 이전에 이미 일제는 중일전쟁·태평양전쟁을 일으켜 조선을 전시체제에 편입시킴으로써 이들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였다.

한편 1937년 중일전쟁을 즈음하여 인민전선전술방침이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인민전선전술은 1937년 코민테른 제7회 대회에서 채택된 운동노선으로써 지금까지의 계급대 계급전술을 폐기하고 일제에 반대하는 모든 반제국주의세력을 망라하여 전민족적인 역량을 반제국주의투쟁의 전선으로 집중하여 민족해방운동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이 노선은 李載裕·李觀述·朴憲永 등의 경성그룹, 李舟河 등의 원산그룹, 한봉직 등의 정평그룹, 최소복 등의 왜관그룹이 이 방침을 수용했으나 농민운동의 전국적인 지도기관이 부재하였으므로 이 방침은 농민조합운동의 노선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 (2) 개량적 농민운동

### 가. 조선농민사운동

朝鮮農民社는 1925년 8월 17일 崔麟이 이끌던 천도교 신파의 천도교청년당 임시총회에서 소년 및 농민을 계몽하여 집단생활의식을 훈련하기 위하여 소년·농민단체를 조직<sup>37)</sup>하기로 한 결정에 의하여 1925년 10월 29일 창립<sup>38)</sup>

37) 趙基堃, 《天道敎靑年黨小史》(1935), 40쪽(《東學思想資料集》3, 1979에 소수).

38) 朴思稷, 〈朝鮮農民社 創立 第5回 紀念을 마즈면서〉(《農民》1-6, 1930), 2쪽.

된 일제시기 대표적인 개량주의적 농민단체였다. 이는 천도교 신파가 몰락하는 농민들을 도움으로써 천도교에서 이탈하는 교인들을 지키고 또 한편으로는 자치의 실현을 염두에 두고 천도교청년당 산하에 농민조직을 만들어 이를 통하여 농민을 견인하고<sup>39)</sup> 각계 각층의 비천도교인을 망라해서 다양한 세력을 확보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sup>40)</sup> 창립 당시 중앙간부 13명 중 천도교인은 金起田·李敦化·趙起栞·朴思稷·李晟煥·崔斗善 등 6명이었으며 나머지는 金俊淵 등 기자 5명, 기타 2명이었다.<sup>41)</sup> 이들 중 천도교인들은 천도교에서 전개하였던 신문화운동의 중심적인 인물들이었다.<sup>42)</sup> 이로 보아 조선농민사는 창립 당시부터 천도교의 독자적인 농민운동단체는 아니었다. 그러나 1928년 4월 6일 제1차 조선농민사 전조선대표대회에서 선정된 중앙이사는 천도교계가 21명 중 14명을 차지하여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1929년 4월 조선농민사 제2회 전체대회에서 조선농민사를 천도교청년당 농민부 산하에 두기로 하고 이듬해인 1930년 4월 조선농민사 제3차 전체대회에서 천도교청년당 농민부 산하에 직속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창립 당시부터 조선농민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이성환을 비롯한 비청년당 계열의 인물들은 조선농민사를 탈퇴하여 전조선농민사를 조직하였다.

이와 같이 조직되고 변천되는 과정에서 조선농민사의 활동을 살펴보자. 이를 위하여 우선 조선농민사의 지방부 조직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조선농민사의 지방부 조직은 천도교청년당 지방부 조직이 집중되었던 평안도·황해도·함경도의 북부지방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남부지방의 경우도 천도교청년당이 조직된 지역에 조선농민사 지방부가 조직되고 있다. 또한 천도교청년당의 간부들이 조선농민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들 2개 단체의 조직이 중복되는 지역만 보더라도 59개 지역에 달한다.<sup>43)</sup> 이로 보아 천도교와 조선농민사의 농민운동론은 사실상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농민사의 활동은 천도교의 농민운동론에 의해 지도되었다. 천도교청년당 농

39) 曹圭泰, 《1920年代 天道敎의 文化運動研究》(서강대 박사학위논문, 1998), 160쪽.

40) 지수걸, 〈朝鮮農民社 團體性格에 관한 研究〉(《歷史學報》106), 179쪽.

41) 박지태, 〈朝鮮農民社의 組織과 活動〉(《한국민족운동사연구》19), 282쪽.

42) 천도교의 신문화운동에 대해서는 曹圭泰, 앞의 책 참조.

43) 박지태, 앞의 글, 301쪽.

민부의 활동요향은 ① 문자계몽과 사상계몽으로써 그의 의식적 각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그들을 봉건적 및 근대적인 모든 압박에서 풀어내기에 힘쓸 것, ② 우선 간단한 농민학교, 기타의 교학실시를 통하여 농업기술 및 농업경영 방법의 향상을 촉진할 것, ③ 소비 및 생산조합을 조직하여 농민생활의 당면 이익을 꾀할 것, ④ 경작자로서의 경작권 보장을 얻기에 힘쓸 것 등이었다.<sup>44)</sup> 이를 위해 조선농민사는 농촌계몽운동과 일상이익 획득운동을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선농민사는 창립 초기부터 농민에 대한 계몽활동의 일환으로 농민야학의 설립, 농민강좌의 개설, 농촌순회강연회의 개최, 농민학교 등의 설립을 주장하였다.<sup>45)</sup> 실제로 조선농민사는 317개의 농민야학을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sup>46)</sup> 또한 농민의 교양과 조직적 단결을 목적으로 《朝鮮農民》을 발행하여 농민에 대한 계몽활동에 주력하였다. 그런데 당시 《조선농민》은 조선농민사 뿐만 아니라 농민조합의 교양자료로도 이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울진농민조합의 검거 당시 일제에 압수된 잡지 목록 가운데는 《조선농민》이 들어 있으며,<sup>47)</sup> 삼척농민조합을 조직하기 전 삼척지역 농민운동을 주도하던 三雲修成會에서도 전조선농민사가 발행한 《農民讀本》을 교양자료로 사용했다고 한다.<sup>48)</sup>

다음으로 일상이익 획득운동에 대해 알아보자. 조선농민사의 일상이익 획득운동은 1920년대에는 韓旋部の 활동을 통해서, 1930년대에는 農民共生組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먼저 알선부는 일반농민의 편리와 이익을 꾀하는 동시에 조선농민사의 유지, 발달을 계획<sup>49)</sup>하기 위하여 운영되었다. 그리고 1구

44) 박지태, 위의 글, 303~304쪽.

45) 李晟煥, 〈第2次 全鮮代表大會를 召集하면서－考慮는 慎重히! 執行은 勇敢히－〉(《朝鮮農民》5-3, 1929), 10~13쪽.

46) 《朝鮮農民》3-12(1927), 15~24쪽; 같은 책 4-2·3(1928), 20~21쪽; 같은 책 4-8(1928), 34~41쪽.

47) 조성운, 〈日帝下 江原道 蔚珍地域의 革命的 農民組合運動〉(《素軒南都泳博士古稀紀念史學論叢》, 1993), 813쪽.

48) 〈金永起의 증언〉(1916년 11월 8일생. 동해시 송정동 847. 1998년 10월 11일) 김영기는 삼척군 이도리의 야학에서 교사로서 농촌 아동들을 교육했다고 한다.

49) 〈朝鮮農民社韓旋部附則〉(《朝鮮農民》2-10, 1926).

좌를 20원으로 하여 1명이 최대 100구좌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50)</sup> 이는 곧 일반 농민들이 알선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즉 1구좌 20원의 출자금은 당시 농민들의 생활형편으로는 힘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선부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계층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소유자만이 가능하였다. 이는 조선농민사 알선부의 활동이 중농 이상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선농민사의 사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 해방 직후 북한에서 천도교 청우당원의 성분을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덕천에서는 빈농이 차지하는 비율이 87.1%에 해당하고 있다. 이로 보아 북한지역의 조선농민사원들도 역시 빈농이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알선부의 활동이 중농 이상층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마도 천도교 청년당의 주요 간부들이 중농 혹은 소부르주아지 출신이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sup>51)</sup> 따라서 알선부의 활동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1929년 이후 군농민사 알선부에서 직영의 형태로 각종의 상회를 운영하고 소비조합으로의 확대, 발전을 꾀하였다. 또한 1931년 4월에는 조선농민사 본부의 결의로 기존의 알선부를 농민공생조합으로 변경하면서 군농민사의 알선부도 농민공생조합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 활동이 활발해졌다. 공생조합은 1구좌 1원씩, 1인 50구좌 이하로 출자금을 제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민공생조합원은 납입할 수 있는 출자금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하여 되었다. 이 농민공생조합은 “농민대중의 상호부조를 원리로 한 경제운영체로서 농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해 경제적 당면 이익의 획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sup>52)</sup> 여기에서 경제적 당면이익이란 ① 중간상인에게 이윤의 착취를 받지 않고, ② 현 사회의 경제제도의 결함을 고치려하는 것이었다.<sup>53)</sup> 이리하여 출자금·차입금·의연금·적립금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농촌 일용품을 공동구매하여 분배하거나 판매하는 소비부 사업, 농업창고와

50) 위와 같음.

51) 이에 대해서는 조규태, 앞의 책, 78~86쪽.

52) 승관하, <農民生組合의 理論과 實際를 論함> (《農民》2-7, 1931), 7쪽.

53) 위와 같음.

생산공장을 경영하고 생산물을 위탁 또는 공동판매하는 생산부 사업, 농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신용부 사업, 비싼 농구를 구입하여 공동 사용하는 이용부 사업, 의원·이발소·목욕탕 등을 설치하여 조합원들에게 편의를 주는 위생부 사업을 운영하였다.<sup>54)</sup> 그러나 소비부·생산부·신용부·이용부·위생부의 5개의 부서 중에서 현실적으로 활동이 가능하였던 것은 소비부와 생산부였다. 따라서 농민공생조합은 소비부와 생산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공생조합이 취급한 물품의 종류는 알선부와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았으나 지역별로 단위조합을 운영함으로써 지역간의 차이에 따른 필요한 물품의 구입·판매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sup>55)</sup> 한편 공생조합의 수와 조합원의 수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공생조합의 수 및 조합원의 수

	공생조합 수	조합원 수	출전(《農民》)
1931년 1월	113		3권 1호, 51쪽
1932년 6월	181	27,962	3권 9호, 43쪽
1933년 8월	153	53,100	4권 8호, 42쪽
1933년 9월	180	50,000	4권 10호, 30쪽

\* 김현숙, <일제하 민간협동조합운동에 관한 연구>(《일제하의사회운동》, 문학과 지성사, 1987), 261쪽.

조선농민사는 공동경작계를 조직하여 공동경작을 통해 이상농촌을 건설하고 농민을 구제하고자 하였다.<sup>56)</sup> 이는 군공생조합과 관련이 있었다. 즉 공동경작계는 군공생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었고,<sup>57)</sup> 조합원은

54) 飛田雄一, <朝鮮農民社>(《日帝下の朝鮮農民運動》, 未來社, 1991), 28~29쪽.

55) 박지태, 앞의 글, 293쪽.

56) 金炳淳, <當面問題 ABC>(《農民》 21, 1932), 6쪽.

57) 農民社共同耕作契定款은 <農民新聞>(《農民》 38, 1933), 53쪽. 정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본 계는 ××리동농민사공동경작계라 칭함. 제2조 본 계는 ××리동농민사 경제부 사업으로 사와 사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함. 제3조 본 계는 ××리동농민사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원으로서 조직함. 제4조 본 리동사원으로서 경영하는 공동작업은 모두 원칙으로 본 정관에 기증함. 제5조 본 계는 군농민공생조합에 가입함.

리동농민사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조선농민사에서 공동경작을 처음으로 실시한 시기는 1927·1928년 무렵부터라고 한다.<sup>58)</sup> 공동경작을 실시한 이유는 농업공황으로 농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신용의 결여와 높은 이자율 때문에 은행대출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동경작으로 마련된 자금을 리동농민사 내의 빈농민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리로 대출함으로써 리동농민사 내의 빈농의 삶을 돕는데 있었다.<sup>59)</sup>

#### 나. 기독교 농촌운동

기독교회는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중반 경까지 약 10여 년에 걸쳐 농촌운동을 전개하였다. 기독교회의 농촌운동이 전개된 이유는 사회주의사상의 만연과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운동 때문이었다.<sup>60)</sup> 즉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농촌사회에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기독교의 농민과 농촌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점차 담보 혹은 쇠퇴의 길에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종교적 혹은 사상적으로 사회주의자들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당시 기독교의 개신교 교파로는 장로교·감리교·성결교·침례교·구세군 등이 있었으나 농촌운동을 전개한 교파는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인들로 구성된 YMCA와 YWCA 정도였다.<sup>61)</sup> YMCA는 1923년부터 이미 ‘농촌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YMCA의 총무였던 申興雨는 1923년 겨울 서울 근교의 자마장·부곡리에서 3개월 동안 농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실정·관습·가족·생활·교육·심리 등을 조사하였다. 이어 그는 ‘농촌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중 사회적 단결을 위한 농촌사업에 대해 “청년들이 작

58) 夜星淑, 〈後天生活의 物的 基礎는 共作契〉(《新人間》 79, 1934), 14쪽.

59) 조규태, 앞의 책, 181쪽.

60)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이 참고된다.

강인규, 〈1920年代 反基督教運動을 통해 본 基督教〉(《韓國基督教史研究》 9, 1986).

이준식, 〈일제 침략기 기독교 지식인의 대외인식과 반기독교운동에 관한 연구〉(《역사와 현실》 10, 1993).

김권정, 〈일제하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운동에 관한 연구〉(《송실사학》 10, 1997).

한규무, 앞의 책.

61) 한규무, 위의 책, 17쪽.

성하여 가지고 야학도 조직하고 공동으로 사고 팔 수 있는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공제조합도 만들어서 자기네 문제를 자기네 공동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고 향상시키게 하는 운동”<sup>62)</sup>이라 설명하였다. 이후 YMCA는 국제 YMCA의 협조를 얻어 농촌사업에 착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25년 2월에 농촌부를 설치하였다. 농촌부 설치 이후 YMCA는 문맹퇴치활동, 언론과 출판을 통한 농민계몽활동, 농사강습회의 개최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외에도 기독교회는 농민단체의 조직과 협동조합의 운영, 공동경작의 보급, 농업학교와 농촌지도자 양성기관의 설립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외에도 장로교회 농촌부와 감리교회의 농촌부가 1928년 8월 설치되는 등 교단별로도 농촌부가 설치되어 농촌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기독교회의 문맹퇴치활동은 기독교 농촌운동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사업이었다. 이 시기 기독교가 운영하거나 관계했던 교육기관은 야학·서당·글방·강습소·하기 아동성경학교 등이었다. 이는 별다른 투자 없이 교회건물을 사용할 수 있었고 교인 중에서 교사 선임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28년에는 개신교회가 경영하던 야학의 수가 808개에 이르게 되었다.<sup>63)</sup> 특이한 점은 기독교에서 운영하던 야학은 여자야학의 수가 일반 야학의 수보다 많았다는 점이다.<sup>64)</sup> 그리고 교육의 내용은 성경·한글·일어·산술·주산·작문·한문 등이었으며 김제의 월봉리 교회야학에서는 농사실습도 병행했던 것으로 보아 농사강습도 실시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65)</sup> 한편 YMCA의 경우에는 조선국문·산술·한자·농업·상식적 용어·간이숫자·위생·간이법률·농리 등을<sup>66)</sup> 가르쳤다. 따라서 기독교회의 야학에서 교육한 것은 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었다.

다음으로 1920~1939년간 기독교회에서 간행한 신문·잡지의 수는 약 80여 종에 이른다.<sup>67)</sup> 특히 1929년~1932년 사이에는 이와 같은 출판물이나 단

62)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정음사, 1978), 334쪽.

63) 한규무, 앞의 책, 107쪽, 〈표 3-1〉 참조.

64) 노영택, 〈日帝下の 女子夜學〉(《史學志》 9), 100쪽.

65) 《기독신보》, 1929년 2월 13일.

66) 《청년》, 1925년 4월, 13쪽·1926년 1월, 43쪽·1926년 5월, 43쪽.

67) 이만열, 〈基督教와 出版文化〉(《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410~423쪽에 실린

행본을 통해 덴마크(Denmark)의 농촌에 대한 소개를 중점적으로 하였다. 이는 기독교회가 추구한 농촌사업이 어떠한 성격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이 덴마크의 농촌을 모델로 삼은 이유는 첫째, 조선과 비교해 크게 다를 것이 없던 덴마크가 세계적 이상국이 되었다는 인식이다.<sup>68)</sup> 그리하여 洪秉璇은 덴마크의 성공의 경험을 조선에 적용하고자 국민고등학교의 설립을 꾀하였던 것이다.<sup>69)</sup> 둘째 덴마크는 루터교가 국교였던 개신교 국가였다. 이 점은 개신교신자들의 호감을 사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이들은 1928년 예루살렘 국제선교협의회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덴마크의 농촌을 시찰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독교회에서 전개한 활동으로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활동이다. 협동조합 가운데서도 특히 기독교회가 중요시했던 것은 산업신용조합이다. 이들이 신용조합에 보다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당시 기독교회가 조선의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당시의 기독교 지식인인 신흥우는 농촌 피폐의 원인으로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제도 속에서 농공간의 부등가교환, 교환과정에 매개한 상업이윤의 착취, 고리대 자본의 착취, 소작인의 소작료로 인한 이중의 부담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합조직의 전제조건인 협동과 신용만 있으면 농촌은 회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70)</sup> 이리하여 1929년 장로교 총회 농촌부에서 공동구매,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중앙신용조합을 설립하고 각 노회<sup>71)</sup>와 각 교회에까지 신용조합의 조직을 유도하였다.<sup>72)</sup> 이외에도 기독교회가 전개했던 농촌사업에는 소비조합의 조직에 주력한 유재기의 활동, 엽뮈청년회나 먼러청년회 등 청년단체 내에 조직된 농촌부나 산업부의 활동, 농우회·농무회·진흥회 등의 단체에서 전개했던 공동경작 활동 등도 있다. 특히 공동경작활동은 앞

---

일람표.

68) 이순기, 〈朝鮮의 現狀과 覺者の 使命〉(《청년》, 1926), 10쪽.

69) 홍병선, 《정말과 정말농민》, 1~2쪽.

70) 申興雨, 〈物的生活에 우리 要求〉(《청년》, 1926), 7~10쪽.

71) 장로교에서 입법·사법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추적 기관, 감리교의 연회, 성결교회 등의 지방회 기구와 비슷하다. 노회는 같은 지역에 속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데, 한국장로교회에는 지역노회와 이북에서 옮겨온 무지역노회(피난노회)가 있다.

72) 《기독신보》, 1930년 7월 16일, 〈長老敎總會 農村部 發起 中央信用組合〉.



에서 본 천도교의 공생조합의 활동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식민지시기 개량주의적 농민운동의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3) 1930년대 이후 농민운동의 성격

우리는 1930년대 이후의 농민운동을 농민조합운동과 천도교의 조선농민사운동, 기독교회의 농촌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제하 농민운동은 1920년대 초반 소작쟁의를 시작으로 점차 이념적·조직적으로 발전을 하였다. 이 과정은 농민운동의 발전과정이자 동시에 국내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의 발전과정이기도 하였다. 일제하 농민운동은 크게 보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계열의 농민조합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천도교계통의 조선농민사운동이나 기독교계통의 농촌사업 등 개량주의적인 농민운동이다. 이 두 부류의 운동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운동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농민조합운동은 일제의 타도와 함께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개량주의적인 농민운동은 당면의 현실문제 해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코민테른은 <12월테제>와 <9월테제>를 통하여 기존의 운동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운동방향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농민조합운동은 1930년대 초반 청년동맹·신간회 등 합법적인 단체를 해소하고 반합법적이고 계급적인 대중조직을 건설하고자 하는 운동노선이 관철되면서 혁명적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지역 단위로 조직되어 있던 계급·계층조직은 농민조합의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어 농민조합은 명실공히 지역 단위의 운동지도부가 되었다. 그러나 혁명적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농민조합의 활동은 큰 차이가 없었다. 즉 정치투쟁 일변도의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민조합이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은 토지혁명, 노농소비에트 건설, 소비에트 러시아 사수 등 혁명적 강령 또는 슬로건의 표방 여부, 청년부(위원장회)·농업노동자 등 계급·계층별 독자부서의 설치 여부, 혁명적 반대파(농조 내부의 좌익을 중심으로 한 독서회 등 핵심 그룹의 조직)의 결성 여부, 전

조선농민사 및 조선농민사의 박멸 혹은 비판 여부, 신간회 및 청충의 해소 결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sup>73)</sup> 그리고 혁명적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삼립조합·일선행정기관·경찰서·면사무소 등에 대한 폭력행사의 방식으로 운동 방향이 전개되거나 그 과정에서 지도부의 분열경향이 있으며, 운동은 빈농적 성격을 띠는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농민조합운동은 좌편향적 성격이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sup>74)</sup>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투쟁을 통해 농민층의 일상이익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농민층에 대중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민족해방이라는 정치적 요구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방침은 운동의 실천과정에서 현실과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운동방침 상으로는 경제투쟁에 기초하여 정치투쟁을 전개할 것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정치투쟁의 기반이 되는 경제투쟁조차도 전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1930년대 이후 일제의 통치정책이 이른바 민족말살정책으로 변하면서 합법공간이 극도로 축소되어 통상적인 민주주의적 요구마저도 부정당했던 시대적 배경 때문이라 할 것이다.

한편 농민조합의 지도부는 대개 지역사회의 전통적인 향반출신들이거나 지주 혹은 부농·엘리트라 불리던 인물들이었다. 그런데 농민조합의 지도부는 ‘빈농우위의 원칙’을 표방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민조합 운동의 주체들이 ‘빈농우위의 원칙’을 ‘선언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빈농우위의 원칙’이 배제하고자 하였던 것은 합법주의적 지도부나 개량주의적인 노선이었지 非貧農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sup>75)</sup> 또한 농민조합은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을 결합하여 투쟁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조선공산당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이들은 기관지 및 출판물을 통하여 또는 독서회·야학 등을 통하여

73) 지수길, 앞의 책, 155~156쪽.

74) 그러나 양양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농민의 일상적인 이익을 옹호·획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표면적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조합원에 대한 교양의 내용은 혁명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이로 보아 양양지역의 활동가들은 이웃인 강릉·통천·삼척·울진지역의 사례를 통해 운동을 보다 유연하게 전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5) 이준식, <세계대공황기 혁명적 농민조합의 계급·계층적 성격>(한국역사연구회 편, 《역사와 현실》 11, 역사비평사, 1994), 138쪽.

농민층에 대한 교양활동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기념일투쟁을 통해 농민층을 동원하고 농민조합을 조직하고자 하였다. 이는 곧 ‘투쟁을 통한 조직방침’을 실천에 옮긴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천도교와 기독교회가 중심이 되어 실시한 개량적 농민운동은 당면의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운동을 전개하였다. 즉 천도교의 조선농민사운동과 기독교회의 농촌사업은 3·1운동과 그 실천과정에서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을 주도하면서 절감한 항일운동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채택된 점에서 공통적인 성격이 있다.

먼저 조선농민사는 천도교의 전위조직인 천도교 청년당과 사회운동을 전개하던 인물들이 조직한 농민운동단체였다. 이후 성장과정에서 조선농민사는 천도교 청년당의 인적·물적 지원하에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1930년 전 조선대표대회를 통하여 이를 합법적인 관계로 확립하였다. 이를 통하여 조선농민사는 조선의 독립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선 내에서 독립운동을 직접 전개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자치운동을 당면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리하여 조선농민사는 농민자주촌의 건설을 통해 자치운동을 실천하였다. 이는 곧 농민의 일상이익의 획득운동이라는 조선농민사의 운동논리로 이어진다. 즉 조선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민을 하나로 결집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농민의 일상이익을 옹호·획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하여 조선농민사는 야학·강연회·출판물 등을 통한 농민대중의 교양활동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알선부와 공생조합을 통해 이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러한 운동노선은 천도교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회의 농촌사업에서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회 역시 농민층의 일상이익을 옹호, 획득하는 것을 운동의 주요한 노선으로 하였다. 즉 기독교회의 농촌사업은 농사개량·부업장려·협동조합의 설립·관련 서적의 출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야학·서당·하기 아동성경학교 등을 통하여 문맹퇴치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천도교의 조선농민사의 활동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는 곧 천도교와 기독교회가 추구했던 농민운동의 목표가 당면의 일상이익을 옹호하고 획득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즉 민족의 해방이라는 민족적 과제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조선농민사와 기독교회의 농촌사업이 개량적인 운동으로 자리매김되기도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일제가 1930년대 초반 실시하는 농촌진흥운동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며 실제로 농촌진흥운동에 순응한 경우도 있다.

다른 한편 각지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던 개량적인 농민운동을 포함하여 농민운동은 1930년대 중반 이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일제의 대륙침략이 본격화되고 민족말살정책이 시행되는 전시체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다만 이 시기에는 일제의 농산물 강제공출, 노동력의 강제 동원, 군수 농작물의 강제 재배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로 보아 표면적으로 이 시기는 농민운동의 침체기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해방 직전의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농민운동의 역량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형태로 생존했는가 혹은 해방 이후 단시간 내에 각 지역에서 인민위원회와 농민조합과 같은 조직이 어떻게 조직될 수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시기의 농촌사회와 농민운동의 역량 및 조직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趙成雲〉

## 2. 노동운동

일제하 노동운동에서 1930년대는 이전 시기와는 다른 몇 가지 발전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에서 보면 1920년대에 직업별 노동조합이 우세했다고 한다면 이 시기 노동조합 조직운동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건설이 주류를 이루었다. 합법과 비합법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1920년대에 조성되었던 이른바 문화정치 아래에서는 일정 범위 안에서 합법성을 부여받은 공개적인 노동조합들이 주로 조직되고 활동하였으나, 이 시기로 들어오면 합법 영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식민지의 권력이나 기업의 요구와 타협할 수밖에

에 없었던 반면에 대부분의 노동조합 조직은 비합법의 비밀결사 형태로 지하에서 활동하였다.

투쟁 형태라는 점에서 보면 대중적 차원에서라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운동이 단순한 파업의 형태를 넘어서서 종종 시위나 폭력의 양상을 띠었던 것도 이 시기 노동운동의 또 다른 특성이었다. 1920년대 전반기의 노동운동에서 예컨대 기업주의 온정에 호소한다든지, 식민권력의 중재에 의존한다든지 하는 현상과 비교한다면 이러한 양상 역시 커다란 변화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주류 노동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념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노동운동에서 민족차별에 반대한다거나 일본제국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구호와 투쟁들이 보다 현저하고 또 빈번하게 나타났다. 즉 1930년대의 노동운동은 이전 시기에 비해 보다 심화되고 고조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1945년의 해방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성격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비록 형태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흔히 인식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1940년대 이후 전시동원체제 아래에서도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제기하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던 것이다.

이 글은 먼저 노동조합 조직의 변화를 산업별 노동조합과 혁명적 노동운동의 두 가지로 제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이어서 살펴볼 개량주의와 어용노동조합은 혁명적 노동조합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서로 대치되는 흐름을 이루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 시기 노동운동의 또 다른 단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의 대중적 파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의 전개에 대해서는 1937~1938년을 경계로 본격적인 전시동원체제로 이행하는 시기 이전과 이후로 각각 나누어 그 전개 양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 1) 노동조합의 조직과 산업별 노조로의 이행

1920년대 후반기 이후 노동운동에서 나타났던 중요한 흐름의 하나는 기존의 직업별 노조를 산업별 노조로 바꾸거나, 새로이 산업에 따라 노동조합들

을 조직하려는 시도였다. 세계 노동운동사에서 나타났던 노동조합 조직 발전의 일반적 경향이 직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이행하여 왔듯이, 일제하 노동조합 조직도 짧은 시기에 압축적으로 이러한 발전과정을 경험하였다. 산업별 노조로의 조직문제는 일찍이 1927년 8월 조선노동총동맹이 노동과 농민의 양 동맹으로 분리하기로 결정한 방침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시되었다. 그것을 조직형태로 구체화한 것은 1928년 6월 서울의 인쇄출판업 노동자들이었는데, 이후 1930~1931년으로 넘어가면서 전국 각지 노동단체들을 통해 시도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산업별 노조로의 조직방침이 어느 곳에서나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대도시와 지방의 중소도시, 그리고 업종과 산업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지니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산업별 노조로의 이행은 대도시에서 먼저 추진되어 지방의 중소도시들로 과급되어 갔으며, 같은 지역에서도 인쇄출판업과 같이 선진적 산업부문이 주도하고 다른 부문이 따라가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지방의 중소도시, 또는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영세 업종에서와 같이 산업별 조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지역내의 공장들을 한데 묶은 조직방식이 고안되었다. 그리고 이 경우의 노동조합은 대부분 그 지역의 이름 다음에 합동노조라는 명칭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단순히 지역의 명칭만을 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산업별 노조로의 이행이 노동조합의 조직에 가져온 주요한 변화들 중에서 가장 먼저 들어야 할 것은 이전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강령이나 구호보다는 생산현장에 보다 접근하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강령이나 목적들을 노동조합들이 표방하게 되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예컨대 1920년대 노동조합들이 노동계급의 해방이나 계급의식의 고양과 같이 상대적으로 급진적이고 관념적인 목표를 추구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보다 실제적이고 생산현장에 적합한 요구들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 시기 노동조합들이 순수한 경제투쟁만을 지향했던 것은 물론 아니었다. 민족차별에 대한 반대나 8시간 노동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유년노동금지과 부인노동자의 출산에 대한 임금지급, 단결권 등의 획득,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획득에서

보듯이 이전 시기와 비슷하게 정치투쟁적 성격을 지니는 요구들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산업별 노조로의 이행에 따라 나타난 또다른 현상으로는 노동운동의 전략과 조직방침이 변화하면서 공장과 기업 중심의 운동을 지향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920년대의 노동운동이 공장보다는 흔히 가두에서 전개되었다고 평가되어 왔듯이, 노동조합이 노동자와 공장을 중심으로 활동하지 못했다는 반성은 산업별 조직운동이 제기된 배경의 하나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별 노조에서는 공장반을 조직하여 노동조합의 활동과 조직의 중심을 공장과 기업으로 옮기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내의 각 공장에 공장반을 두어 노동조합의 분회를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내에 산업에 따른 노조의 지회를 설치한 다음, 이를 전국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이 산업별 노조의 조직방침이었다.

산업별 노조로의 재편과정에서 나타났던 또다른 조직적 변화로는 노동조합들에서 부인부나 청소년부·실업부 등의 전문부를 설치하여, 미숙련 노동자의 대다수를 이루는 여성이나 청년·소년 혹은 실업자들을 단일 조직으로 묶기 위한 조직적 차원에서 노력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여성이나 소년·청년·실업자 등을 포괄하는 전문 부서는 1929년에 들어오면서 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한 주요 노동조합들에서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부나 부인부·실업부와 같은 부서의 설치는 1920년대 후반의 세계공황과 1930년대의 군수산업 중심의 ‘중화학공업화’를 배경으로 부인노동자와 유소년노동자가 주축이 된 미숙련노동자 및 실업노동자의 수가 증대되었던 상황에서 이들 노동자 층을 포괄하는 단일한 조직을 결성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이 시기 제기된 산업별 노동조합 건설이 원래 독점 단계의 자본주의에서 생산기술의 고도화와 대규모 생산의 일반화에 따라 공장내의 분업과 아울러 사회적 분업이 진전되면서 미숙련·반숙련 노동자가 생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동일 산업부문에서 직능이나 직업의 특수성에 따른 이해관계의 상이성을 극복하여 동일 산업부문의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조합으로

조직함으로써 자본가에 대한 효율적인 투쟁을 전개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면, 식민지 조선에서도 일정한 형태로 이러한 상황이 출현하고 있었다. 즉 1929년 세계공황을 계기로 1930년대 이후 일본 독점자본이 대거 조선에 진출하였으며, 특히 군수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양적·질적 성장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이와 아울러 1930년대 이후 식민지에서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이른바 산업합리화 정책의 진전으로 숙련노동의 쇠퇴와 여성 및 아동노동자가 주력을 이루는 미숙련 노동자의 증대가 일정 정도 진행되었으며, 실업 노동자의 수 또한 급격하게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층 내부에서 다양하게 분화된 이들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환으로 전문부서들이 설치되었던 것이다.

산업별 노조로의 이행에 따른 조직상의 변화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의 주도에 의해 추진되었던 산업별 노조운동이 과연 당시의 노동자 상황과 노동운동의 발전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한 방식이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식민지에서 공황의 진전과 자본주의의 일정한 발전에 따른 미숙련노동자와 실업노동자들의 증대 등은 산업별 노조 건설운동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조건으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식민지 상황에서 자본주의 발전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운동노선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아직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930년대 후반 이후에 군수산업 부문과 관련되어 발전하기 시작한 일부 산업을 제외한다면 이 시기 산업 부문이 산업별 노조의 당위성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가에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자면 이 시기 산업별 노조로의 이행은 사회경제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이유가 훨씬 강했다. 원래 산업별 노조는 파업과 함께 등장했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은 산업별 노조와 함께 생겨난 것이며, 나아가서 산업별 노조의 발전에는 정치사회적 전망과의 결합이 중요시된다는 점에서,<sup>1)</sup> 당시 노동운동가들은 경제적 근거들 못지 않게 정치적 이유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는 자신의 지

1) 한국사회연구소, 《노동조합조직연구》(백산서당, 1989), 19·49~50쪽.



지세력이나 동조계급을 확보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 시기의 노동운동가들은 흔히 코민테른(Comintern) 등의 국제적 원조나 지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일제하의 노동운동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혁명운동의 한 고리로 전개되었으며 산업별 노동운동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제기된 측면이 강했다.

이에 따라 이 시기의 산업별 노조 건설운동은 궁극적으로 전국적 차원에서의 단일조직을 결성하여 전국적 연대와 단결을 기반으로 한 투쟁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1928년의 코민테른 제6회 대회 이후 개최된 집행위원회 정치서기국의 <조선문제에 대한 결의>(이른바 <12월테제>))를 배경으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채택한 조직방침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조선공산당의 재조직은 소부르주아적 지식인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던 종래의 조직방식을 지양하고 노동자와 빈농을 중심으로 특히 공장과 노동조합에서 불췌비키적 대중적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는 방침에 입각하여 전국 각지에서 합법·비합법의 노조를 결성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노력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 산업별 노조를 결성하기 위한 운동은 비록 그 성과는 미미했더라도 지속적으로 시도된 전국적 단일조직 건설운동이라는 점에서 해방 이후 산업별 노조 건설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합법적 노동단체에서의 이러한 시도들에 이어 이 과제는 이른바 비합법 영역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 2) 혁명적 노동조합운동

산업별 노조로의 이행 이후 특히 1930년대를 중심으로 한 전시체제 아래에서의 파시스트 노동정책을 배경으로 노동운동은 합법에서 비합법의 형태로 이행하였다. 물론 1920년대의 노동운동이 합법의 형태를 띠었다고 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언론과 출판·결사·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이후 이른바 전시체제로의 이행을 배경으로 식민권력의 탄압이 가속화되면서, 노동자들의 파업은 말할 것도 없고 합법 노동운동 단체들이 존속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

한 배경에서 노동운동은 이제 비합법의 방식에 의한 이른바 지하활동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흔히 이 비합법 시기 노동운동의 주류를 일컫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다른 한편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은 그에 맞서는 비혁명적 노동운동, 즉 이른바 개량주의적 경향에 반대하는 노동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혁명적 노동운동은 기존 합법영역에서의 노동조합이 개량주의적이었다고 비판하고 이른바 계급 대 계급 전술로 요약되는 혁명적 노선에 따라<sup>2)</sup> 어용노조는 말할 것도 없고 합법영역에 존속하였던 모든 노동단체들을 개량주의나 중간파라고 하여 배격하고 이들을 제국주의와 파시즘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린 것으로 파악하였다. 당시 국제 노동운동의 좌편향을 반영하고 있었던 이 방침은 1930년대 후반의 이른바 인민전선전술이 제기되어 극복될 때까지 노동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사회주의 운동과 국제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 운동은 코민테른에서 〈12월테제〉를 채택한 이래 사회운동의 강력한 흐름을 이루었던 볼셰비키적 전위당의 재건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프로핀테른(Profintern)에서는 1930년 9월에 〈조선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의 임무에 관한 테제〉(이른바 〈9월테제〉)를, 그리고 이듬해인 1931년 10월에 상해의汎태평양노동조합 비서부에서는 〈조선의 범태평양 노동조합 비서부 지지자에 대한

2) 코민테른 7차 대회 이전의 국제공산주의 운동은 사회민주주의를 파시즘으로 규정하고 식민지·반식민지 국가에서의 민족부르주아지를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판단하여 노동자 계급은 이들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민족부르주아지에 대하여 계급 대 계급의 입장에서 투쟁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해 지배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에서도 기존의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건설되지 않은 공장에서 이들 기존의 조합에 반대하는 혁명적 반대파만을 중심으로 기존 조직과는 별개로 조직을 건설해야 한다는 이른바 이중조합주의(dual trade unionism)적 경향이 우세하게 되었다. 즉 혁명적 노동조합은 조직구성의 원칙상 노동자의 가장 광범한 층까지 포괄하는 대중조직이라기 보다는 노동자대중에서 혁명적 반대파만을 독자적으로 결집하는 전위적 노동자 조직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김 준, 〈일제하 노동운동의 방향전환에 관한 연구〉, 《일제하의 사회운동》, 문학과학지성사, 1987, 39~40쪽; 윤여덕, 《한국초기 노동운동연구》, 일조각, 1991, 191~192쪽).

동 비서부의 회신》(이른바 <10월서신>))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이 운동은 코민테른이나 프로핀테른, 또는 태평양노동조합의 직접적 지도를 받거나, 중국공산당 공작위원회, 또는 일본의 진협 계열 등의 지원에서 보듯이 러시아와 중국·일본 등과 같은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국제 노동운동 조직이나 사회주의 세력과의 연계 아래 국제적 성격을 띠고서 전개된 것이었다.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은 대략적으로 보아 두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는 1928년 <12월테제>의 발표 이후 1931년 무렵까지로, 전국적 차원에서 당재건을 목표로 운동이 전개된 시기이다.<sup>3)</sup> 이 시기에 노동운동가들은 전국 각지의 몇몇 주요 도시에 거점을 설정하여 상층에서 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결성을 꾀하였다. 즉각적으로 당의 재건을 선포하거나 당재건 준비조직의 지도 아래 당세포나 공청(공산주의 청년동맹)의 세포를 건설하려는 경향이 우세한 가운데, 혁명적 대중조직의 건설이 공공연하게 표방되었지만 실제적 성과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공장내에서 대중적 기반은 거의 없거나 전반적으로 미약하였으며,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학생이나 인텔리를 중심으로 한 반제동맹과 같은 형태가 보다 선호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한 활동내용도 각 공장 내에서의 활동보다는 학교나 가두를 중심으로 토론회·독서회 등을 통한 의식화와 운동자의 획득, 선전선동을 위한 격문과 배라 살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931년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이러한 운동양상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그것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에서 진행되면서 이 시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전국적

3) 1980년대 후반에는 두 시기의 운동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전반기의 당재건운동을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주도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운동이 파벌적이었다고 보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다음 시기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이와는 달리 기층의 노동대중에 의해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평가하려는 견해가 우세하였다(대표적인 주장으로 이재화, 《한국근대민족해방운동사》I, 백산서당, 1988, 166쪽). 그러나 두 시기의 운동이 비합법 공간에서 일련의 연속성을 가지고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실제 운동양상에서 두 시기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후의 연구들에서 두 시기의 운동을 당재건운동의 발전이라는 연속선 안에서 파악하려는 경향을 보였던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한국역사연구회 1930년대 연구반,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 한길사, 1991).

차원에서의 당재건은 당장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기 보다는 다음 단계의 과제로 간주되었다. 당면의 목표는 일정 지역내의 공장과 대경영을 기반으로 먼저 대중적 조직기반을 확립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일정 지역에서 공장 내에 먼저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는데 주력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의 재건을 전망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활동내용도 대중적 파업투쟁의 조직과 지도, 이를 위한 운동방침이나 강령, 전술전략의 수립 및 노동대중의 교양 증대와 계급의식의 교양 등으로 강조점이 이행되었다.

조직방식을 보면 혁명적 노동조합 역시 산업별 조직방식을 채택하였다. 코민테른 <12월테제> 이후 노동·농민 조합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반제 인민대중의 역량을 단일조직으로 결집한다는 방침에 입각하여, 산업별 노조에 이들을 포섭하기 위한 청년부나 부인부 등의 전문부를 설치하였으며, 합법 운동 시기의 산업별 노조운동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려고 하였다.<sup>4)</sup> 구체적인 조직방침을 보면 각 공장이나 작업장에 3~5명으로 공장반이나 직장그룹(세포)을 조직하고 이를 공장별 노조 분회로 조직하여 산업별로 통제하는 한편, 각 산업별 조합의 지부는 지역적으로 지부(지방)→도→중앙(전국)의 협의회를 아래로부터 위로 조직한 다음 이를 통일하여 전국적 조직을 결성한다는 방침에 입각하고 있었다. 이와 아울러 혁명적 노동조합의 주위에 노동자대중을 결집시키기 위한 방침의 하나로써, 공장대표자회의·공장위원회·투쟁위원회·파업위원회 등의 다양한 하부조직들을 건설하고자 했다.<sup>5)</sup>

4)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학계의 김인걸은 “활동의 중심을 공장과 기업소로!”라는 당시 혁명적 노조운동의 당면 구호는 노조활동을 비합법으로 전환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하였다. 이 지적에서와 같이 비합법운동에서 활동의 중심이 공장으로 옮겨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합법공간에서 공장 중심의 활동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김인걸, 《1920년대 맑스-레닌주의의 보급과 노동운동의 발전》, 조선노동당출판사, 1964; 일송정, 역사신서 3, 1989, 132쪽).

5) 이들 조직의 위상과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는 최규진, <‘코뮤니스트 그룹’과 태평양노동조합 계열의 노동운동방침>(《역사연구》5, 역사학연구소, 1996), 130쪽 이하를 참조할 것. 최규진은 공장위원회 건설이 특정한 시기와 국가에 적합한 공장위원회의 조직방침을 식민지 상황에 그대로 옮기려 했다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1930년대 노동운동의 중심이 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시기의 노동운동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이 표방하는 노동조합 조직이 실제로 실현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조직결성의 준비단계에서 좌절되었다. 물론 혁명적 노동조합은 체포와 구금·고문·학살 등을 통한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아울러 일제의 노련한 스파이 정책에 직면하여 자신의 입지를 마련해야 했다. 코민테른으로 대표되는 국제적 혁명역량의 지원은 비효율성과 아울러 보기에 따라서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하였다.

가장 커다란 어려움은 운동의 내부에서 왔다. 무엇보다도 혁명적 노동운동은 이 시기 국제 혁명운동의 좌편향을 비판하고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내재적 역량을 가지지 못하였다. 노동운동가들의 세대교체는 1920년대 전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도 있었지만 1920년대에 노동운동자들의 상당수가 이 시기에 대규모의 빠른 속도로 노동운동의 대열에서 탈락하였다.<sup>6)</sup> 이는 노동운동에서 인텔리와 뿌리 부르주아적 요소가 배제되고 노동계급적 요소가 보다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조성된 국면에서 비합법운동은 곧 생명을 내건다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많은 운동가들이 오욕을 무릅쓰고 강요된 일상생활을 택하였다. 이에 따라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고립분산적이고 수공업적인 양상을 띤 운동으로 내몰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가하면 이전에 혁명운동에 종사하던 과거의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

는 점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 6) 이 시기의 대표적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의 하나인 이른바 태평양노동조합운동 계열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연령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검거자들 68명 중에서 25세 미만의 젊은 운동자는 53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였으며, 35세 이상의 노동자들은 전혀 없었다. 즉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1920년대의 운동경험을 갖지 못한 새로운 운동세대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김윤정, <1930년대 초 범태평양노동조합 계열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 《역사연구》 6, 역사학연구소, 1997, 151~153쪽). 또한 이 시기 함흥형무소의 조사에 따르면 1928년부터 1933년 3월 사이의 5년 동안 사상범으로 투옥된 1,100명의 연령 분포에서 21~25세의 인원이 685명으로 전체의 62.2%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26~30세의 219명(19.9%), 20세 이하가 124명(11.3%)의 순이었다(《사상월보》 3-1; 최규진, 위의 글, 149쪽에서 재인용).

들 중의 일부는 반동적 노조간부와 마찬가지로 일체에 매수되어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운동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던 노동자들 안에도 다양한 조류들이 있었다. 일체의 가혹한 탄압하에서 투쟁을 회피하고 직장을 떠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한편, 순전한 경제투쟁에 노동운동의 영역을 한정시키자는 주장도 나타났다. 이와 같이 ‘패배주의’적이고 ‘개량주의적’ 흐름이 확산될수록 현장에 남아 있는 노동운동자들은 경직된 반응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그들이 관념적 영웅주의나 급진주의 노선으로 이끌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운동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 중의 하나로 노동대중으로부터 분리되어 식민지하에서 민족해방운동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구하는데도 실패하고 말았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이 그 조직적 기반을 노동대중에 뿌리내리기 위한 목적의식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시의 운동자들은 아래로부터의 통일전선에 입각하여 혁명적 노동조합을 건설함과 아울러 소부르주아 인텔리 및 학생층에서 벗어나 생산현장의 노동대중에 의한 조직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합법운동과 비합법운동의 결합에 노력하였는가 하면 좌경적 방침을 교조적으로 고수하려는 경향과도 결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비합법의 지하조직 형태로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의 규모나 조직의 범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거의 불가능하다. 일체의 발표에 따르면 1931년부터 1935년 사이에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으로 검거된 건수는 70여 건에 달하고 투옥된 운동자의 수만 하더라도 1,759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7)</sup> 이 시기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을 대표하는 것으로는 함남의 흥남 일대를 중심으로 1930년 말부터 1935년까지 4차례 걸쳐 전개된 이른바 태평양노동조합운동,<sup>8)</sup> 서울을 중심으로 1933년에

7) 윤여덕, 앞의 책, 201쪽.

8) 이 운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김윤환, 《한국노동운동사》 I(청사, 1981), 277~281쪽.

최규진, 앞의 글.

김윤정, 앞의 글.

이와 아울러 이소가야 스에지의 수기는 이른바 제2차 테러 사건에 관련된 저자 자신의 운동체험을 기술한 흥미있는 자료이다(이소가야 스에지, 《わが青春

서 1936년에 결친 李載裕 그룹의 운동,<sup>9)</sup> 원산지방을 중심으로 1936년에서 1938년 사이에 활동한 혁명적 노동조합운동<sup>10)</sup>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평양·인천·청진·홍남·신의주·여수·목포·마산·부산 등의 지역과 검이포제철소·광산·항만 등지에서 조직적 활동이 있었다.<sup>11)</sup>

### 3) 개량주의와 어용 노동조합

1920~1930년대의 세계노동운동사는 혁명적 조류에 맞서 개량주의와 기회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이미 언급했듯이 국제 노동

の朝鮮》，影書房，1984；김계일 옮김, 《우리 청춘의 조선：일제하 노동운동의 기록》，사계절，1988 참조).

- 9) 이에 관한 초기의 연구로서는 김윤환, 위의 책, 283~287쪽의 서술이 있으나 내용이 간략하고 다소의 부정확한 서술을 내포하고 있다. 본격적인 연구들의 대부분은 1990년대 전반기에 나왔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변은진, <1930년대 경성지역 혁명적 노동조합 연구>(한국역사연구회 1930년대 연구반, 《일제말 조선사회와 민족해방운동》，일송정, 1991).

안태정, <자주적 공산주의자 이재유의 혁명노선과 ‘좌익전선운동’>(《역사비평》 14, 역사문제연구소, 1991).

이에숙 <이재유그룹의 당재건운동(1933~36년)>(한국역사연구회 1930년대 연구반, 《일제하 사회주의 운동사》，한길사, 1991).

김경일, 《이재유연구-1930년대 서울의 혁명적 노동운동》(창작과 비평사, 1993).

- 10) 이 운동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안태정, <1930년대 원산지역의 혁명적 노동운동(1930~1938)>(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 2, 한울, 1989).

임경석, <원산지역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1936~1938년)>(한국역사연구회 1930년대 연구반, 위의 책).

- 11) 위의 개별 연구를 이외에도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의 주요 사례들은 고준석, 《朝鮮革命運動史 2—コミンテルンと朝鮮共產黨》(社會評論社, 1983), 183쪽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다. 김윤환(위의 책, 277~292쪽)은 각각의 사례들을 함경도와 평안도·전라도·경상도 및 서울 지방을 중심으로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윤여덕이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의 구체적인 활동과정을 일제에 의해 검거된 사건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재생하는 것은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일제 관헌의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의 실상이 재현되기는커녕 의도하지 않은 과장과 축소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윤여덕은 혁명적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는데 사건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혁명적 노동조합의 조직노선과 투쟁노선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있다(윤여덕, 앞의 책, 202쪽 이하 참조).

운동은 좌편향으로 흘렀으며, 이는 일제하 노동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코민테른과 프로핀테른에서 결의한 조선문제에 대한 테제들에도 반영되었다. 예컨대 이미 언급한 코민테른의 <12월테제>는 민족개량주의가 성장하는 추세에 주목하여 그들의 냉담성과 우유부단성을 폭로하는 한편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에 대하여 더욱 정열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30년 프로핀테른의 <9월테제>에서는 노동운동 내부에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려는 민족개량주의적 부르주아지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들 개량주의적 지도자의 기회주의적이면서 배반자적인 전술을 계통적으로 폭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이듬해 1931년 범태평양노동조합의 <10월서신>도 민족부르주아지는 순종적인 민족개량주의적, 타협적 조합을 조직하고 있다고 하면서 개량주의자들의 반역적 정체를 대중 앞에 폭로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국제기구들의 이러한 주장은 국내의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에도 일정한 형태로 반영되었다. 예컨대 위의 <9월테제>는 조선노동총동맹을 민족개량주의적 지도부가 주도하는 단체로 규정하였으며, <10월서신> 역시 조선노총이 민족부르주아지의 앞잡이인 개량주의자들에 의해 지도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아울러 1929년의 원산총파업이나 1930년의 신흥탄광 노동자 파업, 평양 고무공장 노동자들의 총파업에서 보인 지역 노조들의 지도양상 역시 개량주의적이었다고 평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평가는 해방 이후 특히 북한 학계나 남한과 일본학계의 일부로 이어졌으며,<sup>12)</sup> 이러한 맥락에서 강현옥은 1930년대 이후 노동운동에서 나타났던 개량주의의 구체적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다.<sup>13)</sup>

1920년대 후반 미증유의 세계공황이 식민지에 파급되었던 사실을 배경으로 폭발적으로 분출되었던 노동대중의 생활상의 요구와 의식의 고양은 기존

12) 윤여덕, 위의 책.

小林英夫, <1930年代 前半期の朝鮮労働運動について—平壤ゴム工場労働者のゼネストを中心にして> (《조선사연구회논문집》 6, 조선사연구회, 1969;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 거름).

13) 강현옥, 《항일무장투쟁시기 노동운동》(조선로동당 출판사, 1964; 《일제하 조선노동운동사》, 일송정, 1989), 192~193쪽.



의 일부 노동조합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났던 타협적이고 기회주의적 성향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었다. 합법적 노동조합의 일부 지도자들은 일제의 억압 아래에서도 여전히 합법성만을 고수하였으며,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대하여는 공장주 및 경찰과 함께 협의나 강제조정, 또는 탄원 등에만 의존함으로써 폭발적으로 고양되고 있던 노동자들의 ‘혁명적 진출’을 애써 외면한 것도 사실이었다. 합법적 노동조합의 일부 지도자들이 노동자들의 의식의 고양과 투쟁성의 강화라는 대중적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는 ‘개량주의적 속성’을 적나라하게 노출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930년대 이후의 노동운동은 혁명적 노동조합의 건설이 주류를 차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불행하게도 합법영역에서의 운동 일반이 공공연하게 개량주의로 매도되는 일정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의 연구들에서 그러하듯이 합법 영역에서의 운동 일반이 전체적으로 개량주의적 속성을 보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견해이다.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당시의 노동운동자들이 개량주의적 노동조합 안에서의 활동을 무시하거나 경시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이론적 차원에서는 노동운동자들이 개량주의 조합 안에서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합법운동과 비합법운동, 공개활동과 비밀활동의 유기적 결합을 강조했기 때문이다.<sup>14)</sup>

비합법운동에 종사하였던 많은 노동운동가들은 개량주의적 조합 안에서의 활동에 많은 역량을 경주하였으며, 이는 곧 좌선회한 국제 노동운동의 이중조합주의를 극복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당시 조성된 상황과 운동의 역량에 비추어 볼 때 개량주의적 조합 안에 들어가 “노동대중을 전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호 차원에 그치고 말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점에서 볼

14) 1930년대 전반 당재건 운동에 착수하였던 이른바 화요파 공산주의자인 김단야나 박현영 등이 작성한 노동조합방침에서는, “비록 적색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은 산업 부문 안에 있는 개량주의 노동조합 바깥에서 어떤 비밀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이 같은 경우에는 개량주의 조합 안에 혁명적 반대파 그룹을 만들어서 혁명적 정치로 노동자들을 획득하고 대중적 토대를 가진 적색노동조합을 형성하는 길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러시아 현대사문서보관연구센터, <Letter to the Communist in Korea>, 문서군 495, 목록 135, 문서철 183, 1932; 최규진, 앞의 글, 129·130쪽에서 재인용).

때 적어도 개량주의와 혁명적 노동조합을 이분화하여 대립적으로 파악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일제의 가혹한 탄압 아래에서 생명을 걸고 노동운동을 해야 했던 상황에서 합법운동은 개량주의로, 비합법운동은 혁명운동으로 양분화되어 인식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조성되었다고는 하지만, 투쟁적이고 혁명적인 노동운동가들과 노동자들은 이 시기에도 여전히 합법 노동단체들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전국 주요 도시의 노동단체들은 1930년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지역 노동운동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즉 개량주의로 일컬을 수 있는 노동조합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조류들이 있었으며, 그것은 지역 내에서 노동조합의 역할과 운동역량, 일제의 매수와 탄압에 대한 대응양식 등에 따른 편차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량주의 노동조합과 때로는 구별되면서도 때로는 중복되어 이해되는 개념으로 어용노조가 있다.<sup>15)</sup> 어용노조는 개량적 노동단체의 최저변에 위치하면서 자본이나 권력에 의한 매수가 노골적이고 직접적이라는 점에서 조합으로서의 자율성을 가지지 못한다. 노동자의 자주적 대중조직이라는 기본규범에 미달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단체라기 보다는 노조간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가나 일제의 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개량주의적 노조에서도 그러한 성향을 일부 찾아 볼 수 있었지만, 노동조합의 어용적 성격은 대중적 기반이 없는 조합내의 상층 지도부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국면과 운동상황의 변동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었다. 실제로 부산의 노우회나 대구의 대구노동회 또는 원산의 함남노동회와 같은 사례들에서 보듯이<sup>16)</sup> 어용노조에 속한 노동자들은 조합의 민주화와 자주화를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다.

개량주의와 어용 노동조합은 주로 운송이나 운반에 종사하는 일용노동 중

15) 1920년대 초중반에는 ‘異流團體’ 혹은 1930년대 이후에는 ‘파시스트 단체’ 등으로 일컬어 졌던 ‘반동단체’ 일반이 그것인바, 일제가 전시체제로 이행한 시기인 1930년대의 파시스트 조직은 그만 두고라도 1920년대의 합법공간에서 이류단체나 반동단체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는 노동총동맹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에서 이에 관한 결의사항을 빈번히 채택하였던 사실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16) 김경일, 《일제하 노동운동사》(창작과 비평사, 1992), 283~303쪽.

심의 비공장 노동자들에 의해 조직되었다. 이 점은 숙련공 중심의 공장노동자가 중심이 되었던 서구 노동사에서의 개량주의적 노동조합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와 같이 운수·운반 중심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어용노조가 유의미했던 이유로는 이 범주의 노동자들이 산업 발전의 식민지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노동계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에 공장노동자는 경인지역과 함경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편재되어 있었다는 식민지 노동력 구성의 특수성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둘째로는 일본인 대공장의 노동자들이 공식적인 조직을 거의 갖지 못하고 대자본의 노동통제 아래 개별적으로 예측되어 있었던 반면에, 운수·운반 노동자들은 자본과의 교섭을 위한 편의에서 혹은 노동과정상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인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특히 1930년대 이후 전시체제로 이행하면서 전시물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이들 항만하역이나 하물운반 노동자들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보다 증대되었다. 일제의 어용 노동정책이 특히 이 부분의 노동자들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어용노조의 정치적 의미와 비중은 이 부분의 노동자들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어용 노동조합은 노동자 상층인 십장, 감독뿐만 아니라 지주나 중소상인, 전직 관리나 경찰관, 지식인 등과 아울러 부랑자·遊蕩兒·한량 또는 전향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는데<sup>17)</sup> 이들은 거의 전부가 조선인들이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일제는 하층 노동대중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민족해방에 대한 열망을 잠재우고 그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었다. 과도한 착취의 몫 중에서 극히 일부를 조합의 간부나 십장 등에게 떼어 줌으로써 조선인들 사이에서의 민족적 분열과 반목을 의도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조장하였던 것이다. 식민지 분할통치라는 일제의 의도가 여기에서도 관철되었다고 할 수

17) 1930년의 한 운동가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개량주의의 토대와 구성요소로 ① 노동조합 상층에 있는 기술노동자·십장·중간배(소개인)들, ② 노동계급의 대열을 분열시키기 위한 각종 단체(함남노동회·대구노동회 등)와 지식인들, ③ 일제의 백색 테러 경찰 정책과 관제 노동조합 등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함우석, 〈조선좌익노동조합의 조직적 체문제〉, 《태평양노동자》 9·10, 1930, 36~37쪽).

있다.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노동에 대한 가혹한 착취에 의해 어용노조의 상층 지도부에 대한 노동력 재생산조건의 차별화가 가능하였는데, 일본식 노무구조의 봉건적이고 위계적인 복잡한 청부제도 등이 그것을 보다 철저하고 또 용이하게 하였다. 이들 조합을 통하여 노동의 분열과 경쟁을 조장함으로써 임금의 지속적인 하락과 아울러 순종적인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서 식민지에서 자본축적이 보다 용이하고 또 효율적으로 될 수 있었다.

전통적인 온정주의적 조직이 ‘근대적’ 조직과 결합함으로써 지배와 통제라는 일방적 관계에서 성립하였던 개량주의적, 어용 노동조합은 반봉건적 유제의 온존과 더불어 1920년대 전반기까지 일정한 세력기반을 가지고 있었지만, 1920년대 중반 이후 노동운동의 전반적 고양에 따라 상당 부분 그 존립근거를 상실하고 매우 제한된 영향력만을 행사하였다. 1930년대 이후 전시체제로 이행하면서 제국주의 세력의 활동을 위한 객관적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그 영향력은 다시 증대되었는데, 그 범위는 혁명적 노동조합운동과 밀접관계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리고 부산이나 원산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노동대중의 강력한 투쟁경험이 있었던 지역에서, 혹은 30년대 전반기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에서 보듯이 운동이 강렬한 시기에, 다시 말하자면 식민체제에 대한 위협이 보다 심각한 국면에서 그것이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많았다고 할 수 있다.

#### 4) 노동운동의 전개

##### (1) 1930년대의 노동운동

1930년대 초 세계대공황이 식민지에 엄습하면서 조선에서도 공업생산이 위축되는 한편, <회사령>의 철폐를 계기로 발흥했던 소규모 공장을 중심으로 ‘자연도태’ 현상이 발생하여 곳곳에서 휴폐업 공장이 속출했다. ‘산업합리화’를 명분으로 한 자본축의 정리해고방침에 따라 실업자가 대량 양산되었다. 여기에 물가상승이 잇달아 임금저하현상을 가져왔으며, 이것은 결국 민중 생활의 불안정을 야기했다.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불만과 이에 대한 저항이 이

시기 노동운동을 고양시켰던 객관적 배경이 되었다. 이와 아울러 1929년의 원산총파업을 비롯하여 1930년의 신흥탄광 노동자들의 집단투쟁과 평양 지역 고무공장 노동자들의 총파업 등에서 보듯이 투쟁을 통한 경험의 축적에 따라 노동자들의 주체적 역량은 급격히 강화되었다.

다음의 <표 1>에서 보듯이 노동자들의 파업건수는 1929년에 100여 건을 보이던 것에서 1930년에는 160건으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1931년에는 식민지 시기에 가장 많은 200여 건을 기록하여 193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높은 건수를 유지하였다. 파업에 참가한 인원을 보면 1930년에 가장 많은 19,000여 명을 비롯하여 1931년에 17,000여 명을 기록하였다. 1932년부터는 점차 감소하여 1935년에 이르기까지 12,000~15,000명 선을 유지하다가 1936년 이후에는 8,000명대로 대폭 떨어져서 1920년대 후반과 비슷한 참가 양상을 보였다. 193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파업 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공황기라는 상황이 파업을 발생시키는 계기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자본의 공세가 강해지면서 파업 과정에서 노동자의 소극성을 강화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표 1> 1929~1937년 동맹파업의 추이

연도	건수	참가 인원				원 인			결 과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계	임금	대우	기타	성공	실패	타협	미해결
1929	102	7,412	49	832	8,293	57	10	35	24	44	34	
1930	160	17,192	172	1,608	18,972	89	26	45	41	63	56	
1931	205	16,854	131	129	17,114	141	16	48	34	100	71	
1932	152	14,170	591	63	14,824	99	14	39	30	69	53	
1933	176	13,599	213	23	13,835	118	26	32	37	74	65	
1934	199	12,941	86	71	13,098	134	16	49	57	86	56	
1935	170	12,062	101	24	12,187	107	25	38	47	72	51	
1936	138	8,100	145	1	8,246	86	13	39	34	32	72	
1937	99	8,706	291	90	9,148	55	7	37	25	36	37	1

\* 朝鮮總督府 警務局, 《最近における朝鮮治安狀況》(1933), 143~144쪽; 조선총독부, 〈勞務ノ調整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諮問案參考書》, 1938).

좀더 구체적으로 파업의 발생 건수를 서울과 평양 및 부산의 3대 도시에

한정해서 살펴보면(〈표 2〉 참조), 1925년과 1926년의 두 해 및 1930년부터 1935년에 이르는 시기에 파업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30년대 전반기는 일제시대 전반에 걸쳐 가장 많은 파업 건수가 기록되었는데, 1930~1935년 사이에 일어난 파업은 177건으로 식민지 시기 전체 378건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6.8%를 차지한다. 특히 1930년부터 1933년에 걸치는 시기에 파업은 절정에 이르렀는데, 이 4개년 동안에 일어난 파업은 130건으로 전체의 1/3을 약간 넘는 34.4%를 기록하였다.

〈표 2〉 3대 도시에서 시기별 파업 발생건수

연도 지역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계
서울	7	6	7	20	9	14	10	7	12	5	16	11	8	13	15	9	5	6	2	4	0	186
평양	0	0	0	3	1	9	12	3	4	7	14	13	5	19	5	9	2	1	2	2	0	111
부산	0	4	5	2	1	2	2	0	4	10	11	8	6	6	3	6	2	4	3	0	2	81
계	7	10	12	25	11	25	24	10	20	22	41	32	19	38	23	24	9	11	7	6	2	378

\* 김경일, 《일제하 노동운동사》(창작과 비평사), 1992, 310~312쪽에서 작성.

다음에 위의 〈표 1〉에서 원인별로 보면 1930년대 전반기의 노동자 파업은 생활조건의 악화나 임금인하를 반대하는 방어적인 성격의 파업이 많았으나 그것이 매우 격렬한 성격을 지니고 전개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방어적 성격의 파업이 빈발하게 일어났던 것은 불황으로 인한 피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자본측의 시도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노동자들 역시 불황으로 인한 생활고로 인해 그만큼 절박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파업투쟁의 완강성은 파업의 지속일수가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전개되는 파업투쟁이 증가되었던 것에서도 입증될 수 있다.<sup>18)</sup> 그러나 1930년대 이후가 되면 오히려 노동자들의 요구는 점차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 성격으로 변화해 가는 경향을 보인다.

18) 강현욱, 앞의 책, 126쪽.

다음에는 파업의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전반기에 걸쳐 파업결과를 분석한 김윤환의 연구에 따르면 요구조건이 거절되는 건수의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반대로 관철되는 건수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sup>19)</sup> 1930년대만을 놓고 보면 1930년대 전반기에는 성공한 파업보다는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더 많았는데, 후반기로 가면서 실패한 파업에 비하여 요구조건이 관철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방어적인 성격이라고는 하더라도 파업이 완강하게 전개될수록 노자 사이에 타협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종결되었던 반면에, 노동운동이 상대적으로 수세에 몰린 30년대 중후반에는 오히려 이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1920년대 후반부터 그러한 경향이 나타났지만 북부 지방에서 파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일제하의 3대 파업으로 알려진 1929년의 원산총파업을 비롯하여, 1930년의 신흥탄광파업과 평양고무노동자들의 파업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에서 보듯이, 이 지역에서 파업은 그것의 지속성과 완강성, 그리고 투쟁전술 등에서 두드러진 점이 있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 지방에서의 파업발생 건수 또한 적어도 193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는 전체 발생 건수에서 20% 내외의 비율을 보였지만, 후반기에 이르러 10% 이하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보면 19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파업발생 건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파업 1건당 참가 인원수 역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북부지방의 파업 1건당 참가 인원수가 100명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은 중화학공업지대로서 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후반기로 가면서는 50명 내외로 떨어지고 있었던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다소 불완전한 통계이기는 하더라도 직업별 파업동향에 대해서는

19) 1921~1924년 사이에 거절된 건수는 전체 파업건수의 5.0%, 관철된 건수는 32.7%였는데, 1925~1929년 사이의 후반기에는 거절이 17.1%로 늘고 관철은 30.8%로 줄었다. 그런데 다시 1930~1933년 사이에는 거절이 27.4%로 대폭 늘어난 반면에 관철은 20.5%로 축소되었다(김윤환, 앞의 책, 249~252쪽).

다음의 <표 3>에서 보듯이 1930년부터 1935년의 6개년에 걸친 자료가 나와 있다. 표에서 보듯이 거의 모든 직업 부문에서 노동자들이 동맹파업에 망라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방직이나 정미·고무 등의 공장노동자가 대략 40%, 인부나 집꾼, 또는 토목건축 노동자와 같은 비공장 노동자가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장노동에서는 잡공장을 제외한다면 방직·제사 노동자들이 가장 활발한 투쟁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시기 동맹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고무공장 노동자들이 1930년부터 1933년에 이르기까지 전혀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비공장노동자의 직업범주에서는 인부나 집꾼과 같은 자유 노동자들이 가장 활발한 참여양상을 보였고 토목·건축 노동자들이 뒤를 이었다.

&lt;표 3&gt;

직업별 파업 발생 건수

(1930~1935)

연 도		방직 제사 직공	제분 정미 직공	잡공 장 직공	고무 공장 직공	인부 및 집꾼	광부	인력 거꾼	양복 직공	우편 신문 배달	직물 공장 직공	토목	목공	기타	계
1930	건수	19	10	44		33	8		2	2		24	2	16	160
	인원	3,707	2,182	5,173		2,613	1,113		158	13		2,988	31	994	18,972
1931	건수	16	17	44		40	8		2	2		52		22	203
	인원	1,487	1,340	2,401		2,787	333		37	22		7,331		1,376	17,114
1932	건수	13	4	30		34	10		1	3		32	2	23	152
	인원	2,999	344	2,141		2,729	1,286		18	36		3,742	121	1,408	14,824
1933	건수	13	7	24	30	57	13	1		2		2	8	19	176
	인원	3,077	203	1,419	2,022	3,970	760	114		16		262	359	633	12,835
1934	건수	13	13	37	9	46	22		1	1		31	3	23	199
	인원	1,805	570	1,978	449	2,551	1,462		11	23		3,128	177	944	13,098
1935	건수	10	6	25	12	20	30	9			8	29	4	17	170
	인원	1,650	226	1,818	1,433	1,296	2,031	82			394	2,288	143	697	12,058

\* 朝鮮總督府 警務局, 《最近における朝鮮治安狀況》(1936), 171~172쪽.

다음의 <표 4>는 서울과 평양·부산의 3대 도시에서 1920년부터 1940년 사이에 발생한 파업을 필자가 산업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위의



직업별 동향과는 다소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우선 공장노동자의 파업 참가 비율이 이른바 비공장 노동자의 그것에 비해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sup>20)</sup>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공장노동자에서는 방직·제사 등이 중심이 되는 섬유업이 가장 많은 발생 건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위의 <표 3>에서의 동향과 일치하고 있다. 고무업이 중심이 되었던 화학 부문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는데, <표 3>에서는 없었던 인쇄출판업 노동자들 또한 활발한 투쟁 양상을 보였다. 다음에 비공장 노동자를 보면 <표 3>(인부 및 집꾼)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용노동이 가장 많은 발생 건수를 기록하였던 반면에, 토목·건축 노동자들은 대도시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미미한 발생 건수를 보이고 있다. 대신에 상업 및 서비스 부문의 노동자들이 활발한 참여양상을 보였다.

<표 4> 3대 도시에서 산업별 파업 발생건수 (1920~1940)

산업 지역	섬유	화학	운수 통신	인쇄 출판	피복 신발	일용	상업 및 서비스	제재 및 목제품	금속	요업	식료	토목 건축	가스 전기	기타	계
서울	48	17	26	33	21	11	6	4	9	5	2	1	0	3	186
평양	23	28	9	5	6	11	13	6	1	1	5	1	1	1	111
부산	23	20	12	4	4	2	2	2	1	4	3	2	0	2	81
계	94	65	47	42	31	24	21	12	11	10	10	4	1	6	378

\* 김경일, 《일제하 노동운동사》(창작과 비평사), 1992, 314~315·557~563쪽에서 작성.

1930년대 전반기 노동쟁의의 특징으로는 노동자 대중에 의하여 노동단체 내의 개량주의자들을 반대·배격하는 투쟁이 광범하게 전개되어 왔다는 사실이 흔히 지적되어 왔다.<sup>21)</sup> 식민지에서의 경제공황과 일제의 대륙침략을 배경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강화되고 노동운동에 대한 공세가 전면화되는 가운데, 그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비합법 영역에서 혁명적 노동운동가들의 지도를 매개로 한층 고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예컨대 1930

20) 공장 노동자는 섬유·화학·인쇄출판·제재 및 목제품·금속·요업·식료·가스·전기 부분을 합한 245명으로 전체 378명의 64.8%를 차지하고 있다. 앞의 표와는 달리 공장 노동자의 참가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대도시 지역이라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1) 강현옥, 앞의 책, 126~128·191~193쪽.  
윤여덕, 앞의 책, 137·193~197쪽.

년의 신흥탄광 노동자 파업이나 평양 고무공장 노동자의 파업 사례들에서 보듯이 노동자들에 의한 대규모의 폭력적 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 이 시기의 또다른 특징이었다. 또한 이미 언급하였듯이 파업의 규모와 범위가 다른 시기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으며, 같은 지역이나 동일 산업 부문에서의 연대투쟁이 광범하게 전개되었다.

이와 아울러 일제에 반대하는 노동운동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서는 1920년대 후반 이래 이미 두드러진 현상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지적되어 왔거니와, 노동조합 조직결성의 자유나 일제 경찰의 간섭에 대한 반대, 또는 노동자에 대한 민족차별을 거부하는 요구들이 이 시기에 빈번하게 제기되었던 사실에서 보듯이 노동운동의 정치적 성격은 더욱 강화되어 갔다. 이 시기의 주요 파업으로는 1930년 1월의 부산 조선방직공장 노동자 파업,<sup>22)</sup> 같은 해 5월의 신흥탄광 노동자 파업,<sup>23)</sup> 이어서 8월에 있었던 평양 고무공장 노동자 파업,<sup>24)</sup> 1933년 7월의 부산 고무공장 노동자의 연대파업,<sup>25)</sup> 그리고 1934년 10월과

22) 이 파업에 대해서는 일제하에 강창호, <조선방직주식회사 2,200명의 대파업> (《문예전선》 7-3, 1930; 배성찬 편역, 《식민지시대 사회운동론 연구》, 1987)에 의한 보고가 있다.

해방 이후의 연구들로는 다음과 같다.

김인걸, 앞의 책, 109~111쪽.

김윤환, 앞의 책, 253~256쪽.

윤여덕, 위의 책, 137~139쪽.

23) 이 파업에 관해서는 한영해, <1930년 신흥 탄광 노동자들의 전투적 폭동에 대하여> (《력사과학》 4, 1956; 김경일 편, 《북한학계의 1920·1930년대 노동운동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89) 205~234쪽이 가장 체계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인걸, 위의 책, 112~116쪽.

김윤환, 위의 책, 256~259쪽.

24) 이에 관한 연구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송지영, <1930년 평양 고무 공장 노동자들의 총파업> (《력사과학》 5, 1959; 김경일 편, 위의 책) 235~253쪽.

김경일, <일제하 고무노동자의 상태와 노동운동> (《일제하의 사회운동》,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9, 문학과 지성사, 1987), 107~120쪽.

김인걸, 위의 책, 116~122쪽.

김윤환, 위의 책, 259~265쪽.

25) 이 파업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1935년 7월에 두 차례에 걸쳐 전개되었던 흥남제련소와 1935년 7월의 진남포 제련소 노동자 파업<sup>26)</sup>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에 1930년대 후반기로 넘어 가면서 노동운동은 전반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예컨대 앞에서 언급한 파업의 결과나 노동쟁의의 건당 참가인의 변화를 통해서도 이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 후반의 이러한 변화는 전시체제로의 이행에 따라 일제의 노동정책이 한편으로는 기존의 강압 위주로부터 상대적으로 유화적 태도를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던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후반기의 구체적인 파업양상에 대해서는 남한과 북한학계에서 다소의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학계에서는 이 시기 노동자 파업이 전시체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내용을 가진 것이었다고 다소 유보적으로 평가하거나,<sup>27)</sup> 이 시기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생략하고 곧바로 1940년대의 본격적인 전시체제로 넘어가는 것과 대조적으로, 북한학계에서는 이 시기 노동자들의 파업은 파업투쟁 건수와 참가자 수에서 볼 때 이전의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가장 활발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sup>28)</sup>

강현욱, 앞의 책, 176~179쪽.

김윤환, 위의 책, 269~271쪽.

김경일, 위의 글, 120~132쪽.

26) 이들 파업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강현욱, 앞의 책, 181~182·184~190쪽.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력사사건》Ⅱ(1971), 1064~1065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운동사》(1979), 207~209쪽.

姜在彦 編, 《朝鮮における日室コンツェルン》(동경, 不二出版, 1985), 305~306쪽.

김경일, 〈1930년대 일본인 독점 기업에서 노동자 상태와 노동운동〉(《한국의 노동문제와 노동운동》,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30, 문학과 지성사, 1991), 69~79쪽.

27) 김윤환, 앞의 책, 326쪽.

28) 기준으로 잡고 있는 연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예컨대 김윤환(위의 책, 326쪽)은 1937년부터 1940년까지의 4개년 동안 430건의 쟁의가 발생하였으며 24,967명의 노동자가 이에 참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강현욱(앞의 책, 235쪽)은 1930년대 후반기에는 1939년을 제외하고도 4년 동안 939건의 파업에 72,455명의 노동자가 참가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그가 제시하는 1930년대 전반기 4년 동안의 678건의 파업과 53,944명의 노동자수보다 오히려 많은 수치이다. 전자는 조선총독

이에 따라 예컨대 1936년의 노동자 파업은 대소규모의 운수 부문 노동자들의 연속적인 진출에서 시작되어, 각지 항만과 광산을 비롯한 대규모 기업소 노동자들의 진출이 점차 강화되었고, 1937년에는 노동자 대중의 파업투쟁과 함께 태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동일 부분이나 동일 지역을 중심으로 투쟁의 연대성이 강화되었으며, 1938년에는 해주와 평양을 사례로 주요 공장기업들에서 노동자들의 혁명적 진출과 아울러 반전·반제 운동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고 주장되었던 것이다.<sup>29)</sup>

## (2) 종전기의 노동운동

1930년대 말 이후 한국사회는 이른바 일제의 본격적인 전시동원체제로 편입되면서 노동력의 강제동원과 노동능률의 극대화를 위한 극심한 통제와 억압을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흔히 이 시기의 노동운동은 ‘침체기’ 또는 ‘암흑기’로 묘사되어 왔다. 전시동원과 전쟁수행을 목적으로 한 전반적 억압이 가중되었던 상황에서 이 시기 노동운동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고 평가해 온 것이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전쟁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전개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sup>30)</sup> 공식적인

---

부 경무국의 자료로서 해방 후인 1949년에 간행된 《조선경제통계요람》(조선경제사)에서 인용한 것이고 후자는 구체적인 증거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쪽의 진술이 실제에 접근한 것인지의 여부는 명확하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학계의 연구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만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의 영향력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는 반면에 남한학계의 연구들에서 1930년대 후반에 대한 서술이 다소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29) 강현욱, 위의 책, 221~233쪽.

30) 1930년대 후반에 대해서도 그러했지만 이 시기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대해서도 북한학계와 남한학계에서 미묘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 노동운동에 관해서는 북한학계의 연구들에서 풍부한 내용을 제공하는 반면에 남한학계의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소략하게 다루고 있다. 운동내용의 평가에서도 후자가 이 시기를 침체기 내지는 잠복기로 규정하는 반면에, 전자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반전투쟁이 전반적으로 고조되어 간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북한학계에서 이 시기에 대한 적극적 평가는 이 시기 전개된 노동운동의 상당 부분이 북한지역에서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배경으로 참가자들의 증언이나 현지 조사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들을 동원하여 운동내용을 복원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아울러 이미 언급했듯이 김일성이 주도한 항일무장투

통계 자료를 보면(〈표 5〉 참조), 중일전쟁 직후인 1938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수는 6,929명이었으며, 이듬해인 1938년에는 10,128명으로 증대되었다. 규모로 보아 이 수치는 1920년대 후반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0년 이후에 파업 건수와 참가인원은 1940년을 경계로 급격하게 감소했다.<sup>31)</sup> 1942년 이후의 통계는 공식자료로 남아 있지 않지만, 일제의 군수산업 기반이 집중되어 있었던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 노동대중의 반제·반전 투쟁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표 5〉 1938~1941년 동맹파업의 추이

연 도	건 수	참가 인원	원 인			결 과		
			임금	대우	기타	성공	실패	타협
1938	90	6,929						
1939	146	10,128						
1940	96	4,045	75	5	16	33	22	41
1941	56	1,799	38	2	16	15	16	25

\* 朝鮮總督府 警務局, 《最近における朝鮮治安狀況》(1933), 143~144쪽; 조선총독부, 〈勞務ノ調整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諮問案參考書》, 1938); 朝鮮總督府 警務局, 《第79回帝國議會說明資料》(1941년 12월).

비고 : 1941년은 9월까지의 통계임

현상적으로 보면 이 시기 노동자들의 파업의 대부분은 앞 시기와 마찬가지로 임금인상의 요구나 체불임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전신체제하

쟁의 영향력을 부각시키려는 동기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한 학계의 연구들의 대부분은 일제가 발간한 공식자료들을 기초로 이 시기 노동운동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서의 편향을 일정한 형태로 반영하고 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하의 서술은 북한학계의 연구(강현욱, 위의 책, 228~240·246~263쪽)에 의존하였다.

- 31) 일제의 공식기록과 해방 이후 남한 학계의 연구들은 대체로 보아 이 의견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북한학계에서는 1940년에 1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만 하여도 623건의 노동자 파업이 일어났으며, 49,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하였다고 한다(강현욱, 위의 책, 233·235쪽). 이는 위의 〈표 5〉의 96건, 4,000여 명이라는 수치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점에서 그는 당시 《동아일보》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1930년대 후반기 우리 나라 노동자 파업은 1939년부터 급속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에서 인플레이션의 진행, 생필품 가격의 폭등과 결핍에 따라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비록 요구조건이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임금인상이나 대우개선이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외형적 표현의 기저에는 일제 식민통치의 전복과 그를 위한 일제의 무장해제, 강제 군사복무와 군사교육에 대한 반대 및 식민지의 경제적 수탈에 반대하는 요구가 깔려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파업의 또다른 원인으로는 앞 시기와 비슷하게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본인 감독의 폭행과 욕설 등 비인간적인 처우와 민족차별 등을 들 수 있겠지만, 낮은 임금으로 인한 빈곤의 만연과 생존권의 위협은 이 시기 노동자들이 극심한 억압 아래에서도 저항할 수밖에 없게 만든 주요한 원인이었다. 파업의 지속기간을 살펴보면 길어야 1주일 내외이고 대체로 2~3일 정도의 짧은 기간밖에 지속되지 못하였다. 또한 파업에 참가한 평균 인원수를 보더라도 대체로 100명 내외로 예컨대 1930년대 전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참가하였다.

이처럼 전자동원체제 아래에서 노동자들은 전쟁에 반대하는 구호를 공개적이고 전면적으로 제기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일제 침략전쟁의 본질을 폭로하면서 그에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폭동 등의 공개적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은 이 시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태업이나 집단탈주·기계파괴 등과 함께 노동대중의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었으며 다분히 반일·반전적 성격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은 일제의 군수물자 생산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침략전쟁의 수행에 크나큰 차질을 초래하였다. ‘군수생산력’을 파괴하는 것이 일본의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고 일본을 패전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공장과 광산에 대한 교란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sup>32)</sup>

이 시기에 일어난 주요한 파업으로는 먼저 1938년 1월 해주 시내의 시멘트공장을 비롯한 중요 공장과 기업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파업을 들 수 있

32) 변은진, <日帝末 조선인 노동자층의 전쟁 및 ‘軍需生産力’에 대한 인식과 저항—서울지역 노동자를 중심으로—> (《郷土서울》 57, 1997), 224~225쪽.

다. 이 파업은 동일 부문 노동자들의 진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3월에는 또한 청진 부두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으며, 5월에는 봉산 마동 시멘트공장 노동자들이 인근 지역의 농민들과 함께 공동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곧이어 같은 달 5월에는 평북 厚昌광산 노동자들이 5·1절 파업시위를 벌였으며, 부산 동래의 스미도모(住友)광산 노동자들 또한 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6월에는 인천 부두 노동자 1,200명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동맹파업을 단행하였다. 7월에는 평양제사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공장주의 가혹한 착취와 민족적 차별대우에 불만을 품고 임금을 제때 지불할 것과 합숙시설의 개선,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식사 차별대우 철폐, 일본인 악질 감독의 축출과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반대, 그리고 일요일의 휴식 보장 등의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태업에 들어갔다. 12월에는 대구 각 직조공장에서 290여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1939년과 1940년에 일제의 폭압이 미증유로 강화된 조건 아래 전국의 주요 공장지대에서는 반제·반전적인 노동자 파업과 태업이 연속적으로 전개되었다. 1939년 1월 평양의 군화제조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동맹파업을 단행한 것을 비롯하여 3월에는 100여 명의 신의주 자동차 운전수들이 파업에 들어갔으며, 함흥 본궁 화학공장에서는 뼈라 살포 사건이 발생하였다. 6월에는 인천 日本車輛工場 철공부 노동자들과 신의주 펄프공장 노동자들이, 8월에는 150여 명의 평양 동우고무공장 노동자와 평북 후창광산의 노동자들이, 그리고 10월에는 경성고무공업소 여성노동자 200여 명이 임금인상과 대우개선을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파업에 참가하는 등 파업과 태업투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1940년에 들어 와서는 1월에 경남 마산의 조면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2월에는 충남 靑陽의 美良광업소에서 200여 명의 광부들이 청부제에 반대하여, 그리고 4월에는 전북 長水의 일본 고주파 明德광산과 소화전기공업 장수광업소 광부들과 日華제유 목포공장의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에 들어갔다. 5월에는 평북 碧潼의 일본광업 發銀광산 광부들과 목포 조선면화회사 노동자들이, 이어서 6월

에는 경남 부산에서 大森건구제조공장 노동자들과 전남 海南의 소화광업 해남광산 3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이어서 7월에는 충남 靑陽의 中外광업 九峯광업소 광부들과 충북 永同의 黃鶴金山 광부들이, 그리고 8월에는 부산의 피북회사 직공들이 파업에 참가하였다. 10월에는 인천 부두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공업용 석탄 하륙작업을 중지하는 집단적 파업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서울 지역 각 군수공장들의 전시 군수품 생산에 타격을 주었다. 이듬해 1941년 2월에는 평북의 후창광산 광부들과 아울러 3월에 경남 부산의 조선鈎針공장 노동자들이 잔업수당의 증액을 요구하고 파업에 들어갔으며, 이어서 같은 달에 황해도 新溪의 조선석유광업회사의 광부들이 임금지불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단행하였다.<sup>33)</sup>

1940년대에 들어오면서 전국 각지의 노동자들은 일제의 전시정책을 파탄시키기 위한 각종 형태의 반일·반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예컨대 1940년부터 1943년 사이 문평제련소 노동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제의 전시 생산을 파탄시키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노동자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은밀한 방법으로 태업을 진행함으로써 제련소의 전시 생산을 지속적인 방식으로 저하시켰다.<sup>34)</sup> 특히 1941년 5월 중순부터 노동자들은 임금인상과 대우개선 등의 요구조건을 제기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소규모로 태업을 진행하였다. 같은 해 봄에는 종연방직 신의주 직포공장 노동자들이 일제의 차별대우에 격분하여 집단적인 태업을 단행하였다. 1942년 5월에는 동방광산 東山깡광부들이 일제의 전시 징용정책과 임금채불 및 차별대우에 반대하여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가혹한 노동조건과 저렴한 기아임금에 오랫동안 불만을 품어 오던 400여 명의 노동자들은 악질 감독이 노동자들을 구타한 것을 계기로 취업을 거부하는 한편 광산 사무실과 선광장을 비롯한 시설물들을 파괴하여 버렸다. 노동자들의 폭동적 진출은 이후 광산이 한 달간 휴업상태에 있을 정도로 타격을 주었다.

33) 朝鮮總督府 警務局, 《第79回帝國議會說明資料》(1941).

34) 이에 따라 문평제련소의 기본 생산지표였던 粗銅은 1940년의 1,925톤으로부터 1941년에는 1,302톤으로, 1942년에는 1,101톤, 그리고 1943년에는 1,017톤으로 감소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공사 방해나 방화·폭발·시설과 기계의 파괴 등은 반일·반전 투쟁의 성격을 띠고서 광범하게 전개되었다. 1943년 여름 회령광산에서는 탄광 인입선 폭파사건이 일어났으며 연이어 탄광 역구내에서 마초 160톤이 완전히 소각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남포제련소 노동자들도 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계파괴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원광산 노동자들은 광산의 기계와 설비를 파괴하는 운동에 가담하였다. 또한 같은 해 여름 부산의 조선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공장 6동과 주택 9채가 소각되었고, 9월에는 조선항공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비행기 1대, 글라이더 2대, 오토바이 1대가 소각되었는가 하면 평남 선천에서는 帝國섬유 아마공장이 소각되어 버렸다. 이어서 12월에는 군수용 석탄을 생산하던 강원도 삼척탄광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군수공장인 일진축산 청주공장이 소각되어 버린 사건도 있었다. 특히 본궁 화학공장에서는 1942~1944년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가스탱크가 폭발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1944년 온성탄광 노동자들이 방화한 저탄장은 거의 1년 동안 계속 불타 올라 이로 인하여 4만여 톤의 석탄이 재가 되었다. 노동자들의 이러한 은밀하고도 지속적인 투쟁은 일제의 전시생산과 전시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이와 아울러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일제의 패망이 가까워졌다는 정세판단 아래 결정적 시기에 무장봉기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였다. 일제의 비밀경찰 문건에 의하면 평양철공 노동자들은 1941년 1월에 비밀리에 자체 철공소를 설치하고 무기를 제작하여 결정적 시기의 반일 무장폭동을 계획하였으며 함북 계림탄광의 노동자들도 비밀 근거지를 두고 무장투쟁을 통한 반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경남 진주에서는 노동자와 학생들이 가까운 시일에 민족해방 전쟁이 도래할 것이라고 보고 항일유격대에 호응, 쫓기하기 위하여 만주로 갈 것을 계획하고 투쟁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극히 한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반일 무장폭동의 준비는 부산이나 공주 등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항일무장투쟁에 노동대중이 직접 참가하려는 움직임은 1943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물론 이 시기 반일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양상이 북한학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전국 각지의 혁명적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농민과 청년·학생들을 포함한 “광범한 인민대중 속에서 진행되었고, 따라서 대세의 움직임으로 되었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것은 다분히 북부 조선을 중심으로 한 특정 지역이나 노동자층의 일정 범주에 제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평양 등지의 전기 부문 노동자들의 반일결사와 일제의 강제징병에 반대하는 투쟁, 함남 북청 양복직공들의 무장봉기에 대한 참여 결의, 평양 병기창 노동자들의 반일투쟁 뼈라 살포 등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전국 각 지역에서 무장폭동에 호응하거나 그것에 대비하려는 준비들이 진행되었다는 사실 역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1943년부터 1944년에 걸쳐 청진지구에서 전개된 혁명적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러한 지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를 제공한다.<sup>35)</sup>

전시동원체제의 억압이 더욱 가중되어 가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은 1943년 이후에 들어오면서 더욱 완강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었다. 예컨대 1943년 여름에 나진의 부두노동자들은 일제의 민족적 탄압과 차별대우에 반대하여 파업을 단행하는 등 반일·반전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청진의 부두 노동자들도 여러 형태의 태업을 조직하여 일제의 전시 수송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또한 일제의 주요 군수공장의 하나였던 성진 고주파공장 운반노동자들은 1943년 6월과 1944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단행하였으며 청주 화학공장에서도 파업과 태업들이 빈번하게 전개되었다. 그런가하면 함흥 편창제사의 여성노동자들은 1942년 7월과 1943년 9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단식투쟁을 통하여 일제의 전시 생산에 타격을 주었다.

홍남 비료공장을 비롯한 홍남의 공장들에서도 파업과 태업투쟁이 계속되었다. 당시 대표적인 군수산업지대였던 홍남에는 수백 명에 달하는 정사복 경찰과 헌병, 스파이들이 거미줄처럼 깔려서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하였고, ‘요시찰인’으로 등록된 혁명적 노동자들의 뒤에는 늘 경찰과 밀정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이전과 같이 대규모의 공

35)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강현욱, 앞의 책, 259~263쪽.

개적인 파업을 전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작은 규모의 투쟁형식들이 선호되었으며 선동이나 태업과 같은 다른 방법들을 통하여 일제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비료공장의 인산 부문의 보크사이트 직장 노동자들은 3개월이면 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을 고의적으로 1년 이상 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변색된 오제품을 생산하였다. 또한 군수품 생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황린 제조 부문에서는 노동자들의 태업 및 작업 방해 활동으로 인하여 1943년에 시험생산까지 한 제품이 해방될 때까지 전혀 생산되지 못하였다.

본공의 화학공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의 투쟁이 전개되었다. 특히 이 공장의 노동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민족적 멸시에 반대하는 투쟁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전개하였다. 카바이트 직장 노동자들이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일본인의 모욕에 격분하여 집단적인 투쟁을 전개한 것을 비롯하여 징용반대투쟁, 악질 일본인과 그에 야합하였던 조선인들에 대한 불의의 습격 등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투쟁은 본공 요업공장에서도 있었다. 1943년 이래 이들은 요업 공정에서 중심을 이루는 승강기를 파괴하여 버렸으며 제품원료의 배합물을 고의로 어겨 제품의 질을 악화시켰다. 또한 목조공장 노동자들은 목형을 오작 시공함으로써 제품생산에 타격을 주었으며, 1944년 9월에는 일본인이 조선인 노동자를 구타한 것을 계기로 공장 시설들을 파괴하여 버렸다. 1944년 봄에는 운곡광산에서 노동자들 파업을 조직하여 일제의 전시생산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같은 해 6월에는 朝日경금속 주식회사 기양공장 노동자 수천명이 일제의 민족적 멸시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한편 1930년대 후반기 이후 주요 건설공사장이나 항만, 군수공장 등에서는 강제로 동원되어 온 노동자들이 탈주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전시체제의 극심한 억압 아래서 표출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에 의한 저항의 또 다른 형식이었다. 1940년대에 들어오면서 노동자들의 이러한 집단적 탈주투쟁은 더욱 격화되어 보편적인 양상을 띠고 전개되었다. 예컨대 일제의 중요 군수산업지대인 함남에서 각 군수 시설 공사장·철도 공사장 등에 강제로 끌려온 ‘알선 인부’들 중 60%가 도주하여 버렸다고 한다. 조선총독

부의 보고자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전력증강을 위한 중점적 노무활용 대책에 따라 중요 공장·광산·사업장 등에 대한 관알선·징용·근로보국대 기타에 의한 노무의 수요는 더욱이 긴급을 요하게 된 실정인데, 鮮内外를 통한 노무 수요의 漸高에 따르는 이의 송출은 더욱더 곤란하게 되고 있다. 즉 최근의 노무송출 강화에 따라 주요 노무공급원인 농촌에서는 식량공출의 강화와 아울러 기타 시국의 중압 때문에 실생활이 궁핍화하고 있으므로 노무 송출에 대한 기피적 경향이 농후하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反官의 기운도 높아졌다. 노무 송출에 대한 집단 기피, 수송 도중의 도망, 노무 관계 관공리에 대한 폭행·협박 사범 기타 비협력적 내지 반관적 특수사건이 상당히 다발하고 있어 치안상으로도 엄중한 경계를 요하고 있다(近藤鈿一 編, 《太平洋戰下の朝鮮》, 1961, 55~56쪽).

이와 같이 강제 노무동원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빈번한 탈주나 결근으로 표출되었다. 일제의 공식자료를 보더라도 1940년대 초 광산노동자의 노동이동률은 월평균 약 11%였다. 광산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월평균 노동이동률이 무려 50%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총독부 사정국 노무과의 조사에 따르면 1942년 조선의 공장 및 광산에서 노동자 이동율은 공장에서는 평균 7.5%, 광산의 경우가 10.2%였으며, 출근율은 공장의 경우가 매일 평균 80%, 광산에서는 75%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낮았다.<sup>36)</sup>

이와 같이 노동자들의 높은 이동율과 낮은 출근율은 대륙침략을 수행하기 위한 일제의 군수생산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였다. 조선총독부가 제86회 일본제국의회에 제출한 예산설명자료의 보고에 의하면 조선 광부의 1인당 채탄량은 1942년도에 연평균 101톤에서 이듬해인 1943년에는 95톤으로 저하되었다. 공장 노동자의 경우를 보더라도 1936년 불변 가격을 100으로 할 때 노동자들의 1인당 생산액은 1938년에 96, 1941년에는 81, 1943년에는 74로 급격히 저하하고 있었다.<sup>37)</sup> 이러한 맥락에서 일제는 공장과 광산노동자의 높은 노동이동률과 낮은 근속기간, 출근율 등을 군수생산력 증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고, 법령 등의 제정을 통한 규제와 아울러 강제노동을 강압

36) 김윤환, 앞의 책, 328~329쪽.

37) 김윤환, 위의 책, 327~328쪽.

적으로 추진하였지만, 일제가 패전하는 1945년까지 높은 노동이동율을 낮추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던 것이다.

노동이동형태로 표출된 노동자의 ‘저항’은 비록 적극적인 형태는 아니었지만, 생산현장에서 노동통제효과를 상쇄시키는 주요한 요소였다. 탈주나 결근 등의 노동이동률이 높았던 것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통제에 대한 노동자의 개인적·집단적 저항이 그만큼 격렬했던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무단도주·결근 등이 발생한 주요한 원인은 결국 일본이 조선에서 행한 ‘인간 사냥’식의 노동력 강제 동원정책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으며, ‘감옥’으로 일컬어졌던 생산현장의 작업환경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 실질임금의 감소와 노동시간의 연장, 노동재해의 격증, ‘병영화’된 노동통제, 그리고 만성화된 빈곤과 식량의 부족에 따라 노동자들은 생산현장으로의 영구적 이탈(개인적·집단적 탈주)이나 일시적 도피(결근)를 시도했던 것이다.

일제하의 노동운동은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급속한 발전과정을 밟아 왔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보더라도, 지역내의 각종 직업을 가진 노동자들을 망라한 지역별 노동조합에서 동일 직업을 가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별 노동조합으로, 그리고 동일 산업 부문의 노동자들을 조직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짧은 시기 내에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서구 노동운동사에서 이러한 변화가 백 년 이상의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일제하의 노동운동은 비교적 단기간에 압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던 것이다.

서구 노동사와의 비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일제하 노동운동의 중심은 서구의 사례에서처럼 장인이나 직인층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운수·운반, 토목·건축 등의 부문에서 일용노동형태로 고용되었으며, 1930년대 이후에 비로소 공장노동자가 의미있는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미 보았듯이 숙련공 중심의 공장노동자가 중심이 되었던 서구에서의 개량주의적 노동조합과는 달리, 식민지에서 개량주의와 어용 노동조합이 주로 운송이나 운반에 종사하는 일용노동 중심의 비공장 노동자들에 의해 조직되었던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이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1930년대 이후의 노동운동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는 1920년대 중·후반 이래 비교적 일관되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쳐왔다. 물론 사회민주주의나 무정부주의와 같은 사조들이 전혀 기반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구의 노동운동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은 미치지 못하였다. 1930년대 이후 개량주의에 반대하는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이 시기 노동운동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그것의 전통은 1945년 이후의 이른바 해방정국의 노동운동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노동운동에서 단일한 이념의 지배는 한편으로는 강력한 응집력을 제공하고 운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운동의 유연성을 확보한다거나 비판·견제를 통한 발전의 가능성을 차단하였으며, 비록 점차 극복되는 양상을 보였다고는 하더라도 노동운동의 내부에서 심각한 파벌투쟁의 양상을 노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이 시기의 노동운동에서 지식인들이 차지하는 역할이 컸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노동운동이 발전하는 초기에는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일제하의 노동운동이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지식인들이 일정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 1930년대 전반기로 이행하면서 이른바 합법영역에서의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노동운동에서 노동자들의 주체적 역량이 점차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1930년대 이후 혁명적 조류가 노동운동의 주류를 이루게 되는 시점에서는 대중적 파업들이 전반적으로 억압됨에 따라 지하활동을 통한 지식인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의식이 고양되어 가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가혹한 탄압을 배경으로 지식인들이 점차 탈락함에 따라 노동운동에서 지식인들의 역할은 간접적이고 부차적인 성격으로 점차 변화하였다.

또한 이 시기 노동운동은 일제의 식민지배에 반대하고 민족 독립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서의 성격을 지향하였다. 조선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민족별 차별임금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보듯

이 식민지 상황에서 노동운동은 민족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민족차별에 대한 반대를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었다. 1930년대 후반 이후에 노동자들의 저항은 반일·반전 운동의 형태로 지속되었으며, 1940년대 이후 전쟁에 반대하는 구호를 공개적이고 전면적으로 제기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은 일제의 침략전쟁의 본질을 폭로하면서 그에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폭동 등의 공개적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 시기 노동자들의 요구는 비록 그것이 단순한 임금인상이나 대우개선 등이라고 하더라도, 일제 식민통치의 전복과 그를 위한 일제의 무장해제, 강제 군사복무와 군사교육에 대한 반대 및 식민지의 경제적 수탈에 반대하는 요구가 깔려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 노동운동은 국제주의적 연계와 영향 아래서 전개되었다. 이 시기 노동운동의 주류가 단일한 이념에 의해 지배되었던 사실을 배경으로, 일본과 러시아로부터 사회주의 이념의 도입은 노동운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으며, 1930년대 후반 이후의 이른바 비합법운동기에는 코민테른이나 프로핀테른, 태평양노동조합, 또는 중국이나 일본의 당조직들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노동운동이 전개되었다. 일제하 노동운동에서 나타났던 이러한 국제주의적 지향은 한편으로는 일제하의 노동운동을 세계적 차원에서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설정함으로써 노동계급의 국제연대와 공동의 관심을 추구하는데 기여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문제와 관련한 식민지 차원에서의 문제제기와 해결방식을 고안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노동운동의 토착화라는 과제를 소홀히 하고 말았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일제하의 노동운동은 일제에 의한 식민지적 착취와 종속에 반대하는 경제적 성격과 아울러 민족차별에 반대하고 반일민족해방을 지향하는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에 지식인이나 민족운동가들의 원조와 영향 아래에서 성립하였던 이 시기의 노동운동은 점차 노동자들 스스로의 역량에 의한 주체적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1945년의 해방 이후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이 시기 노동운동은 해방 이후의 노동운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과 생활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적

임무와 아울러 식민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정치적 지향은 해방 이후에는 노동 영역에서 민주적인 권리들과 아울러 사회 일반의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운동으로 계승되었다.

〈金隰一〉

### 3. 여성운동

#### 1) 1930년대 여성운동사 기술의 관점

역사연구는 과거와 현재의 관계맺기이다. 역사연구는 곧 과거는 아니므로 늘 알게 모르게 재해석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여성사·여성운동사 만큼 현재의 시각이 많이 반영되는 것도 없다. 연구자에 의한 이 관계맺기는 현재 상황에서 비롯된 요구(시각)에 중심을 둘 것인가 아니면 당시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재해석할 것인가의 사이에서 아슬한 줄다리를 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이 시대가 낳은 새로운 관점, 새로운 역사 쓰기를 주창하는 여성사·양성사(젠더사)의 시각을 수용하면서도 당시 우리 민족, 여성들이 처한 상황이란 것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여성운동을 기술하고자 한다.

여성운동은 여성들이 여성해방이념을 갖고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적 활동을 일컫는다. 여성운동은 자본주의 출현과 거의 시기를 같이 하며, 자본주의하 여성운동은 자본주의 사회구조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여성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한국의 여성운동은 일제 강점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여성운동의 주체 형성이나 여성해방이념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에 전민족적 과제가 덮여씩워진 것이어서 처음부터 지난한 과제를 안고 출발하였다. 특히 1930년대 이후는 전시체제로의 진행 속에서 일상의 삶 자체가 일제의 통제와 폭압 속에 있었고 이 속에서 자유롭고 자율적인 공개적 활동이란 애초부터 봉쇄되어 있다시피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여성운동이 크게 진전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 독자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성 독자적 조직체계를 갖는다. 그러나 여성운동은 꼭 독자적인 여성단체가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운동이 미숙한 국가나 또 전쟁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여성 고유의 문제해결을 위한 여성운동은 후퇴침체하고 활동가들은 아예 권력의 요구에 복종해 버리기조차 한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 속에서 볼 때 여성해방의 전망과 이념을 갖고 있는 민족운동이나 사회운동의 각 부분운동, 즉 노동운동·농민운동·청년운동 등에서의 여성조직 활동도 여성운동의 범주 속에 포함된다.

1930년대 여성운동의 주된 흐름이 독자적인 단일 여성단체를 갖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1920년대나 이후 시기의 여성운동과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짧은 여성운동 역사의 미숙성과 일제 전시체제란 두가지 난관을 헤쳐나가야 했던 조건 속에서 여성노동자·여성농민이 운동의 최전선에 서서 그들의 주체적 요구를 제기하였던 점과 여성지식인들이 여성노동자·여성농민 속으로 들어가 결합해 나간 점은 1930년대 여성운동에서 주목할 사실이다.

또 서술상의 문제로 지적할 점은 제한적이거나 다양한 언론물이 허용되던 1920년대와 1930년대 이후는 다르다는 것이다. 1930년대 이후는 광범한 대중투쟁으로 드러나 기사화되거나, 비합법적 혁명운동의 경우는 역설적으로 운동가들이 검거되어야 검거기사나 재판과정의 기록을 통해서 운동의 내용이나 규모의 일단을 볼 수 있다. 분단된 현실은 더욱 당시 상황 파악을 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기의 여성운동의 전체적 모습이 상대적으로 소략하고 파편적이며 여성 주체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한계를 지적해 두고자 한다.

## 2) 1930년대 여성운동 변화의 기폭제로서의 근우회 해소

權友會 해소는 단순한 사건은 아니었다. 독립적인 여성단체의 불안한 독자적 발전의 노력이 민족해방 혹은 계급해방운동 속으로 흡수, 수렴되어진 것이었다. 당시 이러한 흐름에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sup>1)</sup> 당시 주된 세력은 아무래도 사회주의운동의 국제노선에 따라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던 층

이었다. 근우회 해소가 정식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소에 대한 조직적 반대대응은 거의 보이지 않은 채 여성노동자·농민의 대중적 요구와 투쟁은 거세져 가고 조직적 운동은 근우회 해소론에 입각하여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이해를 위해 근우회 해소 시점의 상황과 해소론을 간단히 살펴보자. 근우회 활동은 초기에는 조직정비와 더불어 선전계몽 활동에 노력하였다. 1929·1930년 활동이 본래도에 오르자 구체적인 여성의 요구를 제시해 냄으로써 미조직 여성의 조직과 여성운동방향을 선도하였다. 그리고 조직을 다지고 근우회의 이념을 선전하기 위해 본부 간부들은 지방 순회 강연을 하고 《근우》를 발간하였으며, 지회에서는 야학을 설치하고 운동가 양성을 위한 부인강좌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노동·농민 여성의 조직화에 노력하여 노농부반을 설치하였다.

지회는 각 지역여성을 조직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지회는 정치문제를 다루어 일제의 탄압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회는 단순히 본부의 운동방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부에 요구하여 勞農部를 설치하게 하고 여성노동자 관련 결의사항들을 요구하는 등 근우회를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성진지회는 노농부인의 조직과 借家人同盟의 조직, 무산아동 보호활동을 벌이는 등 대중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업을 펼쳤다. 이외에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동래와 흥원 지회 등에서 여성노동자와 여성농민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의 노농운동에 참가하였다.

근우회는 여학생운동 지원활동에도 공을 들였다. 아직 민중 속에서 여성지도자가 나오지 않았던 상태에서 여학생들은 각 부분운동에서 선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근우회가 여학생운동을 지원한 대표적 예로는 1930년 1월 광주학생운동을 지원하여 벌인 서울 여학생 시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시위에서 許貞淑·朴次貞 등 근우회의 사회주의계 인물들이 연

1) 金貞媛, 〈현단계 여성운동을 여시아관〉(《批判》 1, 1931. 5), 92~94쪽. 김정원은 청진지회 대표로 1930년 근우회 중앙집행위원이었다. 아직 존재의의를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그대로 존속하면서 노농부녀운동을 중심으로 나아가자는 의견이었다.

루 검거됨으로써 근우회는 보수적 입장을 지닌 측이 실권을 쥐게 되었다. 1930년 12월 확대집행위원회에서는 근우회의 운동방침을 수정하여 계몽운동에 매진키로 하여 노농부를 폐지하고 대중성을 갖출 수 있는 중요한 조직체인 반 조직을 규약에서 삭제하였다.

근우회의 우경화는 당시 新幹會・朝鮮靑年總同盟 등에서의 대중운동에 대한 반성과 방향전환 논의와 더불어 해소론을 야기하였다. 당시 제기되었던 근우회 해소론을 정리하면 첫째 근우회는 소부르주아적이고 투쟁성을 상실한 개량주의적 단체이므로 즉각 해소하고 그 역량을 노농운동 강화에 돌려야 하며, 둘째 성별 조직은 계급역량을 분할시킨다는 것이었다. 근우회 본부에서는 해소논의를 위한 전국대회를 시도하였으나 유회되어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근우회 해소는 당시 전체 사회주의운동의 방향전환과 같은 구도 속에 있었고, 한편으로는 실제로 당시 민족개량주의의 대두, 민족내 계급갈등의 격화 등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직방식이 분출하는 민중여성운동을 감당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해소 이후의 운동방향을 충분한 논의도 못한 채, 다른 조직체들의 해소 움직임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해소하고 말았다는 것은 중대한 실책이었다. 여성대중의 기반을 확대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었지만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으로 조직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고려도 거의 없이 해소하였던 것은 여성운동의 역량강화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 지도역량이 크게 부족한 여성운동이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였다.

사회주의운동의 흐름 내에서 반제동맹 같은 민족부르주아지나 중간계급을 위한 조직구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의 좌경적 운동방침은 여성들이 일상적 생활 속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후 여성지식인층의 활동은 아예 운동전선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1910년대와 유사하게 직업부인의 친목활동이나 YWCA(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기독교 여자청년회), 천도교 여성단체 등의 종교단체와 학교 등의 활동영역에 갇히게 되다시피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지 않고 가능한 방향으로의 활동선택 방법이었지만, 또 일제의 체제내적 회유의 늪에 빠지는 것이기도 하였다. 합법과 비합법 공간의

적절한 활용이나 결합을 통한 다양한 운동방식의 부재가 이 시기 여성운동이 계급중심적 운동으로만 치달고 다양한 여성을 운동선으로 끌어내는 여성운동을 펴 내지 못한 중요한 이유였다.

### 3) 1930년대 전반기 여성운동

1920년대 말에 이르면 일제는 만성적 불황과 자국내 민중운동의 격화, 조선과 대만 등지의 민족해방투쟁의 고양으로 위기에 직면하였다. 1929년 공황을 계기로 한층 더 악화되었다. 일제는 이러한 위기를 중국침략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여 병참기지로서의 조선에 대한 수탈을 가혹하게 하는 한편, 조선에 대한 파쇼통치를 한층 더 강화해갔다. 일제는 고조되는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군대·경찰제도뿐만 아니라 재향군인단체·소방단·청년단 등의 탄압보조기구를 정비, 강화했다. 또 1928년에는 <치안유지법>을 고쳐 운동가들을 검거하였고 집회·강연회 등을 금지시켜 각종 사회운동·사상단체를 해체 내지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간회와 근우회 해소가 본격화되고 신간회·근우회에 모여 있던 역량들이 공산당재건운동과 혁명적 노동조합운동,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으로 재배치되면서 여성부를 설치하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 (1) 여성노동운동

일제시기 여성공장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방직·제사·고무·정미업에 종사하였다. 1920년대 여성노동자의 투쟁양상을 보면, 처음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항하여 도망·탈주라는 소극적 저항을 비롯하여 직접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이때 가장 많았던 것이 임금인상, 임금인하 반대 등의 생존권적 차원의 투쟁이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 즉 일본인 남성감독에 의한 폭행·구타·희롱·강간 등에 반대하는 투쟁도 많았다. 이러한 대중적 투쟁 속에 여성노동운동이 활성화되고 여성단체의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면서 노동운동단체 내에서도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여성들이 주도한 노동쟁의에서도 임금문제가

가장 기본적이었지만 봉건허례타파, 인신매매금지, 공창금지, 미성년남녀의 결혼금지, 여성 청소년에 대한 차별철폐와 같은 여성 일반의 요구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불’, ‘유년 및 부인의 야간작업·갱내 위험작업 금지’ 등 여성 노동자의 특수 요구를 당면 요구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여성노동문제에 대한 즉자적 인식에서 벗어나 차츰 근본적인 여성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노동단체 내에서 여성노동문제를 제기하고 여성노동자의 조직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구조, 즉 여성부의 출현까지 나아간 경우는 거의 없었다.

1930년대에도 여성공장노동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30년대에도 여성노동자가 집중되어 있었던 것은 방직·고무·식료품공업이었다. 1931년 말 방직공업에서 전체 노동자(10인 이상 공장) 중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20.7%(동일업종 전체에서 78.8%), 전체 여성노동자의 59.0%, 방직여공 중 15세 이하 유년여공은 24.2%였다. 고무공업으로 대표되는 화학공업에서는 4.5%(29.6%)·12.9%·1.4%, 식료품 공업에서는 7.8%(30.0%)·22.1%·5.1%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체 공장노동자 중 여성노동자는 35.6%였다.<sup>2)</sup>

1930년대 일제의 혹독한 탄압과 감시 속에서도 여성노동자의 대중투쟁과 여성노동자의 조직화 등을 통해서 여성노동운동은 일단의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여성노동자들의 자발적 투쟁은 물론 1920년대의 여학생과 여성운동가들이 노동현장 속으로 들어갔으며 노동운동에서도 여성노동자 조직이 노동운동의 발전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 미조직 여성공장 노동자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모든 노동조직에 반드시 여성운동을 위한 특별한 부문과 조직자의 설치, 그 구체적 조직형태로서 노동조합 내에 여성부의 설치가 제안되었다. 여성부의 설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개편과 함께 추진되었다.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개편이 가능한 노동조합은 기존 노동조합을 개편하여 여성부·청년부를 설치했다. 산업별로 개편이 불가능한 지역합동노동조합은 조합 내에 청년부·여성부를 두어 미조직 노동자를 흡수하고 계급역량을 강

2) 高橋龜吉, 《現代朝鮮經濟論》(千倉書房, 1935), 420쪽 자료로 작성.

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많은 경우 당재건운동과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 진행되었다. 이 때문에 혁명적 노동조합조직운동은 노동자계급의 일상적 이익을 대변할 뿐 아니라 조선혁명에 부가된 정치적 임무까지 수행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인식은 전북의 공산당재건설준비위원회에서 작성한 정치테제에서 잘 볼 수 있다. 즉 ‘성적 차별의 철폐, 결혼법 및 종족법 개정에 의한 법률상·경제상 남녀의 절대평등, 일체의 봉건적 결혼반대 및 결혼자유, 봉건적 가족제도 및 억압으로부터의 부녀해방, 남녀의 교육기회 균등, 부녀특수교육 철폐, 남녀교육의 동일대우’ 등의 일반 민주주의 요구와 함께 여성노동자의 특수 요구, 즉 ‘부인의 야간 및 특별위험부문 노동금지·산전산후 각 8주간 휴양 및 휴양기간의 임금전액지불제도 확립, 부인노동에 대한 특별입법보호 및 시설획득과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모성 승인, 산모 및 유아에 대한 특별한 사회적 휴양시설·공공탁아소 및 조산원의 완전설치’ 등 ‘모성보호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특수적 요구에 관한 항목에서도 “부인·청년·성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의 지불”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1920년대 여성운동의 성과와 이후 운동방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조직과정은 대체로 공장반-공장분회-(산업별) 지역적 노동조합-전선적인 산업별 노동조합의 건설과정을 밟는 것이었다. 그리고 농민조합과 반제조직 등 다른 부분 운동조직과 결합하여 민족해방운동의 핵으로서의 당을 재건해 갔다. 이것은 일정한 한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나간 것은 아니었다. 많은 경우가 하향적 조직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노동자·농민을 구체적으로 조직해 나가면서 조직을 강고하게 한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었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조직사업은 여성부를 설치하여 여성노동자를 혁명적 노동조합으로 묶어 세우는 방침을 취하고 있었다. 앞서 말한 전북의 공산당재건설준비위원회를 비롯하여 朝鮮左翼勞動組合 全國評議會組織準備會 등 대부분의 조직에서 부인부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조선좌익노동조합 전국평의회조직준비회(1931년 3월 24일 결성)는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각 공장에는 청년 및 부인직공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그들 노동자를 계급적으로 훈련할 필요상 좌익노조 밑에 청년부 및 부인부를 설치할 것<sup>3)</sup>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청년부 및 부인부를 설치하여 청년부는 조직부, 부인부는 생의부에 각각 소속시켜 활동하게 했고 부인부장에 정종명, 부인부원에 김상만을 임명했다. 그 외에 赤色勞動組合準備會・新義州工場勞動組合・大邱勞動者協議會準備會 등에서도 여성부를 두고 있었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조직사업은 여성노동자들이 몰려 있는 섬유공업과 고무공업 등의 경공업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시행되었다.

조직사업은 일반적으로 기관지를 비롯한 출판물을 통해서 조직원을 획득했다. 기관지는 조직을 사상적으로 통일하고 계급의식을 고취하는 데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기관지 발행은 1930년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활동가들은 기관지 외에 소책자・번역물・팸플렛・격문을 통해 선전선동활동을 수행하거나 일부 산업별 공장단위에서 공장신문을 발간하거나 발간을 계획했다. 독서회를 통해 계급의식을 고취하여 조직원을 확보했고, 강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학습과 토론, 정세파악 등을 통해 사상적・이론적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교육에는 주로 비합법적 서적과 출판물(기관지・팸플렛)이 중요한 교육수단이었지만 합법적인 신문과 잡지・소설 등도 이용되었다. 학습・교육하는 방식은 책임지도자 1명과 노동자 2~3명 정도가 1주일에 1~3회 정도 모여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장기간의 합숙방식도 자주 이용되었다.

활동가들이 훈련방법 중 가장 중시한 것은 파업과 기타 실천과정 등 대중적 투쟁을 통한 의식의 고양과 단련이었다. 그들은 기념일 등을 기해 대중적인 선전선동을 위한 격문을 제작하여 직접 공장・학교・공원・극장 등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배포해 훈련의 기회로 삼았고 파업투쟁을 통해 선진노동자를 단련시켜 나갔다.

위와 같은 방식의 활동은 權榮台 등이 중심이 된 조직활동<sup>4)</sup>에 잘 드러난

3) 김준엽・김창순 편, 《한국공산주의운동사》자료편 II(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80), 555쪽.

다. 이 사건은 권영태·李載裕(이 당시는 미체포)·이현상 등이 관여되었다. 여성들은 李順今·許均·李景仙·李元鳳 등 여학생운동과 여성운동단체에서 활동하던 이들이었다. 권영태는 1932년 12월 경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혁명적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할 때 노동자와 결합하고 있던 바로 이러한 활동가들과 연결되었다.

당시 이순금<sup>5)</sup>은 1933년 조선직물회사 인견공장에 취업하였고, 이원봉<sup>6)</sup>은 1934년 1월 경 경성 오리엔탈 고무공장에 취업하면서, 경성고무공장 여공 金福女·全順德과 연계하여 활동하였고, 허균(허마니아)<sup>7)</sup>은 1933년 7월 서울 고무회사공장·대륙고무공장 여공으로 공장내 그룹을 만들었다. 이외 이재유는 조선건직회사공장의 李晶淑·李貞賢 등과 연결하여 卞洪大 등과 함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조직에서는 고무산업 부문에 조직원을 배치하여 고무산업 《공장신문》을 발간하고 기관지 《프롤레타리아》를 창간하는 등 활발한 출판활동을 벌였다. 이렇게 발간한 기관지·팜플렛 등을 조직원들인 여성노동자들에게 배포했다. 또한 메이데이(May Day) 격문 약 1,000부를 인쇄하여 여성노동자들로 하여금 공장지대에 배포하였다. 이들은 서울고무·종연방직 제사공장 파업 등에도 관련되어 있었다.

이 시기 혁명적 노동조합이 관련된 파업투쟁은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확인되는 것 몇 개만 들면, 부산 조선방직의 파업을 배후에서 지도한 ‘衆樂會’, 대전 군시제사공업파업(1932년 11월)에 관여한 ‘忠南前衛隊’, 1931년 3월의 丸大고무공장 파업에는 慶南赤色勞働者敎育協議會, 1933년 4월 栗田고무공장 파업은 산업별 노동조합 釜山建設協議會 등이 각기 관련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계열의 활동가들에 의해 여성노동자를 의식화, 조직화하고 대중투쟁을 지도·선전·선동하였다. 이러한 여성조직의 활동가들은 근우

4)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사상회보》 제4호(1935년 9월 ; 고려서림영인본, 1988), 54~96쪽. 당시 깊게 관여한 이재유는 1936년 12월에 체포되었다(《사상회보》, 제16호, 1938년 9월, 263~274쪽). 이외 김경일, 《이재유 연구》(창작과비평사, 1993).

5) 이순금은 경성학생RS협의회와 반제동맹에 관련되었고 李觀述의 누이동생이다.

6) 學生前衛同盟사건에 관련되어 1930년 5월 검거당했다가 출옥하였다.

7) 허균은 근우회 京東지부원이며 中央靑年同盟 북구지부 집행위원이었다.



회 등 기존 여성단체의 활동가도 소수 있었지만 학생운동을 통해서 단련된 여학생 출신이나 여성노동자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성지식인층 활동가들은 1920년대 운동가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 학내에서 독서회활동을 통해 의식화되고 동맹휴업 등의 투쟁경험을 통해 단련된 그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 대중 속으로 투신하여 혁명적 노동운동에 종사하였다. 그들은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화, 지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활동을 한 결과 혁명적 노동조합의 최하부 조직인 반과 여성노동자그룹이 결성되었다. 노동자 출신의 활동가들은 투쟁이나 여러 활동 속에서 커 온 193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핵이었다. 이들의 지속적인 활동은 노동자운동을 더욱 강인하게 이끌었고 또 다른 활동가들을 키워낼 수 있었다. 이것은 당재건운동이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이 자주 탄압으로 와해되었지만 같은 공장, 같은 지역의 계속적인 파업투쟁 등의 노동자운동이 지속된 것은 바로 이러한 노동자출신 활동가들의 영향력이었다.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과거운동의 오류와 한계, 즉 파벌성의 문제와 대중과의 결합문제에 대한 치열한 반성을 통해 대중 속에서 파벌문제를 극복하고 상향식 조직 건설과정을 구체화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중과의 결합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부분이 전적으로 극복되었고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운동의 선진부대가 공고하게 자리잡아 나갔다.

그러나 1930년대 활동가들은 아래로부터의 통일전선만을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노동자만의 조직되어 운동기반이 축소되거나 혹은 여전히 상층 조직체를 구성하고 하부단위조직으로 나아가서 노동자나 농민 대중과의 결합이 약한 경우도 있었다. 1920년대와 달리 합법적 공간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비합법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혁명적 노동조합은 전국적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각각 고립적으로 운동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일제의 탄압 아래 쉽게 파괴되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여성노동자들의 파업투쟁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1930년대 전반기 방직·제사·고무공장에서 일어난 파업은 1,058건, 참가인원 77,578명으로 파업 건수나, 참가인원에서 1920년대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비록 1930년대 전반기 중화학공업이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함에 따라 노동운동의

중심은 점차 중공업 남성노동자로 옮겨지고 있었지만 여성노동자의 파업투쟁은 여전히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여성노동자들은 1930년 부산 조선방직·평양고무공장 총파업을 통해 폭발적인 힘을 분출시키면서 그들의 특수 요구를 명확히 제기하기 시작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요구가 잘 드러난 것이 1930년 8월에 일어난 평양지역 고무공장 총파업이었다.

1930년 8월에는 평양의 10개 고무공장의 1,8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갔다. 경제불황을 구실로 평양의 고무공장 자본가들이 담합하여 임금 1할 인하를 결의하자 “임금인하 반대, 해고 반대” 등 19개 조건을 내걸고 평양고무직공조합은 파업을 결정했다. 이것은 평양지역 전 고무노동자의 총파업으로 발전하였다. 파업의 확대는 고무공업에 국한되지 않았고 다른 업종에서도 지원을 받아 평양의 山十製絲公場·연초공장·전매국 등에서 지원투쟁 등 연대투쟁을 벌였다. 서울·부산 등지에서도 동정금·격문이 답지하였다.

사태가 커지자 신간회 평양지회에서는 崔允鉅, 平壤勞動連盟에서는 金裕昌을 전권위원으로 선정해서 조정에 나섰고 평양고무직공대회에서는 전권위원 12인을 선출해서 정의해결을 위임했다. 한편 파업노동자들의 투쟁기세가 약화되었다고 생각한 일제 경찰은 스스로 조정에 나서 공장주측의 타협안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승인을 강요했다. 결국 파업지도부는 일제 경찰의 조정안을 통과시켰고 8월 20일 개최된 대회에서 기만적 ‘협정’에 대한 파업노동자들의 분노는 폭발하였다. 노동자들은 조정안의 파기를 요구하고 12명의 전권위원을 불신임하고 노동자 출신의 새로운 투쟁지도부를 선출했다.

개량주의적·기회주의적 조합지도부를 구축하고 경찰조정안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임석 경관이 이러한 움직임의 지도자 姜德三을 검거하고 대회를 탄압하자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일제 경찰과의 직접적인 충돌로 넘어갔고 이것은 정치적인 투쟁으로 발전했다. 더욱이 8월 23일 이후 일부 공장주들이 노동자의 요구조건을 전부 승인하고 조업을 개시하려는 기색을 보이자 일제 경찰은 “노동자가 승리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공장주에게 승리를 보장해줄 것을 약속하고 강압적 수단으로 노동자의 파업을 탄압했다. 일제의 탄압강화, 기계공 정급직공의 복업, 고무공장의 조업개시를 계기로 투쟁지도

부는 8월 23일 이후 공장습격, 폭동투쟁으로 전환하였다.

8월 29일까지 공장습격 횟수는 16회, 습격참가자는 5,000여 명이나 되었으며 8월 26일까지 검속 당한 인원은 63명이었다. 공장습격과 폭동투쟁에서 여성노동자들의 활약은 눈부셨다. 8월 23일 300여 명의 노동자가 정창 고무공장을 습격하여 무장경찰대와 충돌을 일으켜 여성노동자 7명이 검거되었다. 8월 25일에는 남녀별로 결사대를 조직하였고 여성노동자 50여 명은 밤 11시에 세창공장을 습격하였고 같은 시간에 남녀노동자 30여 명은 동양고무공장을 습격했다. 8월 26일에는 여성노동자 300여 명이 대대를 편성하여 평양·동양·평양 등의 공장을 습격하여 여성노동자 27명이 구속되었고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경찰에 구타당했다.

노동자들이 점차 복직하고 신직공 모집이 늘어나 파업단의 조직적 행동이 어렵게 되자 평양고무직공조합은 9월 4일 파업단의 해체식을 거행하고자 했으나 금지당하고 자유취업선언과 함께 200여 명의 해고자를 내고 23일 만에 파업은 종결되었다.

평양고무공장총파업은 자본가들의 단결과 노동자의 자체분열로 실패했지만 직업별 노동조합의 한계에 대한 인식, 개량주의적 노동조합의 배격, 새로운 조직형태의 모색이라는 당시 노동운동의 일반적 과제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평양고무공장 총파업에서 여성노동자들의 활약은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총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중 3분의 2 정도가 여성노동자였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노동자, 특히 기혼 여성노동자의 투쟁력은 매우 높았다. 고무공업은 본래 여성노동자가 많았기 때문에 여성노동자를 조직하는 문제는 운동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 따라서 파업이 일어나기 전에 평양고무직공조합은 여자유급상무 채용건을 발의하고 있었다. 게다가 1931년 5월 평양노동연맹에서는 부인·청년부 확립의 건을 제기하고 부인부장으로 강덕삼 등을 배치하고 있는 것에서도 여성노동자를 조직화하는 문제를 노동운동의 관건을 이루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31년 다시 평양의 평元고무에서 5월 17일 “임금인하 반대, 검사원 축출” 등을 조건으로 여성노동자 47명이 파업을 단행했다. 평양고무공업동업회에 가입하지 않은 평원공장에서 임금인하를 시도하자 다른 자본가들은 이에 동

조하며 은밀히 지원하는 한편, 이에 맞선 노동자들은 직종조합을 통한 대응책을 강구함으로써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전선이 뚜렷이 형성되었다. 고무직종조합에서 5월 22·23일 소집한 직공대회에는 여성노동자 100여 명이 모였고 평원고무공장 여성노동자 김취선이 의장으로 등단했다. 여성노동자들은 공장을 점령하고 단식동맹을 조직하는가 하면 그 중 1명인 姜周龍은 을밀대 옥상에 올라가 “무산자의 단결과 고용주측의 무리를 타매하는” 연설을 했다가 9시간만에 끌려 내려와 검속되기도 했다.

여성노동자의 완강한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근공장에서 동정파업이 일어나고 조선노동평양연맹을 비롯한 각 사회단체·노동단체가 적극 원조를 결의하자 공장측은 여성노동자 49명 전부를 해고하고 노동자 18명을 새로 모집하였다. 이에 파업노동자들은 작업개시를 막기 위해 새로 모집한 노동자들이 전차를 타고 가려고 하자 일제히 전차길 위에 엎드려 전차를 정지시켰고 자동차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자 신작로 위에 드러누웠고 심지어 오물을 끼얹는 등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파업노동자들은 또한 모집노동자들에게 파업단의 비참한 상황을 호소하고 그들을 파업단 본부까지 동행해서 “우리는 2,300동무 대중을 위해 단식까지 하며 싸우는데 너희는 어째서 굴욕적 조건으로 일하는가”라고 하여 같은 노동자로서 연대를 호소했다. 검속된 강주룡은 80여 시간 단식투쟁을 하다가 6월 1일 석방되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선교리 파업단본부로 동료들에게 업혀가 단식을 계속하면서 해고 여성노동자들을 지휘했다.

고무직공조합 집행위원회는 이 평원공장 파업을 평양지역의 고무공장 노동자 모두에 관련된 중대문제라고 인식하고 6월 7일 백선행기념관에서 고무공업노동자 2,300여 명을 소집하여 ‘공동단식투쟁준비단체대회’를 개최하고 공동전선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노동자측의 완강한 투쟁이 진행되는 한편, 자본가측과 협상도 진행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신직공에게 종전 임금을 지불하라고 하여 임금인하를 취소시킨 후 2단계로 희생자를 1명도 내지 않도록 회사측에 요구하였다. 회사측에서는 임금인하 철회와 파업노동자와 모집노동자의 비례채용을 제안했지만 파업노동자들은 이 타협안을 거부했고 경찰은 파업단의 대표들을 구속했다. 파업단 대표가 구속되고 여성노동자들이

생활난에 허덕이게 되는 한편, 당시 평양지역에 살포된 격문으로 인하여 검거선봉이 일어나자 파업단의 기세는 급격히 약화되고 파업은 마침내 종결되고 말았다. 강주룡은 평원고무공장파업을 배후조종한 鄭達憲<sup>8)</sup>과 함께 체포되었다가 신경쇠약으로 보석 출옥 중 1932년 6월 13일 사망했다.

파업은 20여 명의 희생자를 내고 끝났으나 그 후 노동자 본위의 생산조합 설립운동으로 연결되었다. 1931년 12월 평양고무공장에서 해고된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자본위의 주를 모아 자본금 2만원을 조달하여 생산조합 평화고무공장을 세웠다. 이 공장은 생산기관의 사회화, 노동생활의 합리화, 이윤분배의 균등화를 목표로 전국 각지의 소비조합·협동조합을 주주로 모집하는 등 판로 확보에 노력했다. 그러나 공장이 세워진 지 일년쯤 되는 1932년 12월에 이르러 자금난과 함께 조합원과 조합장 사이에 분규가 일어나 공장은 다른 고무공장에 매도되었다.<sup>9)</sup>

평양고무공장 파업에서 여성노동자의 투쟁력은 다른 어느 곳보다 양적·질적인 면에서도 고양되어 있었다. 이들은 파업운동자대회에서 능동적으로 발언을 했고 공장습격에서도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평양고무공장파업은 이와 같은 여성노동자의 투쟁력의 고양을 기반으로 해서 임금인하 반대라고 하는 경제적 요구를 내걸고 일어났다. 특히 이들의 요구 중 주목되는 것은 ‘산전 산후 3주간 휴양 및 생활보장, 수유시간 자유’ 등 모성보호에 대한 요구를 했다는 점이다. 모성보호는 기혼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구였고, 고무공업은 기혼여성이 많다는 점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와 함께 파업의 주요한 요구사항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1931년 5월 28일 17개 요구조건을 내걸고 동맹파업한 경성방직

8) 정달헌은 1930년 9월에 조선에 들어와 李舟河와 1931년 4월 하순에 평양노동연맹좌익위원회를 조직하고 산업별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근우회 평양지부 서기였던 조영옥과 함께 평원고무공장과 정창고무공장에서 반조직에 착수하고 각 고무공장 여성노동자의 파업을 선도했다. 대표적인 여성노동자 투쟁가인 강주룡도 이러한 외부 조직선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은 당시 꽤 많은 노동자 대중투쟁이 직간접으로 당재건운동 및 노동조합조직운동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9)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유해정), 《한국여성사》 근대편(폴빛, 1992), 250~255쪽.

주식회사 남녀노동자 350명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수유 자유와 남녀소년노동자에게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지불’을 요구했다. 1931년 6월 5일 임금인하에 반대하고 파업한 인천 역무정미소에서는 ‘여직공 임금차별 반대, 여직공 수유시간 제정’ 등을, 6월 10일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파업한 인천 직야정미소에서는 ‘여성직공 임금을 남자와 같이 줄 것’을 요구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문제도 모성보호만큼이나 여성노동자에겐 중요한 문제였다. 이처럼 투쟁력의 고양을 기반으로 해서 여성노동자의 특수 요구, 즉 모성보호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요구는 파업투쟁에서 명확히 제시되기 시작했다.

## (2) 여성농민운동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8할 이상이 농민이었고, 그 반이 여성농민이었다. 가족단위의 농업생산노동에 종사하였던 여성농민은 생산물에 대한 관리권이나 처분권을 갖지 못하였다. 게다가 가부장적 요소가 강고하게 남아 있던 농촌에서 여성들 특히 빈농층 여성은 농업생산의 주체로서 노동비중이 컸다. 이러한 여성농민 앞에는 가부장제와 소작제 두 가지 해결과제가 있었다.

1920년대 초 이후 소작인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였지만 여성농민들은 농민운동에 공감했어도 농촌의 봉건적 인습과 여성들의 소극성에 의해 조직활동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예외적으로 농민단체 내에서 직접 활동한 여성농민들은 대부분 사회의식이 높은 과부나 중년 이상의 여성들이었다. 일반 여성농민들은 남편이나 남성 가구원이 운동에 몰두할 동안 집안의 대소사와 노동을 더욱 많이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1920년대 중후반기가 되면 암태부 인회같이 여성단체가 주체적으로 소작쟁의 참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근우회 지회나 192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는 청년동맹의 여성부에서 여성농민의 의식을 제고하여 조직하려는 노력이 부분적으로 기울여졌다.

한편 조직을 기반하지 않은 여성농민의 대중적 진출도 활발하였다. 당시 농민운동의 주요 내용은 소작권옹호, 일제에게 침탈당한 토지소유권 및 이용권의 쟁취, 수리조합과 같은 일제 수탈기구에 대한 투쟁 등의 생존권운동이었다. 그외에도 여성농민들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술한 검거자들이 속출할 때 가족·이웃·동료로서 구원활동을 벌이고 구속자 석방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여성농민의 투쟁은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많은 농민대중을 포용하고 있었던 사회주의적 농민단체에서는 여성을 운동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여성농민의 특수 요구까지 운동의 목표로 삼는데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이에 반해 농촌에 자기활동의 기반을 두고 있었던 민족주의측, 특히 종교단체들은 1920년대 후반부터 여성농민들을 적극 조직해 가기 시작하였다. 이들 단체의 성립은 다분히 사회주의를 의식한 결과이긴 하였지만 사회주의계에 비해 여성농민들의 생활실상을 비교적 생생히 이해하였다. 특히 朝鮮農民社의 《조선농민》에선 남성농민의 보수성과 가부장성에 대한 절절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그리고 천도교의 경우 지방 포단위에 여성부를 두는 등 여성농민에 대한 조직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나 조선농민사나 기독교계 활동은 목적 지체를 포교에 두고 여성농민문제의 근본적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문맹퇴치, 가정경영에 필요한 지식획득이나 개인적 차원에서의 경제 자립, 봉건적 인습타파, 의복개량 등 계몽적·개량적 방법만을 제시할 뿐이었다.

1930년대 여성농민운동은 이러한 운동의 경험 위에 전개되었다. 1930~1931년 신간회·근우회·조선청년총동맹 해소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 계급적 성향이 불분명한 이들 조직을 해소하고 계급운동진영으로 모아자는 입장이 제출되었다. 이에 따라 농민운동에서는 빈농을 중심으로 여성은 부녀부로, 청년은 청년부로 편제하여 농민조합에 배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함경도에 그 전형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1920년대와 달리 1930년대는 운동방침에서나 실제 활동에서도 농민조합에서의 여성부서 설치하는 꽤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여성부서의 설치는 조직위상에 따라 차이가 있어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서 설치되는 경우는 적고 또 농민조합이라고 해도 혁명적 농민조합을 조직하는 초창기에는 없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들어와서는 일제의 폭압으로 합법적인 활동공간은 매우 좁아지지만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에서 여성농민의 진출이 크게 눈에 띈다. 이것은 농민조합 내에 여성부의 설치와 관련되는 현상이다. 여성농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여성농민을 조직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관심은 여성농민이 활발한 활동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의식적인 조직 설치와 여성농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이기도 하였다.

함남 정평군을 통해 1930년대 초 지방운동단체의 변화양상을 간단히 살펴보자. 정평은 북부지방이 일반적으로 그러했던 것처럼 농민운동단체가 일찍 조직된 것은 아니었다. 1926년 경 사회주의적 청년단체가 결성된 이후 이것이 모체가 되어 1927년 定平農友會가 결성되고 1928년 2월에 朝鮮農民總同盟 定平農民同盟으로 개편되었다. 이때 정책으로 일반 민주주의와 농민에 관한 조항과 더불어 ‘조혼 및 강제 결혼 폐지’, ‘인신매매의 사실상 폐지’, ‘여자 천시관념철폐’ 등의 조항이 채택되었다. 1930년 6월 정평농민조합으로 바뀌고부터는 조직적인 차원에서도 여성에 대한 구체적 관심이 반영되어 농민조합에 청년부·부인부·소년부를 두어 정평청년동맹·定平女性同友會·신상여성동맹 등의 맹원을 농민조합으로 흡수한다는 방침을 취하였다. 행동강령에서는 여성관계내용으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불’, ‘부인과 청소년에 대한 봉건적 억압 타파’, ‘청년부·부인부·농업노동부·소년부의 설치 촉진’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하여 1930년 조합원의 대검거 직전 정평농민조합의 군 단위조직의 부서는 집행위원장·서기·상무집행위원·쟁의부·조직부·소비조합부·부인위원회·청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정평의 부인위원회는 부장과 부원이 모두 남자이고 상무집행위원들이 겸임하고 있었는데, 부인위원회가 설치된 것이 독특하다.<sup>10)</sup>

이같이 일반적으로 군 단위로 이루어진 1930년대 혁명적 농민운동은 군 단위에 지도부가, 면에 지부, 리동에 반과 같은 조직체계를 갖춘 것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부서가 설치되었는데, 조직부·선전부·쟁의부·구원부 등의 기능별 부서와 부녀부(부인부·부녀대책부 등 이름은 다양하다)·장년부·청년부·소년부·농업노동자부·화전부와 같은 계급계층별 부서가 같이 설치되었다. 정평 이외에 여성부서는 영흥·단천·흥원·문천·울진·성진·경성·온성 등의 혁명적 농민조합에서도 설치되었다.

그런데 부서 설치는 지방에 따라 달라 군 단위에만 설치되거나, 면·동리

10) 박경식 편, <정평농민조합검거개황 및 판결문> (《조선문제자료총서》 6), 485~549쪽



까지 설치되기도 하였다. 또 가장 기본적인 반의 인원도 비합법적 상황에 적합한 3~7명 정도인 경우, 20~30명의 대단위인 경우 등이 있었다. 부서가 반 단위까지 설치되고 반 인원이 당시 비합법활동에 걸맞게 소수로 구성된 곳은 영흥과 문천 등이었다. 1932년 영흥 2차농민조합은 3명의 반위원회에 소작부·노농부·청년부·부인부가 설치되었고, 1934년 문천농민조합준비위원회는 각 리에 3명을 단위로 한 장년반·부인반·청년반·소년반 등을 조직하고 리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부녀부가 군 단위에 설치된 경우보다 여성농민과 좀더 접촉면이 큰 반 단위까지 부녀부나 부녀반이 설치된 경우는 운영이나 여성농민의 조직정도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 단위까지 조직되면 조직·교육 등에 여성농민의 특수 요구가 잘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부는 정책연구나 교육을 담당했고 다른 부서와 달리 각 단위위원회 활동에 조용하여 부녀간의 종적 연결로 여성에 관한 활동방침을 설정하고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 혁명적 농민조합이 반합법·비합법 상태에 있었으므로 독자 부서로서 얼마나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여성농민에 대한 문제인식과 활동방침 및 활동내용을 살펴보자. 여성문제 인식이나 활동방침이 집약되어 표현된 것이 강령이다. 혁명적 농민조합의 강령에 여성문제가 언급되는 것은 이 시기 일반적인 경향이었는데, 특히 1931년 영흥농민조합, 1932년 경 전북동맹, 명천 등에서는 부인에 대한 강령이 따로 설정되었다. 특히 격렬한 운동을 펼쳤던 명천 지방에서는 투쟁강령이 그 목적에 따라 투쟁강령, 정치투쟁강령, 소작농·일반농민·농업노동자 행동강령, 청년부·소년부·부인부 행동강령 등으로 세분되어 있었다. 이때 슬로건으로 제기되었던 것은 1920년대 전반보다 더욱 포괄적인 농민의 요구로서 소작조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제 농정에 관련된 누에고치·목화 등의 공판제, 수리조합·농회·삼림조합·화전농 문제 등 광범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각 지역마다의 농업조건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여성노동의 비중이 컸던 밭작물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여기에 여성관계사항으로 인신매매 등 봉건적 인습 철폐, 여성을 억압하는 일체의 악법 폐지 등이 일반적으로 제기되었고 점차 명천처럼 ‘국고부담의 탁아소와 무료산과원의 설치, 조혼제 금

지와 강제결혼과 인신매매의 철폐, 농촌여성들에 대한 정치·사회적 차별대우의 철폐, 여성을 위한 야학 설치, 일제 어용단체인 여자청년단·부인단 등의 즉각적 해체'와 같은 구체적 구호로 발전되어 나갔다.

1934년 9월 경부터 1936년 10월 경까지 활동한 城津農民組合再建委員會에서는 여성문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운동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 一. 현재 여성에 대해서는 남존여비·현모양처주의·삼종지도·칠거지악·매매혼제도 등 정치·경제·문화 방면에서 자유는 전혀 구속되어 있다. 이 특수한 불평 등을 격발하기 위해 교양훈련지도를 한다.
- 一. 결혼문제에 대해서는 강제결혼반대, 결혼자유획득, 당사자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혁명이 될 때까지 결혼을 기다린다는 식의 말을 해서는 안되고 혼기가 오면 부모와 봉건적 타협을 이용하여 결혼할 것.
- 一. 여성접촉문제에서는 청년시대는 정력적이기 때문에 남녀 일인씩의 접촉은 절대로 하면 안되고 만일 주의운동 중 사랑에 빠지면 전연 안되므로 이 의미에서 남 1인에 여 2인(여 1인에 남 2인)식으로 주의를 요해야 한다.  
(《사상회보》, 제10호, 1937, 35쪽).

이렇듯 아주 세심하게 여성조직원의 행동까지 거론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조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갔다. 처음에는 이전부터 활동하던 이들을 재조직하고 또 명천의 방침처럼 농민조합의 간부는 우선 자신의 부인이나 딸·동생의 의식을 깨치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마을 부녀자에게 결혼의 자유, 여성해방을 말하도록 하여 여성들을 동지로 획득하는 것이 손쉬운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점차 독서회나 야학·연극·강연회나 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들의 대부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출판활동을 통해서 여성들을 조직해 갔다.

부녀자나 소년소녀를 위한 야학활동은 가장 일반적 형태이고 활발하였는데 여기서 여성들은 문자해독뿐만 아니라 혁명이론, 혁명가에 대한 학습, 시위방법, 경찰관 혹은 관청습격 등을 연습하였다. 그리고 여성들은 《부인론》(정평)·《조합부인강좌뉴스》(영흥)와 같은 책이나 '부인의 권리'(경성)·'근로하는 부녀'(북청)라는 연제의 강연 등을 통해 여성문제에 대해서도 인식의 기회를 넓혀 갔다.

연극도 적극 활용되었다. 함남 함주에서는 1938년 일반 부녀자에 대한 공산주의 선전방법으로 프로연극에 의한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자유를 찾아서’ 등의 연극을 통해 일제를 타도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사상을 고취하도록 하였다.

1930년대 활동에서 출판활동은 내부 조직원들의 사상적 통일을 기하고 교육자료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주목할 만한 활동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등사기나 기타 출판에 소요되는 물품까지 일제의 통제·감시가 극심하여 매우 구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감시의 눈을 피해 동굴이나 산중천막·폐광·지하 아지트 등에서 출판물을 펴내었다. 그리고 이때는 비합법 시기였기 때문에 출판물 반포 범위가 종류에 따라 세분되어 조직성원 교육용이나 내부회람용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여 조직성원용 출판물과 일반 반에게 배포되는 선전물은 비교적 엄격히 구분되고 있었다. 농민조합의 일반 출판물에는 ‘부녀란’ 같은 것을 따로 설정하여 일상적으로 투고를 받았으며 여성들을 위해 명천에서는 <부녀동지>, 영흥의 <부인동무>, 문천은 <무산부인> 등의 이름으로 팸플릿이 간행되었다. 영흥농민조합에서 1932년 경에 간행된 <부인동무>란 팸플릿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전조선 프로여성동포들이여! 조용히 가정생활에 일생을 희생하지 말고 신사회 건설에 진실로 전투부대가 되어 우리의 적 제국주의놈들을 모두 타살하자”, “그러면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은 말할 필요도 없이 모순된 제국주의 사회를 타도하고 계급 없는 소비에트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프로부인이여, 우리 전위투쟁 혁명사업의 역군이 되라”, “우리는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소비에트 사회를 건설하자.”

이러한 노력의 결과 여성농민들의 진출은 매우 활발해졌다. 이것은 여성들의 검거자수를 보아도 알 수 있다. 1931년 영흥농민데모사건으로 10월 23일까지 검거된 농민 350여 명 중 여성이 22명이었고 1935년 명천좌익농민조합의 2차검거 때 피검된 여성들은 27명에 달하였다. 그리고 1932년 정평농민조합재건위원회에서는 120여 명의 여성들이 각종 활동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그 이전에 근우회나 소년회·청년회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다가 재편된 혁명적 농민조합에 참가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야학이나 각종의 농민조합

활동에 의해 1930년대 전후 새로이 운동전선에 뛰어들었다.

그것은 농민조합활동을 하던 여성들의 연령별 구성에서 잘 알 수 있다. 매우 한정적인 자료이지만 정평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정평은 1930년 말 조합원수 4,147명 중 여성은 290명(7.0%)이었고 이들의 연령별 분포는 20세 이하 153명 52.8%(남자는 881명, 남자조합원 중의 비율이 22.8%), 25세 이하 72명 24.8%(남 1,223명, 31.7%), 30세 이하 44명 15.2%(남 870명, 22.6%), 35세 이하 15명 5.2%(남 607명, 15.7%), 35세 이상 6명 2.1%(남 275명, 7.1%)였다.<sup>11)</sup> 연령으로 보아 여성들의 조합활동은 50% 이상이 청소년층이 중심이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남성들의 비중보다 더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과 청년층이 중심이 된 것은 계속되었지만, 농민운동에서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구원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또 구원활동을 통해 조직확대도 주목하게 됨에 따라 여성들의 연령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이 농민운동에서 지도자급으로 활동한 경우도 눈에 띈다. 1938년 2월에 검거된 梁鳳順과 李仁順의 경우가 그 예라 하겠다.<sup>12)</sup> 이미 원산·홍남 등지에서 노동운동 등의 활동으로 일제의 검거대상이었던 양봉순과 함주군 농회의 양잠교사를 하던 이인순은 함주에서 韓寅誠·李景允 등과 독서회·陵前농민조합 등에서 중심적인 활동을 하였고, 여성농민에 대한 교육 및 조직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나이가 어린 경우가 많고 활동경험이 적기 때문에 지도적 인물이 적었다. 대부분의 일반 여성조합원들은 교육·구원·출판 등의 조직내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한편 여성에 대해 감시가 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농민조합 간부간의 연락과 각종 선전물의 운반 배포, 일제 경찰이나 스파이들의 감시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하나 주목할 것은 함북 穩城의 경우인데 온성은 1934년 중국공산당 東滿特委 汪清縣 東北人民革命軍과 상호연결되어 중공당 발행문서를 조직원들 사이에서 돌려보기도 하는 등 중국 운동에 꽤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인민혁명군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온성 결사원들에게서 일정 금액을 거두기로 하였다. 이때 남자는 1원 20전, 여자는 60전을 징수하였

11) 박경식 편, <정평농민조합검거개황 및 판결문>(《조선문제자료총서》6), 498쪽.

12) 《사상휘보》제21호(1939년 12월), 259쪽.

다.<sup>13)</sup> 여성조직원에게서 거둔 금액은 남자의 반이었다. 이것은 당시 여성들의 경제상태를 고려한 배려이고 이러한 것은 활동전반에서 여성들이 활동하는 데 질곡이 되는 것을 제거·약화시키는데 꽤 세심한 노력이 있었음을 추측케 한다.

여성농민들은 조직원은 아니더라도 가족으로서 운동에 참가하는 경우도 많았다. 1930년 端川森林組合 반대투쟁이나 1931년 대동군의 미림수리조합지역 소작인회에서 벌인 수세·지세 등의 공과금 지주부담을 위한 투쟁과 같은 대중투쟁에도 여성가족원들의 참가는 일반적이었다. 정평 지방에서 검속된 조합간부가 사망했을 때에도 여성가족원들이 운동을 전개해 가는 데 구심점이 되었으며, 1932년 경남 梁山농민조합에서는 검속된 조합간부의 탈환투쟁을 검속자의 가족들, 특히 부인이나 어머니들이 같이 싸우다가 1명의 여성이 경찰에게 목숨을 잃기까지 하였다.

당시 일본인 여성조차도 정치적 활동이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고 조선 여성에 대해서는 일제 강점하 조선남성에게 주어진 알량한 권리까지 부정되었던 상태였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농민조합활동을 하였어도 남자들과는 달리 아주 구체적인 활동근거가 있거나 지도적 인물이 아닐 경우에는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어도 실형을 받는 여성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남편과 같이 활동했을 때 남편이, 다른 남성 가족원과 같이 했었다면 남성가족원이 대표로 형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1928년부터 1936년까지 <치안유지법> 위반자 219명의 여성에 대한 일제측 조사<sup>14)</sup>를 통해 이때 활동한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조사자 219명 중 기소된 인원은 46명이었고, 17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직업별로 보면 무직자 112명, 학생 41명, 노동자 37명, 전문직(교사·산파·보모·간호사·사무원 등) 15명, 농업 12명, 기타 2명이었다. 여기서 직업이 농업으로 분류된 사람은 12명에 지나지 않으나 무직자로 처리된 112명 중에는 농민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교육정도는 무교육자 17명(8%), 초등정도의 교육 93명(43%), 중등정도 104명(47%), 고등정도 5

13) 《사상휘보》 제9호(1936년 12월), 238쪽.

14) 《사상휘보》 제11호(1937년 6월), 52~63쪽.

명(2%)이었고 사회운동 경력은 92명이 있었다. 이들의 연령별 분포는 17세 이하가 21명, 18~20세 93명, 20~25세 87명, 26~30세 14명, 31~34세 3명, 36~40세 1명이었다. 이들이 활동하게 된 동기는 대부분 사회주의자와의 교류나 권유, 좌익문헌의 탐독이 기본적인었고, 생활난이나 결혼제도에 대한 불만, 여성에 대한 남성의 편견 등 사회구조의 문제를 직접 경험한 데서 비롯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성이 각종 사회운동에 참가하여 <치안유지법>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는 9년 동안 46명 이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대신 여성들의 운동참가를 꾀망하는 일제의 방법은 일반대중이나 부형·남편에게 농민조합활동은 하는 여성들은 “성도덕이 문란하다”, “붉은 색에 물들면 결혼 상대가 없다”는 등의 악질적 선전을 퍼뜨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앞서 본 성진농민조합처럼 대부분의 농민조합들은 규율을 강화하여 조직원의 남녀관계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다. 그런데도 일제는 여성이 참가한 운동마다 악랄한 선전을 뽐내지 않았다. 여성운동가들이 봉건적 정조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일제가 노린 것은 가족들이 여성을 감시·감독하여 운동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일제는 직접적으로 부형들을 선전회유하여 자위단 같은 괴뢰조직을 만들어 운동을 감시·보고하는 스파이 노릇까지 하도록 강요하였다.

민족개량주의계의 농민운동은 1920년대에는 비록 농민과 노동자의 차이점을 말살시켜 농민의 계급분화를 애매하게 하여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를 부정하였다. 이 때문에 농민이 조선혁명의 지도권을 장악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계열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고는 있었지만, 민족개량주의계열도 부분적으로 농민권익옹호를 위한 활동을 하였고 이때까지는 일제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 의식이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 가면 그들의 개량적 시도는 농촌진흥운동에서의 개량적 구호, 예를 들면 문맹퇴치·금주·금연·절약·저축·미신타파 등의 구호와 일치되었다. 즉 사회주의운동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민족개량주의운동은 지지 후원하여 민족분열을 꾀하던 일제와 타협하여 그 비호 하에 왕성하게 자기 사업을 펼쳐갔다. 여기서는 민족개량주의의 대표적 예로

천도교와 기독교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천도교는 1920년대 구과 여성동맹과 신과 내수단으로 분립되어 있던 것이 구과 여성들의 검거, 세력약화 및 천도교 전체의 통합움직임 등에 의해 1931년 3월 천도교 내성단으로 통합되었다. 조직체계가 잘 서 있던 천도교는 각 지방의 활동내용이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중 활동이 꽤 활발하였던 곳이 귀성군이였다. 평북 귀성군 천도교 내성단에서는 1931년 4월 독특한 토의가 있었다. 즉 “포덕사·종리사·종법사를 여자로 선출하도록 각 기관 대표에게 요구할 것”이란 내용이었다. 포교활동에서 여성을 대표로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여성들의 주장은 기독교에서 여성목사·장로가 될 수 있는 여자 치리권 획득을 요구했던 것과 같다. 이러한 점은 여성들의 활동이나 여성의 자각이 크게 높아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활동내용은 미신타파·문맹퇴치·농촌여성야학 개최·독서운동·색의장려 등 다른 지역과 별다른 바가 없었다. 이것은 천도교측의 농촌문제意識, 계급적 기반, 정치적 성향 자체에서 비롯하는 것이었다. 천도교에서는 농촌피폐의 원인을 농민의 무지와 나태로 보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공동경작·부업장려·생활개선·화폐지출억제·공동저축 등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이러한 까닭에 여성농민들의 활동도 민족문제나 계급문제에는 거의 접근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천도교 여성단체는 신구과의 분열로 다시 1932년 말 내성단도 나뉘지면서 단세도 약화되었다. 1936년 4월 경 천도교 신과의 경우 85개의 단과 5,000여 명의 단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합동 전보다 적은 수였다. 그리고 일제의 통제로 1939년 자진해산하였다.<sup>15)</sup>

기독교에서는 여성농민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활동하였는가. 기독교여성들도 교단의 전체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1932년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에서 채택한 <사회신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류를 형제로 믿으며, 기독을 통하여 제시된 하

15) 김용조, 《천도교여성회 70년사》(천도교 여성회본부, 1984), 122쪽.

조규태, <천도교 내수단과 여성운동>(박용옥편, 《여성 ; 역사와 현재》, 국학자료원, 2001), 298쪽에서 재인용.

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사회의 기초적 이상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일체의 유물교육, 유물사상, 계급적 투쟁, 혁명수단에 의한 사회개조와 반동적 탄압에 반대하고, 나아가서 기독교 전도와 교육 및 사회사업을 확장하여 기독교의 은사를 받고 갱생된 인격자로 사회의 중건이 되어 사회조직체 중에 기독교인이 활약케 하고, 모든 재산은 신에게서 받은 수탁물로 알아 신과 인간을 위하여 공헌할 것을 믿는 자이다(최민지, <민족의 고난과 기독교 여성운동>, 한국기독교 백주년기념사업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 편, 《여성 깰지어다 일어날 지어다 노래할 지어다》,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이러한 입장은 당시 기독교의 일반적·사상적 경향을 확연히 드러내는 것이며 이후 활동의 내용을 규정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은 여성농민에 대한 활동에서도 드러난다. 1934년 감리교회 농촌부녀지도자수양소 활동에서도 나타난다. 신촌 연희전문학교 근처 신촌농민수양소에 있던 농촌부녀지도자수양소의 목적은 “배워 알고 미신 버리고 쓸데없는 예식·형식을 버려 경제적 여유 도모하고 아름답고 재미있고 간단하게 살고자 함”에 두어져 있었다. 강사는 金活蘭·黃愛德·홍애시덕·申興雨·朴仁德 등이었고 과정은 1개월 정도에 수양강좌·가정강좌·농촌상식강좌·요리·재봉·세탁·염색·육아·가정위생·역사·지리·동요·유희·가정부업 등이었다. 이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기독교계의 농촌여성에 대한 활동은 천도교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지식보급·산업진흥·절약·저축생활장려를 벗어나지 못했다.

일제는 경제공황의 영향과 그 피해를 조선민중에게로 전가하여 농민의 피해를 일반의 상상을 넘은 상태였다. 양식있는 많은 식자들은 농촌 피해의 책임이 일제에게 있음을 공공연히 지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격렬한 민족해방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천도교와 더불어 기독교측에서는 일제의 농촌진흥운동에서 내세운 방침과 똑같은 입장에서 농촌문제를 풀자고 하였다. 게다가 기독교 농촌운동가로 명성이 있던 박인덕은 《신동아》의 1933년 하계계몽운동에 대한 이동좌담회에서 경찰의 금지·허가지연으로 활동이 중지되는 사례가 많은 데에 대하여, “효과를 보는 것이 상책이며 방법 여하는 선택할 것이 아닙니다. 진흥회나 교회를 통하는 것이 꼭 용이한 모양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공개적 발언은 일제의 농촌진흥운동도 이용하



면 활동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다. 그런데 그 활동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때 사회주의계에서도 진흥회를 농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장으로 주목하여 실제로 이 장을 이용한 예가 많았다. 그러나 일제는 사회주의계열에 대해선 매우 경계하고 탄압하였다.

결국 기독교 농촌활동가들은 농민·여성농민교육과 활동의 목적이 전도와 계몽이라는 차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선 일제와 크게 마찰이 없어도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일제의 정책과 크게 배치되는 바가 없었으므로 조직적으로 일제가 체제내로 포섭하여 독자적 활동의 필요성이 부정되어도 일제와 맞설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또 실제 거의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 그리하여 1937년에 가면 일제의 압력과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총회 농촌부가 폐지되고 자율적인 사회운동이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민족적 색채가 남아 있는 소수와 폐쇄적 기독교 교리를 존중하는 파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일제에게 굴복하여 일제의 정신총동원연맹이나 총력연맹 등에 편제되어 민중들을 기만하고 일제에 협조하였다.

뚜렷한 사상적 경향을 띠지 않은 부녀회·부인회 등 이름의 여성단체들이 1920년대 후반, 1930년대 초 각지에서 무수히 생겨났다. 이러한 조직들은 결국 저축·공동경작·탁아소 운영 등의 시도를 통해 경제적 궁핍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자율적 활동은 일제의 정책의도를 실현시켜줄 뿐 여성해방과 관련된 의식이나 활동으로 나아가는데 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부인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이 시기 일제의 체제내화 공작에 말려 들어간 사례는 무수하다. 그 중 1928년 조직된 전남 순천 월계리 부녀회도 그 전형적인 예라 하겠다. 활동 자체는 여느 부인회와 마찬가지로 공동경작·양잠 등 공동작업과 색의장려·야학활동이 주된 것이었다. 그런데 관청과 연결되면서 부녀회란 이름이 진흥회로 바뀌고, 모범진흥회로 지정되었으며 총독부로부터 사업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되어 본격적으로 농촌진흥운동에 참가하였다.

조직되지 않은 여성농민들은 군청·공립보통학교·마을내 농촌진흥회, 민족개량주의자들이 경영하는 야학에서라도 배움에 대한 갈증을 채우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야학은 실로 일제의 지배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유포시

키기 위해 마련된 장이어서 여성들의 민족, 계급정신을 마비시키려 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봉건적 가족주의나 봉건적 사고에서 벗어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일제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에 참가한 여성들에 대하여 악선전을 한 것도 결국 부모의 딸 단속을 강화하라는 방향으로 귀결되는 것이고 여성들을 봉건적 가족 이데올로기인 효녀·효부·열녀라는 규범으로 덮어씌워 일제 지배 하에 두고자 한 것이다. 실제 유교진흥회나 기타 단체에서 주로 하던 효부·열녀 표창이 1930년대 이후에는 직접 일제 관청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 (3) 잠녀(해녀)투쟁

1930년대 여성운동 중에 주목해 볼 것 하나가 1932년 1월 제주도 잠녀투쟁이다. 이것은 일제시기에 일어났던 최대의 여성투쟁이었다. 생산자로서 자신들의 정당한 경제적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수천 명의 잠녀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1920년대 제주도의 사회운동은 대부분 북부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남부해안은 모슬포를 제외하고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공동체적 기반이 강하다는 특수요인으로 1920년대는 무정부주의운동이 꽤 활발하였으나 점차 약화되었다. 1930년대로 들어서면서 제주도도 일부지역이 아니라 제주도 전역에서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잠녀들의 투쟁은 공동판매 때 해산물 가격사정, 등급검사, 기타 해녀조합의 부정으로 인한 문제로 이미 1920년대부터 계속되었다. 1920년 잠녀보호등을 이유로 만들어진 잠녀조합이 관제조합으로 되고 잠녀의 이익 대신 해산물을 싸게 사려는 일본인 무역상이나 해조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판부정이나 자금횡령 등이 횡행하였다. 그런데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1930년 9월투쟁, 1930년 11월 제주도 해녀조합에 대한 격문 살포 등의 움직임을 비롯하여 점점 더 구체적이고 대규모 투쟁으로 나아갔다. 1932년 1월의 잠녀투쟁은 그 중 가장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투쟁이었다.

1930년 9월의 잠녀투쟁은 정의면 성산포산 석화채를 조합서기가 경쟁입찰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잠녀에게서 매수하려던 것이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

천여 명의 잠녀들은 해산물 수매가인상 및 수매시 부정행위에 대해 반대투쟁을 벌였다. 이 투쟁은 당시 제주도의 사회운동가들을 자극하였다. 그들은 1930년 11월에는 해녀조합에 대한 격문을 뿌리는 등 잠녀운동에 관심을 크게 갖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해녀조합은 해산물 수매가격을 인하하고 등급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1931년 구좌면 하도리에서는 생복과 감텃재 판매에서 생복은 지정매수인이 매수를 거절하고 조합에서 처치를 해주지 않아 다 썩고, 감텃재는 지정등급변경, 지정가격 인하로 판매가 중지되어 손해가 막심하였다. 이에 잠녀들의 분노는 극도에 달하였고 1931년 말부터 하도리의 잠녀들이 중심이 되어 투쟁이 시작되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구좌면은 정의면과 더불어 제주도 잠녀가 집중(1932년 3,381명으로 전 도의 약 42%)되어 있는 곳이었다. 그전부터 해녀어업조합에 대해 불만을 품어왔던 잠녀들은 이 때문에 격노하여 일차로 항의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조합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잠녀들은 해녀조합의 정체를 폭로하고 요구조건을 관철 하자는 입장에서 구좌면 세화장날을 기해 드디어 대중적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1월 7일 정오부터 300여 명의 잠녀가 그들의 생산도구인 호미와 비창을 들고 어깨에는 양식보자기를 메고 하도리에서부터 세화시장까지 시위행렬을 하였다. 세화주재소의 저지를 뚫고 부근 리에서 모여든 잠녀들은 이 행렬에 합세하여 장을 보러 온 수천 군중들에게 해녀조합의 문제를 폭로하고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을 다짐하였다. 부근의 마을민들도 이들에 합세하여 해녀조합본부를 습격하려고 행진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세화주재소는 중재를 자청하였고 잠녀들은 주재소에 쇄도하여 현장에서 대표를 뽑고 그들과 협상에 임하여 잠녀들의 요구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였다. 그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시위대는 다시 행렬을 지어 평대리 해녀조합 지부사무소에 가 면장 겸 조합지부장의 책임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얻어냄으로써 시위대는 일단 해산하였다.

그러나 해녀조합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12일에 1932년도의 해산물 중 포패류에 대한 지정판매를 한다는 광고문을 널리 붙였다. 이에 자극받은 잠녀들은 이번을 기해 일체의 지정판매를 절대로 반대하자는 의견이 드높아

저 각 리 연합투쟁을 벌이기로 비밀리에 계획하였다. 각 리에서 잠녀회의가 열려 잠녀가 가장 많았던 구좌면·정의면을 중심으로 제주도 동부가 술렁이기 시작하였다. 지정판매일인 12일은 세화장날이었고 마침 제주도가 겸 제주 해녀조합장이 구좌면을 통과할 예정임을 알아내고 잠녀들은 구좌면의 하도리·세화리·종달리·연평리, 정의면의 오조리·시흥리의 6개 리에서 해녀조합에 대한 일대시위를 하고 도사와 직접 담판을 계획하였다.

1월 12일이 되어 종달리·오조리 잠녀 약 300명, 하도리 300여 명, 세화리 40여 명, 시흥리와 연평리 300여 명이 동남북으로 모여들어 호미와 비창을 휘두르며 만세로 서로 호응하면서 세화장을 점령하였다. 잠녀들은 대표를 뽑아 각 리 공동 7개 요구조건과 하도리측의 11개 요구조건을 들고 곧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주위의 잠녀들은 연방 “속히 해결하라”고 노호하였다. 그리하여 도사로부터 5일내 요구대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잠녀들은 그 자리에서 5일 이내 완전한 해결이 없으면 더한층 맹렬히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해산하였다. 이때 잠녀들이 요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일체의 지정판매 절대반대.
  - ② 일체의 계약 보증금은 생산자가 보관.
  - ③ 미성년과 40세 이상 해녀 조합비 면제.
  - ④ 병, 기타로 인하여 입어 못한 자에게 조합비 면제.
  - ⑤ 출가증 무료급여.
  - ⑥ 총대는 리별로 공선.
  - ⑦ 조합재정공개.
  - ⑧ 계약 무시하고 상인 옹호한 마쓰다 서기 즉시 면직.
  - ⑨ 위선적 우량조합원 표창 철폐.
  - ⑩ 악덕상인에게 금후상권을 절대불허.
  - ⑪ 가격등급은 지정한 대로 할 것.
- (《조선일보》, 1932년 1월 14~24일).

이상과 같이 요구조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해녀조합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잠녀들의 정당하고도 절실한 요구에 대한 제주도사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잠녀시위 이후 일체가 답한 것은 주동인물에

대한 일대 검거였다. 해녀조합이 잡녀들의 요구에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1월 24일 아침 주모자로 파악된 잡녀 20여 명과 그 외 청년들 수십 명이 검속되었다. 이에 분노한 잡녀들과 동민들은 검거자 탈환투쟁을 벌였다. 그리고 26일에도 800여 명의 잡녀들이 무장경관대와 충돌하는 등 투쟁이 계속되었으나 다수의 검거자를 내고 점차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이 사건으로 다수 검속되었으나 곧 많은 이들이 풀려나고 최종적으로 검거된 사람들은 잡녀 3명이었고, 그 외는 모두 제주도 조선공산당 재건조직(일명 제주도 야채이카) 관계자들이었다. 일제는 이 조직이 잡녀시위운동을 배후 지도했다고 여기고 이들 비밀조직에 대해서 철저히 탄압하였다. 그러나 잡녀들의 요구는 부분적이나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어 지정판매제는 폐지하고 경쟁입찰에 의한 공동판매를 부활했으며, 부정한 조합서기 및 지정상인을 10년간 조합에 관계하지 못하게 하고, 50세 이상의 잡녀와 미성년자에게는 출가시 조합에 내는 수수료를 면제하였다.

1932년 잡녀투쟁은 일제 시기에 일어났던 어민투쟁 중 최대의 것이었으며 최대의 여성투쟁이었다. 이렇게 잡녀들이 치열하게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일차적으로 잡녀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일제나 봉건적 남성들에 의하여 잡녀들을 남성종속하에 두고자 한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과 가정경제를 같이 꾸려나가고 있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노동하여 얻은 수입이 분명하였고 경제적 기여도가 컸던 만큼 가장권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그만큼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독립된 인간으로 활동하였다는 것과 통한다.

그리고 잡녀들은 노동을 통해, 또 노동의 결과물인 해산물의 처리과정에서 해녀조합·상인들의 농간을 직접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투쟁에 임할 수 있었다. 게다가 잡녀들은 야학이나 조직활동을 통해 일제 강점하 조선문제에 관한 과학적 인식을 습득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 오사카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1934년 검거된 검홍옥 같은 이는 원래 제주도 잡녀였고 “해녀들의 적화에 전심”하였다는 기사<sup>16)</sup>처럼 여성운동가들의 의도적 노력도 꽤 다각적으로 있었다.

#### 4) 1930년대 후반 이후 여성운동과 여성지식인

##### (1) 1930년대 후반 이후 노동운동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제 말기 파쇼체제가 강화되고 일제의 대외 침략전쟁 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조선에서는 파시즘과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이 절실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활동가들은 당면 정세를 파시즘이 급진적으로 대두하는 정세로 규정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전술방침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과거 자신의 대중활동이 노동자층에만 국한되어 있어 반파쇼·반제투쟁에 동원할 수 있고 동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광범한 반일대중에 대한 활동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자기비판하였다.

이러한 정세의 변화는 종래 견지해오던 ‘계급 대 계급’ 전술의 재검토 필요성을 전면화하였고 반제통일전선 전술의 적용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었다. 1935년 코민테른(Comintern) 제7차 대회에서 채택된 반파쇼인민전선·반제민족통일전선은 1930년대 중엽 이후 국내외 대중운동의 실천과정 속에서 일정한 불철저성을 내재하면서도 점차적으로 수용되어갔다.

반제민족통일전선 전술이 수용되면서 여성들에 대한 조직노선은 바뀌었다. 1930년대 전반기 여성운동이 계급운동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여성들은 혁명적 노동조합 여성부, 혁명적 농민조합 여성부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방식으로는 광범한 반일적인 여성대중을 포괄할 수 없었다. 따라서 1930년대 후반 이 전술을 수용한 측은 반일민족통일전선과 이해를 같이하는 모든 반일여성들을 포섭하는 반일부인회 등을 조직하였다.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조직사업은 경성콩그룹활동에 잘 나타나 있다. 1939년 이관술·金丹治 등이 결성한 경성콩그룹은 인텔리·학생·노동자들을 상당히 광범하게 조직하였다. 이들은 조직부와 기관지부를 설치하여 조직활동과 선전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각계각층의 대중을 획득하기 위하여 인민전선

16) 《부산일보》, 1934년 4월 21일.

부를 비롯한 노동조합부·가두부·학생부·일본유학생부 등 계급계층별 조직부서를 편성하였다. 지방으로는 함남·함북·경상도 등지의 주요 산업중심지에 지방조직책임자를 배치하였다.

여성노동자 조직활동은 특히 태창직물회사와 경성방직에서 있었다. 1939년 10월까지 태창직물회사 등을 중심으로 조복례·민인숙·박옥련 등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해 소규모의 강좌반을 편성하여 약 1년간 노동자 팸플렛과 기관지 등으로 교육사업과 구원사업을 실시했다. 이 여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당공장의 적노반을 조직했다.

또한 각 산업별로 우수한 노동자 활동가들을 타지역의 산업별 주요 공장으로 파견하는 경우도 있었다. 1939년 5월 경 강경자는 함흥으로 파견되어 질소회사에 운동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노복례는 영등포 방면의 공장 책임자로 파견되었다. 또한 부산 등지로 여성노동자 운동가들을 파견하여 조직·교육활동 등에 종사시켰다. 경성콩그룹은 1940년 12월, 1941년 10~12월 두 차례에 걸친 대탄압을 당하면서 완전히 지하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 시기 노동자의 파업투쟁은 1936년 138건, 1937년 99건, 1938년 90건, 참가자수는 8,248명, 9,146명, 6,292명으로 1930년대 전반기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감소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기 노동자 투쟁에는 태업·집단도주 등의 새로운 투쟁전술이 출현한 것을 고려할 때 전시체제라는 조건 속에서 파업투쟁이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빠지기는 했지만 형태를 달리하면서 꾸준히 지속되었다.

이 시기 여성노동자들이 일으킨 중요한 파업투쟁만 들어 보아도 1936년 8월 대전 군시제사공장 여성노동자 500여 명의 파업, 인천 방직공장 1,500여 명의 파업, 1937년 1월 28일 부산 방직공장의 태업투쟁, 3월 부산고무공장 파업, 11월에는 부산 복전양말공장, 1938년 1월 해주 고전정미소의 파업, 충북 군시제사공장 청주공장의 파업, 3월 원산경성공업합자회사, 7월 평양 제사공장, 12월 대구직물공장 등의 파업투쟁이 있었다.

그중 1938년 7월에 일어난 평양 제사공장 여성노동자들의 파업은 집단탈주라는 새로운 투쟁형태를 보였다. 평양 제사공장 노동자들은 임금을 제때에 지불할 것, 합숙조건을 개선할 것, 일본인과 조선인간의 식사 차별대우

를 철폐할 것, 일본인 악질감독을 축출하고 조선인 여성노동자에 대한 회를 임금할 것, 일요일에는 휴식을 보장할 것 등의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태업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자본가는 요구조건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을 강제로 취업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에 격분한 여성노동자들은 짐보따리를 싸들고 평양역을 향하여 집단적인 탈주를 개시하였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일본인 기업주도 할 수 없이 요구조건의 일부를 승인하였다.

이 시기 노동단체들과 그 지도자들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하에서 자체의 준비정도와 실정에 따라 다양한 투쟁방법을 선택하여 일제와 자본가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노동자들은 투쟁형태에서 직접적인 파업 외에 태업·집단 탈주 등을 전개하였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 노동력 동원 등 전시노동력 수탈을 위한 파쇼적 노동정책에 대항하여 집단적 탈주·이산 등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일제는 1938년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군수물자 결핍을 느끼기 시작하여 군수생산과 군수시설 확장에 급급하여 국민총동원의 표방하에 집단적 노력동원을 강요했다. 이리하여 군수시설 건설장·공장·기업소에서 전시강제동원에 반대하여 집단적으로 탈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노동자의 집단도주현상은 1940년대 전반기에 이르러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도주와 이산은 파쇼체제하 노동자 투쟁의 한 형태로서 개별 자본가에 대한 파업투쟁과는 달리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 전반에 대한 투쟁이라는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또한 이 시기 노동운동에는 반일·반전 투쟁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노동자는 임금인상·대우개선 외 8시간 노동제의 실시를 요구하였고 전시 강제 노동력동원에 반대했다. 이러한 투쟁은 일제의 군수물자생산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침략전쟁의 수행에도 늘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노동자 계급의 반일반전투쟁에 화재·폭발·기계파괴 등의 투쟁형태가 많이 적용되었다. 함흥 평창좌익노동조합 분회 기관지 《우리동무》에서 가혹한 노동조건·기아임금·국방헌금 등 일제의 수탈정책을 폭로함과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절대반대, 반소전쟁 절대반대, 중국혁명 적극지지 등 혁명적인 구호를 제기하고 노동자들의 진출을 고무하였다.<sup>17)</sup> 이러한 일단의 조직적 운동은 노동자들의 직간접



으로 결합되어 강인하게 전개되었다.

## (2) 1930년대 후반기 이후 국내 여성농민조직운동과 조국광복회운동

1930년대 후반 국내외 정세변화와 더불어 운동경험의 축적과 코민테른의 방침이 맞물려가면서 반일인민전선론에 입각한 민족해방운동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은 곧 여성농민운동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언급할 조국광복회는 정리된 선언과 강령 등이 있어 조국광복회가 영향을 미친 지역의 운동내용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나, 정평·홍원·영흥·문천·왜관 등 국내 각 지역에서는 개별분산적으로 인민전선이론을 수용하였고 공개적·대중적 활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제측 단편적인 자료를 통하여 당시 활동을 살펴 볼 수 있을 뿐이다.

홍원에서는 1939년 3월 홍원농민조합재건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여기서 채택한 행동강령 및 운동방침에서는 반전투쟁, 일제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한 무장폭동을 대비한 전투조직화, 합법·반합법의 민활한 활동, 반동단체 즉 농촌진흥회·반공단·국민정신충동원연맹·애국부인회·국방부인회 등에 침투하여 분쇄 혹은 좌경화에 노력하여 이용, 반제조직의 결성, 구원사업 강화 등을 내걸고 있었다. 당시 세계전쟁 발발 위기하에 중일전쟁이 터지고 일본파시즘체제가 강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포괄적인 운동방향은 국내외가 유사하였다.

그러나 운동의 구체적 내용에서 국내조직들은 1930년대 전반기의 운동경향에서 매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것은 토지강령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홍원에서의 토지강령은 “① 일본제국주의와 토착지주·공공단체·사원 등이 소유하는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노력농민에게 평균 분배하라, ② 고리대적 성질을 띤 일제의 부채를 무효로 하라, ③ 다각적 세제를 철폐하여 단일누진과세를 실시하라, ④ 반동적 성질을 띤 상업자본을 철폐하고 농민에게 이익을 줄 사업을 경영하라, ⑤ 수리조합을 소비에트 소유로 하고 그 관리를 노력농민에게 달라, ⑥ 부등가 교환을 철폐하여 등가교환을 실시하라, ⑦ 삼림령을 폐지하라”<sup>17)</sup>는 것이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①의 ‘토착지주 토지의

17)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편, 앞의 책, 256~261쪽.

18) 《사상휘보》 제23호(1940년 6월), 57쪽.

무상몰수'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1930년대 전반기 농민운동의 일반적 방침이고, 인민전선 전술방침을 따른 조국광복회에서 제시한 '친일분자의 토지몰수'와는 통일전선의 범위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흥원에서는 우량한 부농까지 동맹의 범위 내에 들어오지만 조국광복회는 반일지주까지 연대의 범위 내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시기 여성에 관한 방침은 어떠했는가. 정평에서는 1936년 경부터 1939년 4월 경까지 정평농조 재건 지도기관의 활동이 있었는데 이때 활동방침은 “일반농촌은 봉건적 관념이 강해 농촌 독자의 운동은 선전성이 결핍하므로 급후는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노동자·농민의 제휴에 의해 운동을 전개할 것. 필요에 따라 부녀자 동지도 도시로 파견 훈련할 것. 정평농조 책임 韓秉珣은 남녀청년을 획득하여 그들을 청진 嚴允植 아래로 보내 엄윤식은 그들을 훈련할 것” 등이었다.

여기서 보듯이 여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등장하고 실제로 여성들을 조직하고 교육하는 데 그 이전보다 훨씬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그리하여 직접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 혹은 농민운동을 위한 훈련과정으로 청진에 파견된 사람들 중에 실제 여성들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노농운동을 연결하려는 시도는 비단 정평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이미 1934년 진해·부산에서도 도시주변의 농촌처녀들을 교육하여 여공으로 들어가 공장에서 활동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또 구속된 동지회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다른 활동경비를 절약해가며 복역중인 동지들을 격려하고 남은 가족들에 대해 위로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직접적으로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또한 일제의 끈질긴 회유공작에도 넘어가지 않고 운동선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여 여성들의 협력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

국내 민족해방운동은 1928년 조선공산당 궤멸, 당해산 이후 중앙당 결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일적 지침이 없었던 상태였다. 이에 반해 만주에서는 조선인을 다수 포괄한 동북인민혁명군이 1936년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되면서 더욱 많은 반일세력을 규합하였고 상시적으로 민족해방운동을 위한 정치노선을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在滿韓人祖國光復會가 1936년 6

월 조직되면서 직접 조선의 광복을 목적으로 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sup>19)</sup>

조국광복회는 선언에서 “전민족의 계급·성별·지위·당파·연령·종교 등의 차별을 불문하고 백의동포는 일치단결 꺾기하여 구적 일본놈들과 싸워 조국을 광복시킬 것”이라 하여 전반적 기조를 반일세력의 총집중, 대중성 확보에 두었다. 그리고 10대 강령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제7항 “양반·상민 기타의 불평등을 배제하고 남녀·민족·종교 등 차별없는 인류적 평등과 부녀의 사회상의 대우를 제의하며 여자의 인격을 존중할 것”이라고 하여 일제로부터 완전한 독립과 남녀의 완전한 평등이란 과제가 명시되었다.

그리고 일제에 의하면 조국광복회의 부녀조직과 활동방침은 “조국광복회 영도하에 부녀부를 결성하며 이에 항일의식을 주입하여 무장대 출동시 정신적 위안과 물질적 원조를 하게 할 것”에 두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관심 속에 국내조직을 위해 만주에서 파견된 정치공작대 13명 중 박록금·황금옥 등 6명이 여성이었다.<sup>20)</sup>

그런데 실제 여성농민들 속에서 조직을 한다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었다. 여성 스스로가 봉건적 사고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게다가 주위의 분위기도 역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막는 장애 요인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특히 외부 파견원이 직접 조직한다는 것은 무리였으므로 이미 연결을 갖고 있던 다양한 끈을 통해 조직사업에 접근하였다. 그리하여 이때도 우선 조직의 책임자나 회원의 어머니·아내·누이들을 의식화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마을의 여성들을 운동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야학을 조직하여 여성들을 계몽 각성시키고 여러 방식으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 여기에 조선인민혁명군 원호사업 등 실천사업을 통해 단련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 운동핵심들을 키워냈다.

그리하여 여성들은 유격대 활동에 참가하여 군사활동과 함께 대중에 대한 선전사업·재봉·간호·취사 등의 일을 하였다. 유격대에 참가하지 않은 여성들은 일상적인 활동과 더불어 물자조달을 위해 행상을 하거나 필요품을 만들어 지원하고, 삼엄한 경비와 통제 속에서 적의 정세를 파악·보고하고

19) 《사상휘보》 제14호(1938년 3월), 53~77쪽.

20) 〈해산사건에 관한 함경남도 경찰부의 전말서〉, 20~25쪽

길 안내, 부상자 치료 등 구원활동과 조선혁명군의 신변보호·숙식보장 등 군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벌였다.

### (3) 여성운동가들의 결단과 여성지식인들의 일제체제로의 굴복

이 시기 국내운동은 일제의 혹독한 탄압으로 지하로 잠입해 들어가고 활동의 범위가 축소되어 갔다. 그러자 1930년대 초중반 무렵부터 허정숙·金命時·박차정·朴鎭洪 등의 활동가들은 중국으로 건너가 일제와 무장투쟁을 하였다.

근우회 활동을 하던 박차정은 1930년 1월 서울의 여학생시위사건과 관련되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중국 망명길에 올라 혁명교관학교 여자부교관, 婦女服務團 단장 등을 맡아 민족해방운동, 항일전에 참가하다가 1944년 부상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허정숙은 1920년대 여성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하다가 서울 여학생시위의 주모자로서 검거되어 출옥한 후 1930년대 중반 중국으로 가서 한국민족혁명당·조선청년전위동맹·화북조선혁명군정학교 등에서 활동하였다.<sup>21)</sup> 국내외에서 활동하였던 김명시는 1932년 국내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검거되어 7년형을 받았다. 출옥 후 중국으로 탈출하여 해방 직전 조선의용군 제1선 적구부대 ‘여자부대’를 지휘하고 조선독립동맹 친진분맹 책임자로 있었다.<sup>22)</sup> 박진홍은 1931년 6월 동덕여고보 동맹휴학사건의 주모자였다. 그는 각종 혁명 노조활동 등으로 수차례의 투옥, 10여 년의 감옥살이를 겪고 온갖 탄압과 감시에서 벗어나 민족해방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1944년 중국 연안으로 떠났다.<sup>23)</sup> 이들은 민족해방운동조직에서 활동하면서 대일본전선에서 무장투쟁을 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중국에는 항일운동가들의 어머니·아내·딸로서 시작하여 여성조직을 이끌고 민족해방운동을 펼친 많은 여성들이 있었다.

21) 서형실, 〈허정숙-근우회에서 독립동맹투쟁으로〉(《역사비평》, 역사비평사, 1992년 겨울호), 278~287쪽.

22) 남화숙, 〈‘여장군’ 김명시의 생애〉(여성사연구회 편, 《여성》 2, 창작사, 1988), 337~355쪽.

23) 오미일, 〈박진홍-비밀지하투쟁의 세포로 활약〉(《역사비평》, 1992년 겨울호), 288~295쪽.

한편으로는 국내에 남아서 일제의 탄압에 굴복하고 타협한 지도급 여성들도 있었다. 1937년 이후 이들은 각종 단체에서 간부로 활동하며 시국강연·가두선전·글·방송·위문공연 등 온갖 방법으로 일제 침략정책을 미화하고 내선일체·황민화시책을 선전하며 일반여성이나 여학생들에게 어머니나 딸·동생으로서 징병·징용·학병동원에 순응하고 나아가 일제 정책의 선전자가 될 것을 촉구하였다. 나아가 여성에게는 정신대동원·노력동원·가정내 절약과 저축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하는 등 일제 정책의 선전대로서 활동하였다.

여기에는 교육계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학교교육의 양면적 문제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육 자체가 이미 절대적인 가치중립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학교란 기관이 존속하기 위해 원래 교육목적조차 위배되는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형의 학교의 존재에 발목잡혔다. 또한 이미 사유화되기 시작한 교육기관의 존속을 위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각종 민족말살정책을 편 일제 정책 침투의 통로로서 교육기관이 활용되고 교육계 여성 개인들은 일제의 꼭두각시 혹은 선전대가 되어 과거 그들이 구호로 내세우던 여성교육·민족교육의 진정한 과제는 하나씩 버려갔다.

이러한 지식인 여성들의 친일활동이 대중에게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그들 대부분이 1920년대 사회운동에 참가하였던 까닭에 일제에 대해 노골적인 친일행위는 민중에게 분노와 실망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하였다.

1940년대에 들어와 일제는 조선을 확실한 침략전쟁의 기지로 만들기 위해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였고 이를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 각종 악법을 발표하고 운동경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예비구금,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철저한 보도통제 등을 자행하였다. 민족개량주의자들의 노골적인 친일화, 좌익측 일부의 전향으로 전과 같은 조직적이고 대중적인 활동은 전개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민중들의 반일투쟁은 계속되었다.

국내뿐 아니라 만주·중국본토·일본 등지와 연계를 가지면서 운동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농민들은 일제의 가혹한 농산물 강제공출, 강제동원, 각종 전시부담을 반대하며 소작권이동과 소작료 문제를 둘러싸고 투쟁이 줄기차게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징용·징병·보국대·여자정신대 동원에 반대하여 일제 관헌과 충돌하거나 도망치는 사태가 벌어졌다. 수확물을 은닉하고 공출이나

농사일을 기피하거나 태업하는 경우가 일상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려운 시절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낙서·유언비어·유사종교가 난무하였다. 이런 것들의 내용은 터무니없는 경우도 많지만 일제의 멸망, 조선독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당시 민중들의 염원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운동가들은 민중의 이러한 염원을 민족해방운동의 구체적인 힘으로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姜貞淑〉

## 4. 청년운동

### 1) 조선청년총동맹의 결성과 와해

3·1운동으로 우리 민족의 항일열이 고조되어 가고 각 분야에 걸쳐 민족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을 때 민족실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의 단체가 결성되고 활동함으로써 전민족적 항일운동이 국내에서 크게 발흥되었다.

청년·여성·소년 등 각계 각층의 사회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농민·노동·물산장려운동 등 경제투쟁을 통하여 민족경제자립을 달성하려는 민족경제운동이 국내 각 지역에서 크게 일어났다.

이 때 청년들은 지덕체 함양과 생활개선·구습타파·근검저축·금주·단연을 통한 소비절약을 목적으로 각지에 청년중심의 단체가 결성되어 민족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청년운동이 분산적으로 일어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자 이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張德秀·鄭魯湜·金喆壽 등이 전국에 분산되어 조직된 청년단체를 통합하여 체계화·일선화 시키고 전국적인 조직을 통하여 청년단체를 통합, 독립운동에서 하나의 또다른 큰 세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 12월 116개 단체 대표 120명이 참가하여 서울기독교청년회관에서 朝鮮靑年聯合會를 창립하였다. 이후 청년운동이 크게 발흥되고 전

국 각지에 청년단체가 많이 조직되어 1924년 전국에 488개의 청년단체가 결성되어 청년운동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sup>1)</sup>

그러나 당시 사회주의사상이 우리 민족운동계에 과급되었고 이들에 의하여 서울청년회가 결성되었다. 이들이 연합회 내의 민족주의 세력을 축출하고 청년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함으로써 청년운동계는 민족·사회주의 양계열로 분열되어 상호대립과 갈등을 초래하였다. 서울청년회는 연합회의 활동 강령을 “역사적 진화의 필연인 신사회건설을 목표로 하여 돌진한다. 또 계급적 자각과 단결로써 무산대중 해방운동의 전위임을 기한다”고 개정하여 청년운동의 목표를 사회주의 노선에 부합시켰다.<sup>2)</sup> 그리고 그 이듬해 全朝鮮靑年黨大會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자기들의 의사를 반영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대회가 일제 당국에 의하여 금지됨으로써 좌절되었으니, 이것이 우리 청년운동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다.

또한 사회주의 계열은 북풍회계·화요계·토요계 등으로 분열되어 상호대립과 갈등을 나타냄으로써 청년운동은 커다란 혼란에 빠져 버렸고 이에 청년운동의 통일과 단합을 요청하는 사회적 여론이 크게 일어났다.

1924년 북풍회계가 중심이 되어 조선청년총동맹을 결성하였는데 이에 가맹한 단체가 224개 단체가 되었다. 이 조선청년총동맹은 “대중분위의 신사회의 건설, 조선민족해방운동의 선구가 될 것임을 기약”한다는 강령을 내걸고 청년운동의 중심기관으로 자리잡았다.<sup>3)</sup> 그러나 이 총동맹은 일제 당국이 창립대회에 이어 개최하려던 임시총회를 금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동맹의 일체의 집회를 금지함으로써 총동맹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활동도 할 수 없었다.

더욱이 조선공산당사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동맹의 간부 다수가 일경에 체포, 구속됨으로써 총동맹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1926년 正友會 선언과 1927년 민족유일당으로서 新幹會가 발족되자 조선청년총동맹도 이와 같은 시대조류의 변화에 적응하여 행동강령과 조직을 전

1) 朝鮮總督府 警務局 編, 《最近における朝鮮治安狀況》(昭和 8년), 30쪽.

2)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114쪽.

3) 朝鮮總督府 警務局 編, 《最近における朝鮮治安狀況》(昭和 8년).

환하였다. 즉 종래의 무산계급의 청년운동을 전민족적 청년운동으로 강령을 바꾸고 조직도 크게 개편하였다.<sup>4)</sup>

지방의 청년단체를 단일화시켜 府와 郡에 단일청년동맹으로 개편하고 각 면에는 지부를 두고, 각 리에는 반을 두어 체계적 조직을 갖추었으며, 道에는 도 연맹을 결성하여 진북·진남·경남·황해·평북·평남·강원·함북에도 연맹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서울청년회와 신흥청년동맹을 해체하고 각 청년단체 중에 총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는 해체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총동맹의 처사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오히려 총동맹의 해소를 주장하기도 하였다.<sup>5)</sup>

1931년 조선청년총동맹에 가입한 단체가 147개였는데 지방청년동맹은 135단체로서 지방청년동맹으로 개편되지 않은 단체는 12개 단체에 지나지 않았다.<sup>6)</sup>

조선청년총동맹이 결성된 후 일제의 탄압과 감시가 더욱 가중되었고 1931년 민족유일당인 신간회가 해소를 결의함에 따라 총동맹의 역할도 쇠락하여 해소론이 나오는 등 청년운동을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 2) 일제의 청년운동 탄압

1920년대 청년운동이 활성화되자, 일제는 이 청년운동이 항일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하여 청년단체의 집회를 금지하였으며 청년단체의 활동을 엄중히 감시, 탄압하여 청년운동을 공산주의운동과 동일시하고 지도자를 체포, 투옥하기를 일삼았다. 또한 대륙침략전쟁을 목전에 둔 일제는 우리의 청년운동을 저지하고 대륙침략의 인적자원 확보를 도모하여 1929년 10월 〈청년훈련소 규정〉을 제정하여 각 부·군·읍·면에 청년훈련소를 설립케 하였다.

이 청년훈련소는 ‘청년의 심신단련’·‘국민으로서의 자질향상’의 목적하에

4)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9(1991), 227~230쪽.

5)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9, 231쪽.

6) 朝鮮總督府 警務局 編, 《最近における朝鮮治安狀況》.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독립운동사》 5, 226쪽.



설립되었는데, 16세 이상의 남자를 입소케 하여 4년간 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훈련소의 교육과목은 수신 및 공민과·교련·보통과·직업과로 나누어 수신 및 공민과는 100시간, 교련은 400시간, 보통과는 200시간, 직업과는 100시간으로 하였다. 그리고 교련은 각개교련, 부대교련, 진중교련, 기신호, 거리측정, 군사강화 등으로 군대훈련소와 같은 군사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1930년대에 전국 각 리에 청년훈련소가 설치되어 수많은 청년들을 교육받도록 하였다.<sup>7)</sup>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의 청소년을 침략전쟁의 인적자원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제가 대륙침략전쟁을 일으키기 1년 이전에 이미 그 준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20년대에 급격히 성장한 우리 민족의 청년운동을 근본적으로 좌절시키려 하였음이 잘 나타나고 있다.

1933년부터 농촌진흥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일제는 권력기구를 총동원하여 농촌조직을 본격적으로 개편하였다. 즉 일제는 우리 민족의 실력양성운동으로 전개되었던 청년·여성·소년운동 등 모든 사회경제적 민족운동을 종식시키고, 한국을 일제의 대륙침략전쟁의 병참기지로 만들고, 또 침략전쟁에 협력하는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각 부락단위로 농촌진흥회·식산계·청년단·부인회를 결성하고 종래 우리 민족의 조직을 일제의 관변조직으로 바꾸어 나갔으며 우리 민족의 자생적 조직을 음양으로 탄압하여 그 활동을 저지하였다.<sup>8)</sup> 일제는 이와 같은 관변조직의 목적을 근검저축·소비절약·생활개선·금주·단연 등 종래 우리 민족의 실력양성운동과 같은 목적을 내세워 우리 민족을 현혹시켰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을 기만하는 것이었다. 일제의 조직목적이 대륙침략전쟁에 한바도를 유용한 병참기지로 만들기 위한 것에 있는 반면, 우리 민족의 목적은 민족경제자립을 기하여 일제로부터 주권을 쟁취하고자하는 항일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어 그 목표하는 바가 정반대였던 것이다. 따라서 1930년대 중반 우리 민족의 실력양성운동은 침체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중일전쟁이 개전된 이후 일제는 소위 <국가총동원령>을 제정·공포하여 전시체제

7) 《朝鮮總督府官報》, 1929년 10월 1일.

8) 신재홍, 《항일독립운동연구》(신서원, 1999), 318~319쪽.

로 바꾸면서 우리 민족에 대한 탄압을 가중시켜 나갔다. 1938년 <국민정신총동원령>을 제정하여 농촌진흥운동에서 결성되었던 각종 사회조직을 총동원운동의 말단 기구로 흡수하여 통제함으로써 우리의 민족운동은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청년조직에 대해서도 일제는 중일전쟁 개전 이후 청년단체를 총독부가 직접 관리하기 위하여 각 도·부·군 단위로 연합청년단을 조직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일제의 행정관리로 하여금 직접 통제, 관리하도록 하여 청년단체를 일제의 침략전쟁도구로 만들었다.

1938년 1월 총독부가 전국에 설치한 청년단은 4,000여 단체로 확대되었으며 단원은 15만 명에 달하였다.<sup>9)</sup> 그리고 청년단의 관리를 더욱 조직적으로 엄격히 하기 위하여 각 지방의 청년단 관리를 담당할 직원과 학교직원을 소집하여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군 20사단과 협동하여 도별로 청년훈련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청년단 통제를 기하였다. 이 강습회의 일정을 보면 평남·평북은 3월 11일부터 16일까지 77연대와, 황해·경기도는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78연대와, 충남·충북과 전북은 3월 14일부터 19일까지 79연대와, 경남·경북과 전남은 3월 9일부터 14일까지 80연대와 협동하여 강습회를 개최기로 하였다.<sup>10)</sup>

뿐만 아니라 총독부는 종래의 실습학교와 청년훈련소를 통합하여 청년학교를 전국에 17,000여 교를 설립케 하고 생도 230만 명을 수용하도록 하였으며 청년학교 입학을 의무제로 만듦으로써 우리 민족의 청년층을 침략전쟁에 이용할 인적자원으로 확보시켜 나갔다.<sup>11)</sup>

1930년대 청년운동은 이상과 같이 일제의 대륙침략전쟁이 발발한 이후 일제의 탄압으로 침체일로에 빠져 그 활동이 1920년대에 비하여 크게 빈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청년단체의 수도 급감하고 기존의 단체들이 강해소 또는 자연 해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30년에서 1934년까지 조선청년총동맹의 지방조직인 지방청년동맹을 제외하고 이 시기에 조직된 청년단

9) 《동아일보》, 1938년 1월 12일.

10) 《동아일보》, 1938년 1월 17·18일.

11) 《동아일보》, 1938년 1월 21일.

체는 다음과 같다.<sup>12)</sup>

단체명	설립장소	설립년월일	목적사업
중강진청년협회	평북 중간진	1930. 3. 20	농촌진흥 · 문맹퇴치
노동청년회	평북 강동	6. 10	
한강엠티청년회	경기 고양 한지	7. 1	
승호청년회	평남 평양	8. 1	
입석청년회	평남 안주	28	
방현청년회	평북 구성	10. 27	
아산조기단	충남 아산	11. 1	체력증진 · 저축장려 · 토산품애용
청송청년회	평북 안주	19	도박금지
지덕청년회	평남 맹산	12. 04	도로청결 · 근검저축
一八청년회	평북 연변 연산	1931. 1. 1	문맹퇴치 · 풍속개량
서종청년수양단	황해 봉산	3. 23	
영종청년회	경기 개풍 홍교	4. 4	
청년면려회	황해 곡산	5. 25	
노동청년회	평남 강동 지리	6. 10	농촌진흥 · 문맹퇴치
별하청년수양회	평북 강계 별하	7.	
지덕청년회	평북 맹산	8.	
서산청년단	평북 귀성	10. 5	
창주청년단	평북 구성	11.	
보성청년회	평북 강동	1932. 1.	야학운영
신촌청년회	경기 포천	2. 12	금주 · 단연
인제청년회	강원 인제	2.	금주 · 단연
삼가근로청년회	경남 합천	23	
청년문우회	경남 동래	7. 29	
성북청년단	경기 포천 군내	9. 10	생활안정 · 공동경작 · 조기작업 · 야학운영
기독교청년면려회	전남 강진	17	
일신회	충북 보은 속리	10. 1	생활개선 · 근검저축 · 상부상조
신광청년회	경북 영일	10.	
경성청년회	서울	11. 4	

12) 《동아일보》, 1930~1934년.

고려청년회	경기 개성	24	공동경작 · 야학운영
풍덕청년단	강원 양양 대포	1933. 2. 1	농업강습
가평청년단	경기 가평	8. 8	농업진흥
암면청년회	경기 시흥 암면	9. 6	
무극청년단	충북 음성 금왕	12. 1	
중앙청년단	충북 충주	9	체력단련 · 생활개선 사회봉사
이천청년단	경기 이천	13	
학봉청년단	강원 이천 학봉	"	
서평양청년회	평남 평양	23	반민구제
청년홍풍회	황해 평산	1934. 1. 24	지식발전
농촌생활개선회	경남 진해 대저	26	색의장려 · 금연 · 인조건사용억제 · 소비절약
협동청년회	평북 강동 송석	2.	
선명청년단	평북 운산	3.	
서호청년회	황해 재령 서호	5. 10	지식함양 · 체육장려 농촌진흥
함흥기독교청년회	함남 흥남		금주 · 단연
사평청년회	황해 신천	5. 8	금주 · 단연
불교청년동맹	경남 진주	15	야학운영

〈申載洪〉

## 5. 학생운동

### 1) 군국파쇼 일제의 통치정책과 민족운동의 변화

#### (1) 군국파쇼 일제의 통치정책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내의 학생운동을 비롯한 민족운동은 일제의 탄압으로 타격을 받았으며 더구나 1931년 5월 신간회가 해소됨으로써 자체분열과 노선의 변화가 가중되어 겉으로는 침체의 늪에 빠진 것과 같았다.

일본제국주의는 1920년대 말기 군부 파시스트의 쿠데타 음모가 진행되어

1932년 군부내각이 등장하였고, 1937년에는 군부 파시스트 독재가 보다 강화되었다.<sup>1)</sup> 일제는 세계공황으로 물가의 하락, 임금인하, 쌀값의 폭락, 실업자의 증가 등 국민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독점재벌과 결탁하여 그 부담을 농민·노동자·중소기업에 전가하기에 급급하였으며 더구나 식민지 조선을 ‘경기순환의 완충장치’로 이용,<sup>2)</sup> 그 부담을 한국인에게 가중시켰다. 또한 이들은 중국에 대한 침략전쟁으로 난국을 타개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1920년대 말 중국혁명에 간섭하면서 1927년 만주침략방침을 세우고 1928년에는 만주군벌 張作霖을 포살시켰다. 이어서 1931년 7월에는 關東軍의 임전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동시에 ‘萬寶山事件’을 이용, 만몽문제를 무력적으로 해결할 것을 결정하였다. 같은해 9월 18일 ‘柳條溝사건’을 계기로 만주침략을 개시, 만주를 점령하였다. 나아가 1937년에는 중국을 침략,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大東亞共榮圈’을 부르짖으면서 1941년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독일·이탈리아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을 야기시켰던 것이다.<sup>3)</sup>

이와 같이 일제는 전쟁을 수행키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한국에서 약탈하여 한국은 문자 그대로 ‘병참기지’<sup>4)</sup>로 전락하고 말았다.

1931년 6월 제6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전 육군대신 우가키 가즈시케(宇垣一成)는 시정방침으로 ① 조선은 제국(일본)의 일부로 사상계의 혼탁과 경제계의 피폐를 일신 타개, 재건의 중요함을 인식할 것, ② 內鮮人을 불문하여 혼화융합 일체일원이 되어 용맹심을 분기하고 풍부한 천부의 자원개척에 노력할 것, ③ 종래 시세의 개변을 필요로 할 때는 신중하게 심의 조사한 후 실행할 것, ④ 현재의 시세와 상황에 순응하고 공론허식을 배제할 것, ⑤ 이상과 신념을 갖고 실생활에 임하되 물질만능으로 생활안정의 도모를 첫째 목표로 삼을 것, ⑥ 이상의 취지로 기강의 진작, 민심의 작흥, 민의의 창달 및 과거에 우려하였던 내선융화의 촉진을 도모한다<sup>5)</sup>고 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는 1932년 본국의 ‘농촌진흥운동’과 보조를 맞추어 ‘농촌진

1) 遠山・今井・藤原 共著, 《昭和史》新版(岩波書店, 1967), 91~92・135~136쪽.

2) 朴慶植, 《日本帝國主義의 朝鮮支配》(청아, 1986), 333쪽.

3) 遠山・今井・藤原 共著, 앞의 책, 207쪽.

4) 朴慶植, 앞의 책, 335쪽.

5) 朝鮮總督府, 《施政二十五年史》(1935), 668쪽.

홍운동=자력갱생운동'을 전개, 과소체제에 적합한 한국지배정책의 재편성을 추진하였다. 즉 그들은 이 운동을 '기아선상을 해매고 있는 조선농민을 구제하고 해외로의 유망을 저지하여 농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것'<sup>6)</sup>이라고 하였으나 실은 민족주의·공산주의 사상과 그 운동을 박멸·전향시켜 내선일체를 추진시키고자 한 것이며 나아가 한국농민의 노동력을 대륙침략정책에 동원·이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1936년 8월 총독에 부임한 미나미 지로(南次郎)는 1937년 제2차 도지사회의에서 국체명정·선만일여·교학진작·농공병진·서정쇄신의 5대정강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방침 아래 이 시기에는 보다 철저하게 한민족을 말살하고 황민화정책을 적극 추진시켜 나갔다. 즉 일본군국주의는 대륙침략의 군수병참기지로 한국을 고정화시켜 북한지역은 중공업지대로, 남한지역은 경공업과 군량공급기지로 만든 전신체제로 바꾸었다.<sup>7)</sup> 1937년 총독부는 一面 1神社의 설치를 추진하고 신사참배를 강요, 각 직장별, 단체별로 강제 동원하여 신사참배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면서 한 걸음 나아가 황성遙邦도 강요하였고 <皇國臣民誓詞>를 그 동안 각 직장 및 학교, 개인별 집회 때마다 심지어 영화관에서도 이를 제창하도록 강요하였다.<sup>8)</sup>

1938년 일제는 지원병제도를 마련하여 징병제를 준비하는 한편, 국체명정·내선일체·인고단련의 3대 강령 아래 <朝鮮教育令>을 개정하였다. 즉 학교의 명칭, 교육의 내용 등을 일본인학교와 동일하게 하고 한국어사용을 금지시켰다. 한 걸음 나아가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1940년 '創氏改名制度'를 실시하였다. 창씨하지 않은 한국인에게는 각급 학교의 입학·진학 거부, 관리채용 거부, 비국민 무죄인으로 단정, 식량 기타 물자배급대상에서의 제외 등 온갖 방법으로 창씨를 강요하였다.

여기에 만족치 않은 일제는 한국에만 적용되는 각종 악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즉 1936년 12월 <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을 제정·공포하여 소위 요시찰

6) <各道農村振興指導主任者打合に於ける總督口演要旨>, 昭和 9년 11월 10일, 117쪽.

7)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巖南堂書店, 1979), 19쪽.

8) 中塚明, 《近代日本と朝鮮》新版(三省堂, 1977), 166쪽.

인으로 지목되는 항일독립운동가들의 동태를 항상 예의 주도하게 파악하고 사상운동전력자의 집합체로 ‘朝鮮思想報國聯盟’을 1938년에 결성하였으며, 1941년 3월 다시 〈思想犯豫備拘禁令〉을 공포·시행하고 ‘國民總力聯盟’·‘臨戰報國團’이란 친일적 단체를 조직하여 황국신민화운동에 앞장세우기도 하였다.<sup>9)</sup>

1938년 7월 황민화운동을 위하여 조직한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을 1940년 10월 國民總力朝鮮聯盟으로 개편하여 종래의 농어촌진흥운동을 비롯한 각 분야의 운동을 강제적으로 일원화한 총력운동을 진행시켰다.<sup>10)</sup> 이는 물심양면으로 국가주의적 사상위주의 전체주의적 체제의 강화를 목적하였던 것이다. 이로부터 신사참배, 〈황국신민서사〉낭독, 창씨개명 등의 정신적 강요와 함께 근로봉사가 가일층 심해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일제는 한국인에 대한 인적동원은 징병과 징용을 통해서 실시하였다. 1942년 5월 도조내각은 한국에서 징병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1944년부터 징집한다고 공포하였다. 1938년 이후 이미 지원병이란 명목하에 청년들을 입대시켜 1941년까지 1만여 명을 전선으로 보냈고 지원병훈련소를 몇 개소에 설치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고이소 쿠니아키(小磯國昭)는 부임하자마자 징병제도시행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첫 임무로 삼았다. 그는 같은해 10월 〈朝鮮靑年特別鍊成令〉을 공포하여 17세에서 21세의 한국청년들에 대한 군사훈련을 같은해 12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하였다.<sup>11)</sup> 그리하여 전국에 741개소의 연성소가 설치되었고, 다음 해인 43년에는 1,922개소로 증가되었다. 한편 관·공·사립중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현역군인이 배치되어 병영화가 자행되었다.

또한 조선총독부에서는 징병제실시에 대한 선전을 위해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조직을 이용하여 각처의 신궁에서 봉고제를 지내게 한 다음 담화·좌담·방송을 통하여 선전에 열을 올렸다. 그리하여 1943년 3월 징병제가 공포되고 같은해 8월 1일부터 시행되어 10월 1일에 전국적으로 해당자 26만 6,643명의 명단이 작성되고 1944년 9월 1일 이후 군에 입대하도록 하였다.<sup>12)</sup>

9) 森田芳夫, 앞의 책, 18~20쪽.

10) 鈴木武雄, 《朝鮮の決戰態勢》(1942), 11쪽.

11) 《朝鮮總督府官報》, 1942년 10월 1일, 號外.

한편 1943년 10월 20일 학병제가 실시되니 전문학교 이상의 학생 중 징집 적령자 및 지원자는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하여 훈련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현역에 편입케 하였다.<sup>13)</sup>

징병과 함께 한국인에게 가장 가혹한 피해를 준 것이 징용이란 노무동원이었다. 징용은 1938년부터 부분적으로 한국인에게 적용, 시행되어왔으나 1940년 이후 태평양전쟁시기에 본격적으로 동원되었다. 전쟁에 출정하는 일본인을 대신한 노력동원과 군활동의 보조에 한국인 노동자를 투입시켰던 것이다. 1943년에 <생산증강·노무강화대책요강>에 의하여 전시동원체제에 돌입하면서 강제동원은 더욱 가열하였고 1944년 4월부터 <학도동원실시요강>에 의하여 국민학교 4학년 이상의 어린 학생들까지 노무동원에 투입되었던 것이다.<sup>14)</sup>

1944년 7월 도조내각이 무너지고 고이소내각이 성립되면서 제9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는 징병·징용 및 근로보국대의 기피자 색출에 혈안이 되고 심지어 부임 1개월만에 <女子挺身隊勤務令>을 공포하기도 하였다. 만12세 이상 40세 미만 여성에게 <정신근무명령서>가 발부되었고 불응시에는 <국가총동원법>에 의하여 징역형이 가해졌다. 동원된 한국 여성들은 일본 군수공장이나 남양군도 최전선까지 투입되었고 일부 여성들은 군위안부로 전락시켜 친인공노할 파렴치한 행동을 자행하였다.

1945년 7월에는 조선총독부에 국민의용대조선총사령부를 설치하고 一億玉碎의 구호 아래 최후까지 미·영 등 연합국에 대항하겠다는 결전태세에 임했다. 그리하여 전국을 병영화하여 애국반을 단위로 한 대대·중대·소대의 지역대, 학교와 각 직장은 학도대·지역대가 조직되었다.

한편 군국일제는 황민화민족말살정책에 저촉되고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갖은 악법을 만들어 한국의 독립운동가와 단체들을 위협하였다. 이미 1936년 <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을 공포한 뒤 1941년에는 <사상범예비구속령>을 발포, 조금만 의심이 가면 마음대로 우리 민족을 예비구속하였던 것이다. 또한 언론·결사도 탄압, 1940년 8월 《동아일보》·《조선일

12) 吳世昌, <日帝末期의 植民地政策>(《한국사》 22, 國史編纂委員會, 1976), 437쪽.

13) <陸軍省令第48號 陸軍特別志願兵臨時採用規則>, 1943년 10월 20일.

14) 《毎日新報》, 1944년 3월 20일.



보》를 폐간시켰고 1941년에는 진단학회를 비롯한 모든 학술단체까지 폐쇄시켰다.

## (2) 민족운동의 변화

1930년대 국내에서의 민족운동 중 두드러진 항일운동은 1936년의 日章旗抹消抗爭, 1937년 修養同友會의 항쟁, 1935년 이후 신사참배거부항쟁 등을 꼽을 수 있다.

1936년 8월 독일의 수도 베를린(Berlin)에서 개최된 제11회 올림픽대회에 일본 마라톤선수로 참가한 養正高普의 孫基禎과 南昇龍이 각각 1위와 3위로 입상하여 한국인의 기개를 전세계에 떨친 쾌사가 있었다. 그리하여 당시의 우승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동아일보》가 8월 25일 석간에 손기정의 유니폼 가슴에 새겨진 일장기를 지우고 사진을 게재하였다. 총독부는 이를 문제삼아 화가 李象範을 비롯하여 사진부기자 白雲善, 운동부기자 李吉用, 편집부기자 林炳哲, 사장 宋鎮禹, 주필 金俊淵, 편집국장 薛義植, 사회부장 玄鎮健, 사진과장 申樂均, 《신동아》책임자 崔承萬 등 11명을 검거하고 8월 27일부로 《동아일보》를 정간 처분하였다.<sup>15)</sup>

일제 당국은 앞에서 서술한 11명을 포함한 50여 명을 40여 일간 문초를 한 후 주모자 이길용·현진건·최승만·신낙균·서영호 등 5명에게서 다시는 언론기관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모두 석방시켰다. 《동아일보》 자체 내에서도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장 송진우, 주필 김준연, 편집국장 설의식이 사임하고 부사장 張德秀도 도미 중 귀국하여 사임하였다.

일장기말소항쟁은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일제에 대한 민족적 감정의 폭발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 의식의 행동화였던 것이다.

1937년 6월 6일 종로서 형사대가 수양동우회 이사장 朱耀翰을 비롯한 동

15) 東亞日報社, 《東亞日報社史》1(1987), 136쪽.

趙芝薰, 〈韓國民族運動史〉(《韓國文化史大系》I 民族·國家,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64), 814쪽.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5(資料篇), 14쪽.

회간부들의 가택을 급습하여 李光洙·金允經·朴賢煥·金鍾惠·趙炳玉·李允宰·申允局(一名 申鉉謨)·李大偉·韓昇實·許龍成 등 11명을 체포·검거하였다. 이를 계기로 비밀에 부쳐졌던 수양동우회의 조직과 활동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수양동우회는 1914년 5월 도미중이던 安昌浩가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서 조직한 興士團의 한국지부였다.<sup>16)</sup> 즉 1922년 서울에서 박현환·이광수 등 11명이 수양동맹회를 결성하였고,<sup>17)</sup> 같은 해 평양에서 金東元 등이 同友俱樂部를 조직하여 양 단체가 1926년 수양동우회로 통합하였다. 그 뒤 미국의 흥사단본부, 상해흥사단원동위원부 및 수양동우회간에 규약개정에 성공, 1929년 흥사단과 수양동우회를 통일하여 회명을 同友會로 결정하고 회원증원에 노력, 82명의 증견회원을 확보하였다. 이어서 동우회는 1931년 2월 중앙위원회를 열고 회세확대강화를 위한 4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933년 안창호가 일경에게 체포됨에 따라 실행이 어렵게 되었다. 일제는 1937년 6월 동회간부들에 대한 일제검거에 나섰다. 1937년 6월 12일~13일 양일간 재경성기독교청년면련회에서 금주운동실행을 계획하고 같은해 5월 11일 전국 35개 지부에 ‘멸망에 함한 민족을 구출하는 기독교인의 역할’ 운운한 인쇄물을 발송하였다. 이것이 일경에게 발각되어 동회조선연합회서기 李良燮이 구속되고 그를 취조한 결과, 그 배후에 李容高·鄭仁果·이대위·주요한·柳滢基 등이 관계되었다는 것을 알아내고 동우회에 대한 탄압에 나섰던 것이다. 결국 동우회 회원들의 항쟁은 日帝의 간악한 탄압과 술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면서 민족의 의지를 과시한 민족운동의 한 형태였다.

1930년대 일제와 대항하여 싸운 민족운동의 한 형태는 기독교인들의 신사참배 거부운동이었다. 조선총독부는 한국인의 일본인화를 위한 방편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1920년대까지는 신사와 종교를 구분하여 신사참배는 강제성을 띠지 않았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인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1935년 평남도청회의실에서 개최된 중등학교장회의에서 도지사가 평양신

16)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5(資料篇), 320쪽.

17) 朝鮮總督府 警務局, 《第七十三回帝國會議說明資料》, 113쪽.

사참배를 강력히 지시하자 崇實專門學校교장 맥쿤(George S. McCune)과 崇義女學校교장 스눅(Miss V. L. Snook)이 끝까지 반대하였다. 이에 도지사는 60일간의 시한을 두고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교육자의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경고하였다.<sup>18)</sup> 그러나 맥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평양의 선교부실행위원회와 선교사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한편 평양 시내 27명의 한국인 목사를 소집, 사태를 논의하여 신사참배거부를 결의하였다.

60일이 지나자 맥쿤은 도지사에게 신사참배거부서신을 보냈고 도지사는 맥쿤과 스눅 두 교장의 자격을 박탈하였다. 1938년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장로교 계통의 사립학교 18개교가 폐교당하였으며,<sup>19)</sup> 1939년 황국 신민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신사참배거부로 구속, 처형된 기독교 도수만도 324명에 이르렀다.<sup>20)</sup>

1940년 일제는 소위 ‘基督教反戰工作事件’을 조작하여 신사참배에 협력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비국민으로 단정하고 기독교의 지도자급 인사들을 체포하기 시작하였다. 15명의 선교사와 한국인 목사 다수가 검거되었으니, 이 때 검거된 인사로는 朱基徹·崔鳳奭·崔尙林 목사·朴寬俊 장로·朴養欽 전도사 등이 포함되었다. 주기철牧사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옥사당하였다.<sup>21)</sup>

1940년대 들어오면서 일제와 맞선 대표적 항일투쟁으로 1942년 조선어학회의 항쟁을 들 수 있다.

조선어학회는 1921년 조선어연구를 목적으로 조직된 조선어연구회의 후신이었다. 이 회에서는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위를 만들고 사전편찬에 착수하였다.<sup>22)</sup> 그리하여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 1940년에는 〈외래어표기법〉 등을 통일하여 발표하는 등 한글의 연구와 보급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황민화정책과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위배되는 조선어학회의 활

18) 郭安全, 《韓國教會史》(大韓基督教書會, 1961), 177쪽.

朝鮮總督府 警務局,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1938), 389쪽.

《東亞日報》, 1935년 11월 24일.

19) 吳天錫, 《韓國新教育史》(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64), 322쪽.

20) 坪紅汕二, 《韓國民族獨立運動秘史》增補改訂(高麗書林, 1986), 58쪽.

21) 趙芝薰, 앞의 글, 819~820쪽.

22) 李熙昇, 〈國語를 지킨 罪로 ~朝鮮語學會事件〉(《韓國現代史》5, 新丘文化社, 1969), 335~412쪽.

동을 수수방관할 리 없었으니 드디어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을 조작하여 이를 탄압하기에 이르렀다.

사건의 발단은 1942년 8월 조선어학회에서 《조선어사전》을 편찬중이던 丁泰鎭이 함흥 영생여자학교사건으로 함흥경찰서에 증인으로 갔다가 구속되면서 부터이다. 그 뒤 같은해 10월 조선어학회 회원인 李允宰·崔鉉倍·鄭寅承·李熙昇·張志映·金允經·李克魯·韓澄·李重華·李錫麟·權承昊 등 11명이 체포되고 이어서 金法麟·李秉岐 등이 구속되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자가 29명, 증인으로 심문받은 이가 50명에 이르렀다.<sup>23)</sup>

조선어학회는 일제의 악랄하고 가혹한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조선어사전》편찬 등 우리말연구를 통한 민족혼을 끝까지 수호했던 민족문화단체이며 애국독립단체였다. 또한 이 회의 회원들은 민족독립운동가로서의 사명을 다했던 것이다.

## 2) 1930년대 학생운동

### (1) 문화계몽운동

1930년대 파쇼 일본군국주의에 대항하여 전개되었던 민족운동은 다양한 전략·전술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이 시기 항일학생운동도 민족말살정책과 병참기치화에 맞서 민족의 실력양성과 민족각성을 위한 문화계몽운동, 교내에서의 동맹휴학, 교내외에서의 비밀결사를 통하여 민족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문화계몽을 통한 학생들의 항일운동은 농민·노동야학의 교사로서의 활동과 문맹퇴치를 위한 한글보급운동을 들 수 있다.

농민·노동야학<sup>24)</sup>은 우리의 주권이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침탈되는 과정

23) 趙芝薰, 앞의 글, 817쪽.

24) 夜學의 명칭은 다양하였으니 ① 설립단체명에 따라 ‘南原青年夜學會’·‘開城商友會夜學會’·‘龍山教會夜學’, ② 소재지명에 따라 ‘北一面夜學’·‘三浪津夜學’, ③ 장소에 따라 ‘市場壽學’·‘驛前夜學’·‘農村夜學’, ④ 교과목에 따라 ‘朝鮮文講習夜學會’·‘元山英語夜學’·‘天安商業夜學’, ⑤ 피교육자의 신분·연령·성별에 따라 ‘勞動夜學’·‘農民夜學’·‘無產者夜學’·‘店員夜學’·‘女子夜學’·‘衡平夜學’·‘青年夜學’·‘兒童夜學’ 등으로 불렸다. 여기에서는 農民·勞動夜學으로

에서 교육구국운동의 일환으로 20세기 초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된 비공식교육기관이었다. 우리 나라 야학의 기원은 1906년 함남 함흥군 주서면 신중리의 普成夜學이 4명의 교사에 남학생 40명, 여학생 20명으로 성립되면서부터이다.<sup>25)</sup>

농민·노동야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3·1운동 이후 1920년대 농민·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부터이다. 이 시기는 러시아혁명과 피압박민족들의 해방투쟁이 전개되던 때였고 근로대중이 민족해방운동에 참여키 위해서는 사립학교나 서당으로는 불가능하고 새로운 대중적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었다. 또 현실적으로도 일제가 세운 공립보통학교의 수용능력의 제한, 학비의 부담이 과중했으므로 시설이나 규모가 빈약하더라도 근로대중에게 맞는 초등교육기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sup>26)</sup>

〈표 1〉 일제하 야학설립상황

년 도	야학 설립수	년 도	야학 설립수	년 도	야학 설립수
1920	66	1927	277	1934	43
1921	210	1928	156	1935	67
1922	190	1929	112	1936	22
1923	204	1930	120	1937	18
1924	134	1931	156	1938	32
1925	271	1932	72	1939	17
1926	292	1933	74	1940	6

\* 東亞日報社, 《東亞日報索引》에서 발췌.

위의 〈표 1〉에서 볼 때 1931년을 고비로 야학은 그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그것은 파쇼 일본군국주의가 대한통치정책에 따라 야학을 탄압, 폐쇄

命名하기로 한다(盧榮澤, 《日帝下民衆教育運動史》, 探究堂, 1979, 130쪽).

25) 현재까지 夜學의 始初를 1907년 ‘馬山勞務夜學’을 들고 있으나(姜東鎭, 〈日帝支配下の 勞動夜學〉, 《歷史學報》 46, 1976; 盧榮澤, 《日帝下民衆教育運動史》, 探究堂, 1979), 《朝鮮農民》(1927년 12월호) 등의 내용을 참고로 1906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金鍾美, 〈日帝支配下の 民衆教育에 관한 一研究〉, 中央大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9).

26) 李光麟, 〈民族教育〉(《한국사》 22, 國史編纂委員會, 1976), 87~88쪽.

시켰기 때문이었다.

농민·노동야학의 설립자는 지방유지, 농민·노동·청년단체, 종교기관 등이었고 운영경비는 설립자의 기부금, 유지의 동정금, 학생의 월사금, 노동을 통한 이익금, 동리의 찬조금으로 충당하여 오히려 학생들에게 교과서나 학습품을 무료로 공급하면서 운영하였다. 교원들도 무보수로 봉사하였으며 교원의 대부분은 지방유지청년과 보통학교 이상에 재학하고 있던 학생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sup>27)</sup> 한편 야학에서 가르쳤던 교과목은 문맹퇴치에 역점을 두어 한글 및 실용적 교과인 산술·주산 등과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한국 역사·지리 등 그 내용이 다양하였다. 교재로는 《농민독본》·《농촌산술》·《최근농잠법》 등이 대표적이었다.

1920~1930년대의 농민·노동운동이 대중운동으로서 상설교육기관을 통한 민족운동이라면 학생들의 하기방학을 이용하여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사가 주최한 문자보급운동은 문맹퇴치의 교육·문화운동으로서의 연례행사형태의 대중운동이었다.<sup>28)</sup>

한글보급을 위한 문맹퇴치운동은 먼저 조선일보사에서 시작했다. 1929년 6월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조선일보사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귀향학생문자보급운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학생들은 이에 호응하여 첫해에 참가한 학생수가 409명, 이들의 노력에 의하여 문맹을 퇴치한 수는 2,849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숫자는 409명의 학생 중 91명만이 보고한 숫자이므로 실제 한글을 깨우친 수는 10,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sup>29)</sup> 더욱이 신문사에서는 학생들이 활동을 마치고 9월에 상경하면 학생 중 한글보급에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학자금을 보조하는 포상제도를 마련하여 열심히 문자보급운동을 일으켰으니, 1934년 일제의 금지조치로 중단하기까지 큰 성과를 거두었다.

문자보급운동에는 참가학교 125개교, 참가학생수 4,917명, 특별반 161명, 합

27) 보통학교 이상 학교에 재학하고 있었던 학생들이 교사로 된 경우는 다음 자료에서 볼 수 있다.

《東亞日報》, 1924년 12월 10일·1925년 9월 1일·1926년 1월 27일.

28) 李光麟, 앞의 글, 92쪽.

29) 鄭世鉉, 《抗日學生民族運動史研究》(一志社, 1975), 464쪽.

계 총 참가학생수 5,078명이었다. 6년에 걸쳐 실시된 조선일보사 주최 문자보급운동에 대하여 총독부 당국자가 수수방관할 리 없었다. 당시 총독부 학무국장이던 와타나베(渡邊)는 “사업취지는 찬성하나 학생통제는 학교에서 할 일”이라 하여 간섭을 표명하였고 경기도지사 마스모토(松本)는 “개인교수는 무방하나 강습회는 불허한다”고 관내 각 경찰서와 중등학교에 통첩을 보내서 방해공작을 하였다. 이에 따라 각지에서 활동하던 학생문자보급반은 제약을 받았으니 그 예로 전북 부안에서는 집회허가를 해주지 않아 중지되었고, 원산 명성학원의 반원들은 매를 맞아가면서 집집마다 교재인 《한글원본》을 나누어주었으며, 인천 송현리 반원들은 부녀자들이 글을 깨우치기 위하여 보급반을 찾아왔지만 허가지연으로 학생이 감소되었다고 중앙에 보고하였던 것이다.<sup>30)</sup>

동아일보사에서도 1931년 7월 ‘학생 하기 브나로드(V. Narod)운동’을 주최, 1934년까지 4회에 걸쳐 전국농촌을 상대로 문화계몽사업을 벌였다. 이 신문사에서는 1928년 4월 1일 창간 8주년 기념일을 기해 문맹타파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세웠으나 총독부의 제지로 햇별을 보지 못하였다.<sup>31)</sup> 그러나 조선일보사가 학생을 내세워 문자보급운동을 활발하게 추진시켜 나가자 이 신문사에서도 학생 중심의 브나로드운동을 실천에 옮겼던 것이다.

‘브나로드(B. Народ)’란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의 뜻이다.<sup>32)</sup> 이 브나로드운동은 19세기 러시아의 지식층이 농민 속으로 파고들어 그들을 상대로 벌인 계몽운동이었다. 그러나 이 신문사의 브나로드운동은 러시아에서 전개된 운동과는 관련 없이 순전히 그 어의만 차용하였다. 즉 2,000만 한민족의 8할에 가까운 1,600만의 문맹자를 대상으로 문맹타파와 한글보급을 중심으로 농민위생지식을 알려주는데 그 목적을 둔 민중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제1회 ‘학생 하기 브나로드운동’은 3대로 나누어 학생계몽대·학생연설팀대·학생기자대로 구성하고 경비는 원칙적으로 대원 각자가 부담하였다.<sup>33)</sup> 제1대인 학생계몽대는 중학교 4·5학년생에 한하여 참가시켰다. 그 활동내용

30) 朴晟義, <日帝下の 言語・文字政策> (《日帝의 文化侵奪史》, 民衆書館, 1970), 291~293쪽.

31) 東亞日報社, 《東亞日報社史》1(1987), 292~295쪽.

32) 東亞日報社, 위의 책, 336쪽.

33) 《東亞日報》, 1931년 7월 16일.

은 ① 조선문 강습, ② 수학 강습을 1주일 이상 교육시키는 것이었다. 이 때 사용된 교재는 李允宰 편, 《한글공부》와 백남규 편, 《일용계산법》으로 신문사에서 배부하였다. 대상지는 각자의 향리나 인접지로 한정하여 1개 처에 2인 이상 협력하여 교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활동한 내용을 성적으로 고사하여 시상도 할 예정이었다. 제2대인 학생연설대는 전문학교생에 한정하여 ① 위생강연, ② 학술강연으로 구분하고 위생강연회에는 幻燈과 활동사진 상영, 학술강연회에는 음악이나 무용을 상연해도 무방하도록 규정하였다. 강연장소는 각자의 향리나 인접지로 하고 한 곳에 2인 이상의 협동을 중용하였으며 신문사의 지·분국에서 후원하도록 하였다. 제3대인 학생기자대는 전문·중학상급생에 한정하여 ① 기행일기, ② 척서풍경, ③ 고향통신, ④ 생활체험의 수기를 제출토록 하여 우수작은 지상에 발표하고 시상하기로 하였다. 한편 학교교원·서당선생·동리유지·일반 지식청년 등 지방사회유지 중에서 이 운동 참가희망자를 위하여 별동대를 두기도 하였다.<sup>34)</sup>

4번에 걸쳐 실시한 학생 브나로드운동을 도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학생 브나로드운동 상황

종 목 \ 회 수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대 원 수		423	2,734	1,506	1,094
강 습 지		142	592	315	271
금 지		11	69	67	33
중 지		—	10	17	26
강습생 수	계	9,492	41,153	27,352	20,601
	남	5,426	22,324	14,354	12,323
	여	4,066	18,829	12,998	8,278
강습생 평균 수		67	69	86	76
강습일자		연 2,289	8,182	6,304	3,962
평 균		18	14	20	15

\* 《東亞日報》, 1934년 9월 19일.

34) 東亞日報社, 앞의 책, 336~338쪽.



1931년부터 1934년까지 4회에 걸쳐 동아일보사 주최 ‘학생 브나로드운동’은 약 10만 명의 문맹자를 퇴치시켰던 것이다. 이는 우리 민족 전체 문맹자의 수에 비하면 미미한 것이지만 짧은 기간에 그것도 학생들의 노력에 의하여 문맹을 깨우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민족운동사상 하나의 획기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일제 당국은 민족운동의 일환이라는 의구심 속에서 갖은 방법으로 금지·중지를 자행하다가 1935년 5회부터는 전면금지라는 조치를 내려 이 운동은 좌절되고 말았다.

## (2) 동맹휴학

1930년대의 동맹휴학에 대하여 일제는 1929년 광주를 기점으로 한 전국학생운동이 종식된 후 약 1년간은 태풍이 지나간 뒤의 적막과 같다고 비교하였다. 그러면서 1929년 소위 코민테른(Comintern) <12월테제> 등의 영향으로 민족운동이 비합법적, 잠행적으로, 신간회나 청년동맹과 같은 기성단체의 해산 등에 따라 학생운동도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하였다.<sup>35)</sup> 이 시기의 일제는 동맹휴학의 원인을 다음 <표 3>과 같이 분석하였다.

<표 3> 1930년대 동맹휴학의 원인

원인 연도	교사의 처우에 대한 불만	실습협회의	불량학생 의 선동	교수급 시험방법에 대한 불만	품행불량 교사배척	수업료 인하요구	기 타	계
1931	21	8	15	6	15	7	30	102
1932	13	2	5	4	4	1	4	23
1933	11	4	1	2	10	—	10	38
1934	12	11	6	4	4	—	2	39
1935	15	5	3	4	2	—	7	36
계	102	33	38	39	39	36	36	248

\* 朝鮮總督府 警務局, 《高等警察報》5, 46쪽.

1931년부터 1935년의 5년간에 총 248건의 동맹휴교가 발생하였다. 그 원인

35) 朝鮮總督府 警務局, 《高等警察報》5, 44쪽.

중 숫자상으로는 제1위가 교사처우에 대한 불만이었으나 그보다는 민족운동의 색채가 농후한 불량학생의 선동, 교수 및 시험방법에 대한 불만, 기타 등합계가 103건으로 1930년대에도 학생운동은 민족운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말하여 준다.

아울러 1934년 39건의 동맹휴학 중에서 28건, 1935년 36건 중 18건이 초등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관공립과 사립학교의 맹휴건수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1930년대 관공립·사립학교별 맹휴건수

연도 학교별	1931	1932	1933	1934	1935	계
관공립	74	24	24	33	18	173
사 립	28	9	14	6	18	75
계	102	33	38	39	36	248

\* 朝鮮總督府 警務局, 《高等警察報》5, 47쪽.

관공립학교의 맹휴건수가 사립학교보다 훨씬 많은 것은 총독부 당국이 계속 관공립학교를 개설하여 학교수가 증가한 결과라고 보아야겠다.

1930년대 동맹휴학의 구체적 실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당시 언론에 보도된 맹휴를 보면 1931년의 경우 49건으로 이중 교장·교사 배척이 22건, 수업료 인하 내지 철폐가 19건, 식민지교육 반대가 9건, 언론·결사의 자유 및 학우 회허용 요구가 8건, 조선어 및 역사교육 요구가 3건, 기타 학내문제·학생복 교문제 등이다.

이해 동맹휴학의 두드러진 특색은 수업료문제였다. 1929년 세계경제공황의 여파가 당시 식민지인 한국농촌에도 밀려와 절망농가가 속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는 비참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1931년 3월 30일 충남 당진군 합덕공립보통학교 아동보호자총회에서는 수업료 전폐를 결의하고 당진공립보통학교평의원에게 격려문<sup>36)</sup>을 보내어 수업료

36) 《東亞日報》, 1931년 4월 17일. 격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現下教育機關의 不備와 민중의 窮困은 250만여 명의 학령아동 중 7할 이상

폐지의 주장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이어서 1932년 전라도평의회에서는 교육비를 심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항의도 하였다.

- ① 보통학교의 一面一校制가 완성된다 해도 한국인 3할밖에 수용하지 못한다. 또한 매년 16개교씩 신설하던 것을 금년에는 7개교만 책정하였으니 한국인 교육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 ② 보통학교 수업료가 과중한 까닭으로 중도퇴학자가 격증하니 반감하든가 폐지하여야 할 것.
  - ③ 일본인 소학교에 비하여 제반시설이 불충분함을 적발하는 동시에 기설보통학교의 학년연장과 아울러 그 내용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
  - ④ 수업료의 징수는 교사가 담당하여 사제간의 감정을 소격케 하여 교육상 지장이 적지 않으니 읍·면에서 취급케 할 것.
- (《東亞日報》, 1932년 3월 15일).

당시 한국교육의 참상의 한 예로 1932년 강원도 이천군을 들어보면 학령 아동수가 22,165명이었으나 군내 5개 보통학교 정원 263명에 입학지원자는 129명에 불과하였다.<sup>37)</sup> 이와 함께 1930년대 대표적인 동맹휴교의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31년 1월 26일 대구상업학교 한인학생들은 일인학생과 충돌한 후 7개조의 요구서를 제출하고 동맹휴교를 단행하였는바 그 요구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삭제.
- ② 폭행학생의 수괴, 若林·田中 등 4명을 퇴학처분할 것.
- ③ 폭행을 수수방관하는 古澤·明久保 두 선생을 사면 혹은 전임의 처분을 할 것.
- ④ 입학수리는 조선인, 일본인이 각 반수로 하는 것을 철폐시키고 시험성적순

---

을 算하는 190만여 명이란 막대한 未就學兒童으로 하여금 겨우 취학된 50만여 명 중에도 營養不足된 아동 3,000여 명과 中途退學生 6, 7만 명을 내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 唐津에도 수업료 체납과 중도퇴학생이 놀랄 만한 수에 달하였다. 이에 이러한 慘況을 목격한 우리 合德公立普通學校兒童保護會는 꺾기하여 수업료 폐지를 절규한다. 학교비 증감의 권위와 현명한 비판력을 가진 評議員이시여 의식적으로 보아 부당한 지출을 삭감하고 단호히 수업료 폐지함을 격려함.”

37) 《東亞日報》, 1932년 3월 24일.

서대로 할 일.

- ⑤ 조선인 선생을 더 채용하고 조선문 참고서와 리화학재료 등을 더 비치할 일.  
(《東亞日報》, 1931년 1월 28일).

1931년 5월 16일 함흥고등보통학교 1학년생은 다음과 같은 5개 조건을 교장에게 제출하고 동맹휴학하였다.

1. 희생자의 복교.
  1. 경제공황에 따라 수업료를 철폐.
  1. ○○교육제도 절대 반대.
  1. 학교에 경찰간섭 절대 반대.
  1. 학우회자치권 약탈 절대 반대.
- (《東亞日報》, 1931년 5월 21일).

이는 이해 4월 14일 동교 2·3·4학년이 일본인교사의 배척을 요구하며 맹휴의 움직임이 있자 학교당국이 등교를 제지하고 주동자 35명은 퇴학, 27명은 무기정학에 처하자 이날을 기하여 맹휴에 돌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맹휴는 더욱 확대되어 5월 21일에는 함흥고보 3년생 50여 명과 함흥상업학교생 30여 명이 연합하여 함흥 시내에서 격문을 살포하고 赤旗를 흔들면서 가두시위까지 감행하였다.<sup>38)</sup>

1931년 6월 23일 전남 장성군 서삼공립보통학교 4학년 23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학교당국에 요구하고 맹휴하였다.

1. 조선어 시간을 증가해 줄 일.
  1. 체조시간에 스파이크화로 때리지 말 것.
  1. 실습시간을 단축해 줄 일.
  1. 시간중에 때리지 말 일.
  1. 점심시간에 자유를 줄 것.
  1. 월사금을 반감하되 실습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충당할 것.
  1. 교장은 매일 출근할 것.
- (《東亞日報》, 1931년 7월 2일).

38) 《東亞日報》, 1931년 4월 17일, 5월 7·22일.

1931년 10월 26일 해주고등보통학교 3·4학년들을 비롯하여 전교생이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제출하고 맹휴에 들어갔다.

- 1) ○○교육 반대.  
① 봉건적 강제교육 반대, ② 교과서 자유 선택, ③ 종교선전 반대
- 2) 학생인격 존중.  
① 교우회자치 획득, ② 언론집회 자유, ③ 연구기구 개방
- 3) 학비절약.  
① 수업료 4할감, ② 교과서 구입 자유, ③ 강제여행 반대
- 4) 통신에 관한 건.  
① 가정통학 자유, ② 성적표 모교발송 반대
- 5) 선생 배척: 교장 등 6인.
- 6) 희생자 반대.  
(《東亞日報》, 1931년 10월 28일).

이에 대하여 해주경찰서에서는 학생 70여 명을 검거하였으며 학교 당국은 280명을 무기정학에 처하였다.<sup>39)</sup> 그 뒤 주동학생 河有元 등 4명은 집행유예 3년을 언도받았다.<sup>40)</sup>

1935년 7월 4일 춘천고등보통학교 3·4·5학년생들은 한국어 시간의 연장, 강압적인 교사 배척을 내세워 맹휴를 하자,<sup>41)</sup> 학교당국은 주동학생 7명에게 무기정학, 4명을 유기정학, 9명에게는 근신처벌을 주었다.

### (3) 비밀결사

1928년 제1차 학생전위동맹조직 후 사회주의 학생세력이 민족주의 학생세력을 압도하고 학생운동을 이끌어나가면서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도 그 세력은 꺾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1929년 광주를 기점으로 전국학생들의 운동에 있어서 독서회 등 비밀결사를 통하여 전국적인 학생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있어서 사회주의 세력의 작용이 컸으며<sup>42)</sup> 1931년 신간회 해소에 있어서도

39) 《東亞日報》, 1931년 10월 29일.

40) 《東亞日報》, 1932년 3월 28일.

41) 《東亞日報》, 1935년 7월 5·7·17일.

42) 朝鮮總督府 警務局, 《光州抗日學生事件資料》極秘文書(風媒社, 1979), 248쪽.

이들 세력은 “기존단체를 해소하여 신진용을 확립한다”는 기치 아래 신간회 해산 1개월 전인 같은해 4월에 신간회학생부를 해소시켰다.<sup>43)</sup> 이후 학생운동은 좌·우세력으로 갈라져 각기 다른 사상에 입각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좌파세력은 전술한 바와 같이 1928년 코민테른 제6회 대회에 있어서 동양부에 조선문제위원회가 조직되고 여기서 이른바 조선문제에 관한 〈12월테제〉를 발표하였는데, 그것은 이후 국내 사회주의 세력이 성전과 같이 받들었던 것이다. 이 테제는 과거 운동이 민족적 소부르주아지(Bourgeoisie) 및 인텔리겐차(Intelligentsia)를 중심으로 혁명적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인 노동자·농민을 기초로 하지 않은 오류를 지적하고 지금부터는 공장노동자를 제일로 다음은 빈농인 소작인, 자작겸 소작인을 획득하여 운동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족주의·사회주의 양파가 합동하여 민족유일당을 표방하였던 신간회를 비롯하여 각 사회단체의 해소론이 대두되었다. 드디어 1931년 5월 15일 사회주의파가 민족주의파를 압도하고 신간회의 해소를 결의하였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해산되었던 것이다.<sup>44)</sup> 이에 따라 신간회학생부도 신간회와 같은 전철을 밟았다고 할 수 있다.

신간회학생부가 조직된 지 5년여에 그 모체인 신간회와 함께 해산된 것은 국내에 있어서 학생운동의 통일이 와해되었음을 의미하며 다시 민족주의·사회주의 양세력에 의한 학생운동으로 변모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학생세력은 양분되었지만 이 시기 학생운동의 목표인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데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었다. 단지 그 방법이 합법적이었느냐 비합법적이었느냐에 따라 온건과 강경으로 나타났다고 보아야 하겠다.<sup>45)</sup>

‘조선학생회’를 비롯한 민족주의 학생들은 학술계몽·문화운동 등에 경주하여 학술강습회·야학강습회를 개최하고 1930년대에 들어와서 조선일보사·동아일보사가 주최하는 문자계몽운동과 브나로드운동에 적극 가담하여 문맹퇴치와 민족의식의 고취, 농촌계몽운동에 앞장섰으며 교내에서는 비밀결사·독서회·동맹휴학을 통하여 황민화교육정책에 대항하였다.

43) 坪紅汕二, 앞의 책, 163쪽.

44) 朝鮮總督府 警務局, 《高等警察報》5, 51~52쪽.

45) 金鎬逸, 〈日帝下 學生團體의 組織과 活動〉(《史學研究》22, 1973).

‘조선학생과학연구회’를 비롯한 사회주의계 학생들은 노동운동·농민운동 등에서 전개한 노동쟁의·소작쟁의 등과 함께 강경한 방향의 비밀결사·동맹휴학 등을 이끌어나갔다. 즉 시위운동·학교습격·격문철시·단식맹휴·교실점령 등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표면적인 요구조건은 수업료철폐문제, 신교의 자유에 대한 문제, 교육제도에 관한 문제를 내걸었으나<sup>46)</sup> 궁극적으로는 한국독립을 성취시키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1930년대 학생운동의 특징은 동맹휴학이 1931년을 고비로 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대신 비밀결사는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현상이었다.<sup>47)</sup>

한편 광주학생운동 후 서울을 중심한 부근지역의 학생운동은 크든 작든간에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sup>48)</sup> 이로 말미암아 조선학생과학연구회에 대한 일제 당국의 엄중한 감시와 탄압은 가속화되었다. 1933년 회원 500여 명<sup>49)</sup>을 포용하고 있던 동회는 회 자체로서의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존 조선학생회로 합류하고 말았다.

신간회학생부의 해체,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조선학생회로의 합류는 표면적으로 학생계가 다시 단일조직체로서 환원된 것 같았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일제의 탄압에 의하여 공개적인 학생운동은 위축, 좌절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1930년대 학생운동은 조직적이고 합법적인 단체에 의한 활동은 당시 여건하에서는 어렵게 되고 학교단위의 동맹휴학이라던가 소수정예화된 학생들에 의한 지하조직인 비밀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930년대 비밀결사는 독서회·적색구원회·반제동맹 등의 명칭으로 조직되었는데, 그 수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제경찰에 발각된 수에 의하면 1928년에 6건, 1929년에 5건, 1930년에 4건, 1931년에 6건이던 것이 1932년에는 22건, 1933년에는 24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비밀결사가 1930년대 학생운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1931년 6건, 136명이던 학생사상범이 1932년에 22건, 414명으로 늘어난 것

46) 中川矩方, 《思想犯罪搜查提要》(新光閣, 1934), 337~338쪽.

47) 朝鮮總督府 警務局, 《高等警察報》5, 52쪽.

48) 中川矩方, 앞의 책, 338쪽.

49) 위와 같음. 朝鮮學生科學研究會의 정확한 회원수는 다른 문헌에 나타나지 않고 이 책의 기록으로 보아 1933년에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은 일제의 만주침략 전후 급격히 반전사상이 일어난 때문이었으며, 경성제국대학 한일학생들이 城內反帝部를 조직하여 반전격문을 빈번히 살포하여 반전기운을 일으켰고, 각 지방학생의 반전행동이 점차 성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 같은 상황은 <표 5>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1933년까지 지속되다가 그 후부터는 차츰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lt;표 5&gt;

학생사상범죄 사건상황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남	함북	계
1931 건수	1	—	—	—	—	1	2	—	1	—	—	1	—	6
인원	50	—	—	—	—	21	30	—	11	—	—	24	—	136
1932 건수	7	1	1	2	1	1	2	1	2	2	1	1	—	22
인원	108	2	23	86	4	37	11	28	24	33	4	54	—	414
1933 건수	7	1	—	3	1	2	3	2	—	1	4	1	—	24
인원	63	4	—	31	—	28	62	32	—	11	66	5	—	302
1934 건수	3	—	—	—	3	—	1	—	1	—	—	—	—	8
인원	7	—	—	—	13	—	2	—	7	—	—	—	—	29
1935 건수	1	—	—	—	1	1	—	—	—	—	—	1	1	5
인원	89	—	—	—	12	15	—	—	—	—	—	33	3	152
계 건수	19	2	1	5	5	5	5	3	4	3	5	4	1	65
인원	317	6	23	117	29	101	105	60	42	44	70	116	3	1,033

\* 朝鮮總督府 警務局, 《高等警察報》5, 52~53쪽.

지금까지 소개한 학생비밀결사는 일제 당국에 적발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된 단체들이다.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 지하에서 비밀리에 조직되어 활동하였던 관계로 발각되지 않은 단체가 더 많았다.

일제 당국에 발각되어 검거된 1930년대 대표적인 비밀단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31년 경성제국대학을 비롯한 5개 학교가 관계된 경성제국대학 반제부, 평양고등보통학교의 독서회, 함북 함흥고등보통학교를 비롯한 함흥 각급학교에 의한 학생공동위원회, 경남 동래고등보통학교의 반전운동, 1932년 황해 사리원농업학교의 독서회, 충남 예산농업학교의 독서회, 1933년 서울 중앙고등보통학교의 반제동맹의 활동을 들 수 있다.

경성제대 반제부는 1929년 경부터 성대 예과 한국인 학생들간에 비밀결사의 성격을 가진 독서회가 있었다. 이 회가 1931년 3월 경부터 성대학부 법과



중심의 반제부로 발전적 조직체가 되었다. 같은해 4월 법과생 愼弦重은 일본 인학우 이치가와 아사히코(市川朝彦)·曹圭讚 등과 모임을 갖고 성대 1·2·3 학년에 재학중인 독서회 소속 학생들을 포섭하여 반제부를 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뒤 이들은 신현중의 집에 모여 다시 확인하고 반제부의 하부조직으로 경성치과외전·제2고보·경신학교·법학전문·기독교청년학관의 학생들을 끌어들이어 반제경성도시학생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한편 신현중은 총독부 급사 李亨遠 등으로 하여금 적우회를 만들어 출판노동조합을 지도하면서 《성대독사회뉴스》·《반제학생신문》, 기타 반전을 위한 격문을 인쇄하도록 하였다.<sup>50)</sup> 이 같은 활동 중 일제 당국에게 발각된 연루자 50명 중 19명이 1932년 7월 공판에 회부되었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sup>51)</sup>

성명	학과 및 직업	나이	형량
신현중	法科	23	징역 3년
崔翔奎	"	24	집행유예 3년
高晶玉	文科	21	"
崔基晟	法科	22	"
平野而吉	"	21	"
市川朝彦	"	20	"
姜若秀	齒科專門	22	"
曹圭讚	성대의학부	24	"
朴勝珉	第二高普	21	"
金重龜	"	19	"
柳榮京	"	20	"
洪必善	城大豫科	25	"
車啓榮	總督府給仕	20	"
李亨遠	"	19	"
安福山	朝鮮日報社	19	"
閔泰奎	東一銀行給仕	17	"
具範植	天日醫院給仕	20	"

50) 朝鮮總督府 警務局, 《高等警察用語辭典》(1933), 171쪽.

51) 《東亞日報》, 1932년 8월 16일·11월 25일.

평양고등보통학교의 독서회는 1931년 4월 25일 3년생 邊光植을 대표로 金在善·金斗七·金鳳燮·車榮錫·金相賢·金日權·車斗讚·張德燦·金鳳天 등이 조직하였다. 이들은 회합이 있을 때마다 각각 35전씩 각출하여 선전활동비에 쓰고 같은해 8월 1일에도 반전격문을 인쇄·배포하였다. 이 일은 일경들에게 발각되어 구속되었다. 평양고보학생들은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전교생 600여 명이 같은해 11월 11일 항일동맹휴교를 감행하기도 하였다.<sup>52)</sup>

함남 함흥에서는 함흥고등보통학교·농업학교·상업학교·영생고보·영생여고보 등의 학생대표들이 1931년에 학생공동위원회를 결성, 다음해 6월 15일 대대적인 학생반전운동을 전개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일경에게 발각되어 영생고보생 78명, 영생여고생 4명, 함흥고보생 6명, 농업학교생 2명 등이 구속되었다.<sup>53)</sup>

동래고등보통학교의 반전운동은 1931년 7월 초부터 金命突·李致雨·權東洙·金應燦·盧尙道·金永哲·梁泰穆·梁德守 등이 비밀회합을 갖고 회의를 거듭한 끝에 같은달 중순 적기회를 조직, 임원에 이치우(出版)·김명돌(財政)·권동수(組織宣傳)를 선출하고 첫 사업으로 《적색뉴스》를 발간하였다. 그 뒤 9월 초 회의 이름을 ‘반제전위동맹’으로 고쳤으며 김명돌은 별도로 가칭 ‘스프즈단’을 조직하였는바 이것이 동래고보 학생사회과학연구회였다. 이들은 같은해 12월 25일 반전격문 1,300매를 인쇄하여 1932년 1월 1일 부산지구헌병대와 주요공장지대에 이를 살포하였다. 이 활동으로 일경에 구속되어 주모자들은 2년 6개월의 연도를 받게 되었다.<sup>54)</sup>

1932년 황해도 사리원농업학교 독서회는 이 학교 1·2·3·4학년 20여 명이 연초부터 반전을 목표로 독서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던 중 같은해 6월 일경에게 발각되어 회원이 구속되어 주모자 張漢模 등 4명은 예심에 회부되고 나머지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sup>55)</sup>

예산농업학교의 독서회는 이 학교 졸업생과 재학생이 반제반전을 목표로

52) 《東亞日報》, 1931년 11월 12·13·22일.

53) 朝鮮總督府 警務局,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昭和 8년), 103쪽.

《東亞日報》, 1932년 6월 15일.

54) 《東亞日報》, 1932년 5월 29일, 9월 11·15일.

55) 《東亞日報》, 1932년 5월 1·4일, 6월 14일, 7월 2일, 12월 4일, 1933년 2월 10일.

조직하여 활동 중 1932년 12월 일경에게 발각되어 약 30여 명이 검거되었다.<sup>56)</sup> 이 독서회는 이 지역 농촌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 인정되었다.

1933년 중앙고등보통학교 반제동맹은 중앙학교의 항일학생운동의 연결선상에서 이루어진 비밀결사였다.<sup>57)</sup> 즉 1929년 광주학생운동의 영향으로 1930년 동맹휴교를 일으켰으며 1933년 10월에도 맹휴가 발생하였는데, 이 때 3년생 韓東正 등이 중앙반제동맹을 조직, 교내외에서 맹휴를 주도하였다. 1935년 2월 다시 동맹휴교가 일어나 102명의 학생이 검거되고 동시에 반제동맹도 발각, 30여 명의 학생이 별도로 취조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동정 등 8명이 주모자로 예심에 회부되었다.

이상과 같이 비밀결사는 각급 학교에 조직되어 교내에서는 동맹휴학 등을 주도하고 밖으로는 파쇼 군국주의 일본에 대항하는 다방면에 걸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 3) 태평양전쟁하의 학생운동

#### (1) 비밀결사 흑백당의 활동

1940년대 학생들의 항일운동은 동맹휴학이나 집단시위운동의 방법보다는 비밀결사를 통하여 실력행사를 도모코자 한데 그 특징이 있다. 또한 1930년대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사회주의 이념보다는 민족주의 색채가 농후한 학생항일운동이 발전되었다.<sup>58)</sup> 그 대표적인 항일학생운동을 들어본다면, ① 대구사범학교 학생들의 문예부·연구회·茶草黨의 항일운동<sup>59)</sup>, ② 함흥중학·영생중학·영생여고·함흥농업·함흥사범학생들의 함흥학생결사의 항일운동<sup>60)</sup>, ③

56) 《東亞日報》, 1932년 12월 20·25·28일, 1933년 1월 7·22일, 3월 29일, 4월 23일.

57) 《東亞日報》, 1930년 11월 18·23·29일, 1931년 2월 28일, 1933년 11월 8일, 1935년 2월 22일, 3월 26일, 5월 4·14일.

58) 趙東杰, 〈총론〉(《獨立有功者功勳錄》6 學生運動·文化運動, 국가보훈처, 1988), 57쪽.

59)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V, 資料編(1969), 339~365쪽.

광주서중학생의 무등회를 통한 항일운동<sup>61)</sup>, ④ 경북중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黑白黨의 항일운동<sup>62)</sup>, ⑤ 동래중 학생의 조선독립당의 항일운동<sup>63)</sup>, ⑥ 경기중학 학생의 高麗會·槐會의 항일운동<sup>64)</sup> 등이다.

이처럼 비밀결사들은 민족의 독립, 황민화교육반대, 친일파처단 등을 목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한 민족주의적 성격이 농후한 단체였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밀결사는 흑백당이라 할 수 있다. 흑백당은 1942년 4월 5일 경성 광산전문학교생 朱樂元(경북중학 17회 졸업생)의 집인 봉래동에서 경북중학교 17회 졸업생인 李賢相을 비롯한 7명과 중앙학교 졸업생 南相甲 등 8명이 비밀리에 창당한 항일결사였다.<sup>65)</sup>

이 당이 조직되기까지는 1939년 경북중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던 이현상·張宜燦·洪建杓·成益煥·崔高·明義宅·주낙원 등이 항일민족운동에 일신을 바치겠다는 뜻이 모아지면서부터이다. 이들은 시간만 나면 학교 뒷동산 숲 속에 모여 좁게는 일본인교사들의 민족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에 울혈을 터뜨리기도 하고, 넓게는 일제의 식민지 노예교육을 비판하고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현상으로부터 중국 중경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움직임과 광복군의 활약, 미국을 비롯한 해외민족운동가들의 동태를 들으면서 일제에 대한 적개심과 민족운동을 통하여 일제 군부과조를 무너뜨리겠다는 학생으로서의 정의감과 애국심을 갖게 되었다. 이현상이 해외소식에 밝았던 것은 그의 부친 李承浩 때문이었다. 이승호는 독립운동가로서 재동에서 한약방을 경영하면서 민족운동가들과 교제를 맺고 있었다.

한편 이들 학생들에게 민족의식과 민족정신을 불러 넣어준 것은 이 학교에 있었던 한국인교사 金鍾武였다. 김교사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를 졸업

60) 鄭世鉉, 앞의 책, 519~525쪽.

61) 光州學生獨立運動同志會 編, 《光州學生獨立運動史》(國際文化社, 1974), 705~706쪽.

62) 金鎬逸, <1940년대 항일학생운동연구>(《中央史論》 7, 1991).

63) 釜山市, 《釜山略史》(1968), 302~303쪽.

64) 京畿高等學校, 《京畿70年史》(1970), 163~168쪽.

65) 朱樂元, <日帝末 黑白黨 事件의 顛末>(《新東亞》, 1978년 2월호).

하고 경북중학교에 부임하여 동양사와 한문을 담당하였다. 그는 수업시간 중 교실 밖을 살피면서 학생들에게 우리 나라의 역사를 낮은 목소리로 들려주곤 하였다.<sup>66)</sup>

이들 경북중학생들은 다른 학교인 경성사범학교의 金盛權・李慶春, 중앙학교의 남상갑, 경기중학교의 金昌欽 등과 관계를 맺으면서 독서회를 통하여 동지로서의 신의를 다졌다. 1941년 경북중학교를 졸업하고 전문학교에 진학한 이들은 1942년 4월 5일 10시 주낙원의 사랑방에 모여 우선 모임의 명칭 결정에 들어가 노예상태인 암흑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을 때까지 투쟁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있는 흑백당을 당명으로 결정하고, 이어서 선언문과 강령, 부서를 결정하였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sup>67)</sup>

#### 〈선언문(요지)〉

삼천리 금수강산에 단군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조국이 악독한 일제의 잔인 무도한 질곡 속에서 瀕死之境에 이른 현실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여기 조국과 민족을 구하고자 흑백당을 조직한다. 우리는 조국이 광복을 되찾는 그 날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바쳐 모든 방법을 다하여 일제와 투쟁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 강 령

- 一. 본 당원은 조국광복을 위해 身命을 바칠 것을 맹서한다.
- 一. 본 당원은 본당의 조직・이념・행동에 관한 사항을 절대 비밀로 한다.
- 一. 본 당원은 자기의 맡은바 책임을 전력을 다해 완수한다.

#### 부 서

고문 : 한용운・안재홍・김성수

당수 : 이현상, 부당수 : 장의찬, 섭외조직책 : 주낙원・성익환, 행동책 : 명의택・홍건표, 자금책 : 최고・남상갑, 중앙집행위원 : 창당 참석자 전원 (8명)

이처럼 조직된 흑백당은 민족주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당원모집에 나서는

66) 洪建杓, 〈흑백당사건〉(사본, 1964).

67) 朱樂元, 앞의 글.

한편 실천계획과 행동목표를 첫째 일본인 주택가 방화와 일본인 살해, 둘째 친일파 처단으로 결정하였다. 첫번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연합국이 반드시 서울을 폭격할 것이고 폭격이 시작되면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일본인이 밀집해 있는 旭町(중구 남산동 일대)에 방화하여 일본인들을 살해하려 하였다. 두번째 계획은 민족반역자인 친일파 명단을 작성하고 친일파 중 우선 처단하려고 한 인물을 이광수(香山光郎)·하산무(夏山茂)·이승우(梧村昇雨)·최린(佳山麟) 등으로 정하고 이들의 주거지와 동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었다.<sup>68)</sup>

흑백당 중앙집행위원 8명은 조직확대를 위하여 당원 포섭에 나서서 7명의 당원을 확보, 전체 인원이 15명으로 증가되었다. 조직확대에 힘쓰면서 전기한 실천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본인 집단거주지에 방화를 하려면 휘발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행동책인 명의택이 필요한 만큼의 휘발유를 마련하여 자기 집에 은닉하였다. 다음으로 친일민족반역자를 처단하기 위하여 무기구입에 나서 모교인 경북중학교 무기고에서 이현상·홍건표가 3·8식 소총 2자루와 실탄을 훔쳐 삼청동 숲에 감추어 두었다.<sup>69)</sup>

그러나 흑백당의 실천계획에 따른 행동이 옮겨지기도 전에 일부 당원이 체포되면서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1942년 10월 경 보성전문생 김창흠이 충북 괴산경찰서에 체포당하면서 흑백당의 전모가 발각되었기 때문이다.<sup>70)</sup> 김창흠에 이어 홍건표가 체포당하고 전당원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됨에 따라 나머지 당원들은 국내활동이 어려운 것을 인식하고 국외로 탈출, 중경 임시정부로 가서 광복군에 입대,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중국으로 망명길에 올랐다.<sup>71)</sup> 이들은 한만국경을 넘어 만주의 新民에 도착한 인원이 10명이었다. 여기서 임정이 있는 중경을 목표로 북경을 거쳐 가려고 하였으나 이들을 추격한 일경에 의하여 모두 체포당하였다. 그리하여 국내에서 체포된 김창흠·홍건표·남상갑과 함께 종로경찰서에서 신문을 받고, 1944년 4월 대전검사국으로 송치되고 대전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으니 그 형량은

68) 洪建杓, 〈흑백당사건〉(사본, 1964).

69) 金球鉉, 〈犯罪鑑識〉 20(黑白黨事件), (《중앙일보》,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1,120, 1974년 8월 23일).

70) 金球鉉, 위의 글.

71) 朱樂元, 위의 글.

징역 8년 이현상·정의찬, 징역 7년 홍건표·명의택,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 주낙원·성익환, 징역 5년 최고·남상갑·전희숙, 징역 3년 김성근·이경춘·이병림으로, 1945년 8·15 해방이 될 때까지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sup>72)</sup>

## (2) 부산2상·동래중학의 군사훈련 반대항쟁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을 병탄한 후 궁극적으로는 한국민족을 皇民化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 민족을 지배했다. 교육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4차의 <교육령>을 개정하면서 황민화정책을 추진시켰다. 즉 1910년대 헌병경찰에 의한 무단통치기에는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동화교육을 실시하였고, 1920년대 소위 문화정치 시기에는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 내선일체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서는 한반도를 병참기지화하면서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을 개정했다. 이 시기에는 황민화교육에 박차를 가하여 창씨개명·신사참배를 강요하였고, 1940년대 태평양전쟁시기에는 제4차 <조선교육령>을 1943년에 개정하여 전쟁에 대비한 결전교육을 실시하였다.<sup>73)</sup> 더욱이 1940년대 결전교육은 군국주의 국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군사능력의 배양수단이었고 그 실천의 원천이었다. 鍊成과 학도동원을 근간으로 한 제4차 교육령체제는 한국의 학생들에게 군사교육을 강화하고 그들을 전쟁에 투입시키는 제도적 장치였다. 그리하여 조선총독부 학무국내에 연성과를 설치, 각급학교 졸업자와 학생들을 상대로 연성을 실시하였다. 연성은 ‘鍊磨育成’의 뜻으로 한국민족을 완전한 천황의 신민으로 개조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 학교는 군대의 하청기관으로 일본어 교육과 군사교련의 場이었으며, 졸업생에게도 군사예비훈련을 실시키 위하여 연성수업소·청년특별연성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것이다.<sup>74)</sup>

한편 학도동원체제화에 박차를 가하여 조선총독부는 1941년부터 고등교육기관의 수업연한 단축실시로부터 1943년 <학도전시동원체제확립요강>을 통

72) 國家報勳處, <學生運動·文化運動>(《獨立有功者功勳錄》6, 1988), 411~412쪽, 이현상조.

73) 鈴木敬夫, 《朝鮮植民地統治法の研究》(北海道大學圖書刊行會, 1989), 250쪽.

74) 朴慶植, 앞의 책, 374~375쪽.

하여 근로동원의 강화를 확립하였다. 이 때부터 교육의 장인 학교는 노동력 공급의 장으로 변하였고, 근로동원이라는 명목으로 증등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의 학생들을 산업시설에 투입하여 육체노동을 시켰다. 한편 1943년 징병제를 실시, 징병적령제출자가 25만 4,753명이었고 1944년 제1회 징병검사를 받은 청년이 20만 6,057명이나 되었다. 더욱이 일제는 1943년 소위 〈朝鮮人學徒陸軍特別志願兵制度〉를 공포하여 강제로 한국인 학생을 전선에 투입시켰던 것이다.<sup>75)</sup>

이러한 일제에 대항하여 한국학생들은 황민화교육 반대, 식민지정책 반대, 근로동원 반대, 학병거부 등 다방면에 걸쳐 항일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 학생들의 항일운동은 동맹휴학이나 집단시위운동보다는 비밀결사를 통하여 폭력으로 일제를 응징하려고 한 실력행사에 그 특징이 있었으며, 또한 1920~1930년대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사회주의 계통의 운동보다 민족주의 이념을 가진 항일학생운동이 발전되었으며, 그 성과가 두드러지기도 하였다. 이 시기 대표적인 항일학생운동은 1940년 부산지역에서 일어난 부산2상과 동래중학생이 전개한 군사훈련반대시위항쟁(일명 노다이사건)과 1942년 비밀결사 흑백당의 활동, 1944년 평양사단 및 대구 24부대의 학병의거라 할 수 있다.

1940년 11월 21·22일 양일간 경남지방의 중등학교를 동·서군으로 나누어 동군은 부산 제2상업학교·부산중학교·부산 제1상업학교이고, 서군은 동래중학교·마산중학교·진주농업학교·진주중학교로 편성하여 배속장교인 일본군 육군대좌 노다이(乃台)의 지휘 아래 김해 방면에서 모의전투훈련을 했다.<sup>76)</sup>

이 때 노다이대좌는 민족적 차별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일본인학교 학생들은 평지에서 훈련을 받게 하고 한국인 학생들은 산간지대로 우회시켜 과로로 지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하여 종합평가에서 일본인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게되었다. 이어서 같은달 23일 거행된 국방경기대회에서도 당연히 우승교로 지목되던 동래중학과 부산2상업학교를 탈락시키고 부산중학을 우승케 만들었다. 이에 격분한 부산2상·동래중학생들이 폐회식에 우승의 부당

75) 金鎬逸, 앞의 글(1991).

76) 金義煥, 〈日帝下 釜山の 學生抗日獨立運動〉(《尹炳奭教授華甲紀念韓國近代史論叢》, 1990).



을 지적하고 시위에 돌입했다. 양교생 1,000여 명은 구덕산운동장에서 출발하여 악대를 앞세우고 시가행진에 돌입했다. 학생들은 당시 금지되었던 우리 가요인 황성옛터·아리랑·양산도·도라지타령 등을 고창하고 “조선독립만세”, “일본놈 죽여라”, “너희들은 일본으로 돌아가라”라는 구호를 외쳤다.<sup>77)</sup> 양교의 시위대열은 부용동 흑교를 거쳐 부송동 4거리에서 부산제2상업학교 생들은 대청동을 거쳐 중앙동으로 향하고, 동래중학생들은 광복동을 거쳐 중앙동으로 행진, 중앙동에서 합류한 다음 하급생들은 어두워지자 귀가시키고 양교의 4·5학년 약 400여 명이 하오 8시 30분 경 부산터널 입구 오른편에 있었던 노다이 관사에 도착, 터널입구 공사장의 자갈돌을 들고 “노다이 나오나라”, “노다이 죽인다”라고 외치면서 관사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모두 깨트리고 노다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물러나 9시 경 모두 해산하였다.<sup>78)</sup>

그러나 부산 일본헌병대에서는 27일 오후 10시부터 시위에 참가한 학생 검거에 나서서 다음날까지 200여 명의 학생을 체포하고 이들 중 주모자급 학생 15명을 검사국으로 송치했다. 부산지방법원 제1심을 거쳐 대구복심법원의 제2심에서 징역 8개월의 언도를 받고 11명이 옥고를 치렀다. 한편 부산2상과 동래중학의 학교 당국은 이 사건에 관련된 학생들에 대하여 부산2상은 퇴학 12명, 정학 10명, 견책 10명을, 동래중학도 퇴학 9명, 정학 34명을 징계했다.<sup>79)</sup>

부산2상과 동래중학의 한국인 학생들의 거사는 부정과 불의에 분기하여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 항일투쟁사의 또 하나의 의거였다.

### (3) 학병거부항쟁

일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소위 大東亞共榮이라는 미명 아래 자국인뿐만 아니라 식민지 한국인, 괴뢰 만주국의 만주인·몽고인·중국인까지 이 전쟁에 동원시키고 군수물자를 강탈했다. 특히 한반도를 그들의 대륙침략기지로 만들어 북한지방은 중공업지대로, 남한지역은 경공업 및 식

77) 釜山學生事件正史編輯委員會, 《釜山學生事件正史》(1967), 8쪽.

78) 東萊高等學校19期同期會, 《望月回想錄》(1990), 197~217쪽.

79) 釜山學生事件正史編輯委員會, 앞의 책, 8쪽.

량생산기지화하여 전쟁수행에 이바지하게 했다.<sup>80)</sup>

일제는 한국인에 대한 인적 동원을 징병과 징용을 통해 실시하였다. 즉 1943년 5월 징병제실시를 결정하고 1944년부터 징집한다고 공포하였다. 이미 1938년 이후 지원병이라는 명목하에 청년들을 군에 입대시켜 1941년까지 1만여 명을 전선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한편 1943년 10월 일제는 소위 <조선인 학도육군특별지원병제도>를 공포하고 한국인 학생들을 전장으로 내몰려고 하였다. 이 학도지원병은 표면적으로는 자의에 의한 지원이라고 했으나 일제 당국은 학교에 대하여 지원특례를 주는 수법으로 강요하였다.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를 통하여 국내 지도자들의 <학병권유문>을 게재하고 심지어 최남선 등을 파견,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유학생들에게도 학병지원 권유 강연행각을 자행했다.<sup>81)</sup> 이러한 일제의 학병지원제에 대하여 한국 학생들은 학병거부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했으나 군경을 동원한 강력한 제동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43년 11월 20일까지 조선인 학도지원병의 지원마감에 따라 학병적격자 7,200명의 명단이 작성되고, 이중에서 1944년 1월 20일 4,385명이 학업을 포기하고 일본 천황을 위한 전쟁을 위하여 입대하게 되었던 것이다.<sup>82)</sup>

함경남북도·평안남북도 출신의 학병들도 1943년 창설된 평양사단에 입대하게 되었다. 이 사단에서 훈련받는 가운데 학병의거를 단행한 주체는 42보병부대의 학병들이었다. 의거 당시에는 50명 가량이 남아있었는데, 이들은 “일군에게 끌려가 죽기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싸워서 죽음을 이기자”는 결심 속에 집단의를 감행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42부대의 한국인 학병인 金完龍·朴性和·崔正守·全相燁 등은 틈만 있으면 의거 모의를 숙의하였고, 1944년 8월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우선 동지 포섭과 조직강화에 착수하여 행동강령과 부서를 다음과

80) 森田芳夫, 앞의 책, 19쪽.

81) 俞鎮午, <片片夜話> 47(《東亞日報》, 1974년 4월 29일).

82) 입대한 4,385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재학생 959명(적격자 1,000명), 귀성중인 일본 유학생 1,431명(적격자 1,529명), 일본 잔류학생 719명(적격자 1,400명), 9월 단축졸업생 941명(적격자 1,574명), 취직 중 졸업생 335명(적격자 700명)이었다(20同志會中央本部, 《青春輓章》 1, 1972, 289~302쪽).

같이 결정하였다.<sup>83)</sup>

# 〈행동강령〉

- ① 우리는 생명을 바쳐 조국의 독립을 쟁취한다.
- ② 우리는 일체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단결한다.
- ③ 우리는 우리의 조직 명령에 복종한다.
- ④ 우리는 지성과 관용으로 동지애를 굳힌다.

## 부 서

총책 : 김완룡(중앙대학 법학부)      참모장 : 박성화(조도전대학 이공학부)  
참모(작전) : 전상엽(대동공전 채광과)      참모(보급) : 崔泓熙(중앙대학 법학과)  
참모(정보) : 李度洙(궁기고농축산과)      제42대 조직책 : 최정수(동양대학 철학과)

이어서 제47포병부대에서 7명, 43·48·50부대에서 18명을 가입시켜 조직을 확대하고 거사작전도 수립하였으니 평양사단을 폭파하고 부대를 탈출, 한만국경지대와 부진고원 등 산악지대에서 게릴라전을 전개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계획하에 장비는 개인에게 지급된 3·8식 소총 1정, 대검 1개, 사격훈련 때 감추어둔 실탄·의약품·미숫가루 등과 작전에 필요한 지도·야전용 칼·전지·야광 나침반을 준비했고, 각자가 민간복과 자금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거사일을 10월 1일로 정하였다가 11월 1일로 변경하였다.<sup>84)</sup>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거사일을 기다리고 있던 중 한인보조헌병 임○호의 밀고에 의하여 김완룡 등 70여 명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갖은 고문을 받고 〈치안유지법〉 제3조 국제변경을 목적으로 한 국가반란죄로 평양사단 군법회의에 회부, 주도자급 26명은 징역 13년에서 징역 3년의 연도를 받고 복역 중 1945년 8·15 해방으로 영어의 몸에서 자유를 얻었던 것이다.

평양사단의 학병의거와 함께 대구 24부대에서도 학병의거가 일어났다. 1944년 1월 20일 경상남북도 출신 학병 600여 명이 강제 입영되어 훈련을 받던 중 27명만 남고 모두 중국전선으로 출정했다. 남은 27명 중 權赫朝(중

83) 20同志會中央本部, 〈朴性和의 手記〉(위의 책), 53~77쪽.

84) 朴性和, 〈日軍平壤師團의 學生義舉〉(《新東亞》, 1969년 4월호).

양대학생)·文漢雨(연희전문생)·金而鉉(명륜학원) 등이 중심이 되어 의거계획을 세웠으니 그것은 일본군을 살해하고 집단탈출을 감행한다는 것이었다.<sup>85)</sup>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해 8월 8일 김이현·문한우·권혁조·權泰鏞·權重赫·金福顯이 탈출에 성공하였으나 문한우·권혁조·권태용·권중혁 등은 체포되어 문한우·권혁조는 징역 5년, 권태용·권중혁은 징역 4년을 언도 받고 복역 중 해방을 맞이하여 자유의 몸이 되었다.<sup>86)</sup>

〈金鎬逸〉

85) 20同志會中央本部, 〈金而鉉의 手記〉(앞의 책), 30~52쪽.

86) 20同志會中央本部, 〈金而鉉의 手記〉(위의 책), 30~52쪽.